



평화감수당 훈련

여성 평화 아카데미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시 : 2002년 10월 10일 ~ 11월 28일 매주(목) 오후7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시청각실)

평화감수성 훈련

여성평화아카데미



주 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일 시 : 2002년 10월 10일~11월 28일 매주(목) 오후7시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여성평화아카데미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9년에 시작된 여성평화아카데미가 벌써 8회를 맞이하였다.

해를 거듭하며 여성평화교육의 매뉴얼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과 이슈, 평화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역사인식, 여성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사회행동을 성찰하는 일 등의 잣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여성평화아카데미는 군사주의 문화가 팽배한 한반도에 평화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을 통해 사회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 교육은 참가한 여성들의 평화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적 평화자원으로 축적되어 여성 평화지도력을 키워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 교육은 일상의 반평화 형성구조와 평화감수성 형성을 막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조망해보고,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등 구체적 접근방법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감수성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의식을 키워가면서 여성들이 평화 세상을 향한 사회행동의 주체로 서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카니탄에 대한 보복전쟁, 이라크에 대한 전쟁 선포,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 북한의 경제변화를 향한 시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한 여중생의 죽음과 그로 인한 불평등한 SOFA개정운동의 열기 속에서 그 내용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은 전쟁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를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짚어 보았다. 전쟁이, 군사주의문화가 어떻게 일상적으로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며 군사주의에 이용하고 강화하는 지도 살펴보았다.

여성, 전쟁, 세계, 우리 안의 평화감수성의 담론으로 진행된 여성평화아카데미의 자료집을 발간하며 진정한 평화의 실천이 여성들 속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2002. 12.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김현숙 김숙임 심영희

교육위원장 임 희 숙

* 목 차

(강의내용 및 강사)

1강	여중생 죽음과 불평등한 SOFA	 5
	김용한 (미군기지반환공대위 집행위원장)	
2강	전쟁, 그 숨겨진 이데올로기 : 군사주의와 여성	 38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3강	부끄러운 역사를 평화와 화해로 껴안은 여성들	 53
	차미경 (베트남진실위원회 집행위원장)	
4강	아프간의 땅, 여성이기를 부정해야 하는가?	 61
	김영미 (니혼TV PD - 자료 : 제작영상물 상영)	
5강	여성평화의 눈으로 대중문화 틈새 가기	 62
	김현미 (연세대 교수)	
6강	적, 여성, 섹슈얼리티	 67
	김엘리 (평화여성회 정책위원장)	
7강	최근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평화	 83
	박순성 (동국대 교수)	
8강	우리 안의 반공주의를 돌아보다	102
	권혁범 (대전대 교수)	
9강	평화를 위한 대화	113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0강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여성평화운동	130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여중생 죽음과 불평등한 SOFA

김용한 | 미군기지반환공대위 집행위원장 (2002.10.10)

미군정 역사

- 1945. 7. 17 포츠담 선언(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 8. 6~9. 미국,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 8. 9 소련 참전
- 8. 10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조선총독부, 80만 일본인/일본군 신변 보호와 안전 귀환 위해 여운형/
송진우와 행정권 이양 교섭, 결국 여운형 측에 행정권 이양 결정.
여운형, 건준 발족, 정치범 석방, 치안대 조직
- 8. 15 광복/분단/미군정시작
- 8. 16 미국군 선발대 극비리 서울 도착, 조선총독부에 “미군 진주해 올 때까지 모든 체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정식 항복 때 일본 통치 기구 그대로 미군에게 넘겨 줄 것”을 지시
건준치안대가 경찰관서 접수하는 가운데 조선총독부가 행정권이양 거부
일본인 조선군 사령관, “인심을 교란하고 치안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일본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포고령 발표.
- 8. 24 소련군, 포고령 발표
- 9. 2 미국, 소련에 38선 분단 제의. 소련, 동의.
- 9. 2 하지 포고령 1호
- 9. 6 미군 서울 진주
- 9. 7 맥아더 포고령 1호
- 9. 9 미군 진주군사령관 하지와 조선 총독 아베 사이에 항복 조인
맥아더 포고령 2, 3호
- 12. 28 모스크바 3상회의
- 1946. ~ 1947 제1, 2차 미소공동위원회
- 1948. 2. 26 유엔,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결정
- 4. 3 제주 4. 3 항쟁
- 5. 10 북위 38도선 이남 총선거 실시
- 8. 15 미군정 종식/대한민국정부 수립
- 8. 28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미군 상륙에 제한 미군사령관의 포고 1호

(1945년 9월 2일)

남한 민중 각위에게 고향.

미군은 근일 중에 귀국에 상륙하게 되었다. 당 군은 동경에서 금일 일본군이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의해 미군은 연합군 대표로서 상륙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귀국을 민주주의 제도 하에 있게 하고 국민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데 있다.

국가 조직의 개선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안녕 질서에는 큰 혼란과 유혈이 따르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개혁도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장래의 국가 건설을 위해 또 민주주의적 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군은 이상의 목적을 조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민중에 대하여 다음 여러 가지 점에 대해 절실한 원조와 협력을 요망하는 바이다.

민중에 대한 포고 및 제 명령은 현존하는 여러 관청을 통해 공포된다. 연합군 총사령관으로부터의 명령은 여러분을 원조하는 것을 본의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엄숙하게 지키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 불행하게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처벌한다. 각자는 보통 때와 같이 생업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이기주의로 날뛰든가 혹은 일본인 및 미 상륙군에 대한 반란행위, 재산 및 시설 기관의 파괴 등의 경거망동을 하는 행동은 피할 것이며, 평화를 지키고 평상시와 변함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국토 건설을 순조롭게 하고 일상생활의 향상을 꾀하는 소이로 할 것이다.

여러분의 생활에 부자유를 가져오게 하는 명령은 극력 피하기로 한다. 여러분의 충심으로 우리나라는 협력을 갈망하는 바이다.

1945년 9월 2일

제조선 미군사령관 육군중장 존 알 하지

미국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미국 태평양 육군최고사령관 맥아더 포고 제1호, 1945년 9월 7일)

조선인민에게 고향.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자(茲)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 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여러 나라 군대 간에 오래 행해져 왔던 무력 투쟁을 끝나게 하였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려는 연합군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그 인간적·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 인민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조·협력해야 한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방면 미 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여기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軍政)을 펴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 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당한 기능과 업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 소유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하거나 부

동(不同)할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법령·규약·고시·지시·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
기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 육군대장 다글라스 맥아더

미국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

(범죄 또는 법규 위반에 관하여, 1945년 9월 9일)

조선인민에게 고함.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의 안전과 전 지역 내의 공공 안녕 질서 안전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관은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항복문서 조항,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의 권한 하에 발포된 모든 포
고·명령·지령에 위반하는 자, 혹은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의 인민의 재산, 생
명의 안전 또는 보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자, 혹은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법·행정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연합군에 적의 있는 행위를 한 자는 군사 전
법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사형 혹은 그 법정이 결정하는 기타의 처벌을 당한
다.

1945년 9월 9일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
육군대장 다글라스 맥아더

미국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3호

(통화에 관하여, 1945년 9월 9일, 발췌)

조선인민에게 고함.

본관은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총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함.

제1조 법화

- ① 군사적 점령부대에 의하여 발행된 A의 기호가 있는 보조 군용 원 통화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내에서 모든 공사적 원 부채 지불에 관한 법화이다.
- ② 군사 점령부대에 의하여 발행된 A의 기호가 있는 보조 군용 원 통화와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을 제외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내에 현용 법화인 정규 원 통화는 차별 없이 액면대로 통용할 수 있다.

제2조 일본 군용 원

- ③ 일본 제국 정부 육군 혹은 해군이 발행한 모든 군용 및 점령용 통화는 무효 무가치하며, 거래에 이러한 통화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1945년 9월 9일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

육군대장 다글라스 맥아더

북조선 진주 소련군 포고

조선 인민에게

조선 인민이여, 소련 군대와 동맹국 군대는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를 몰아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새로운 조선의 역사의 제1페이지에 불과하다. 화려한 과수원은 인간의 노력과 고심의 결과이다. 이것과 똑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근면한 노력에 의해서만이 달성된다.

일본 통치 하에서 살아왔던 고통의 나날을 되새겨 보라. 토담 위에 올려져 있는 돌맹이까지도 피로운 노력과 피와 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 당신들은 일해 왔던 것인가? 왜놈들은 고대광실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선인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은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노예적인 과거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고뇌에 가득 찬 악몽과 같은 과거는 영원히 가버린 것이다.

조선인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손 안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구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당신들의 것이 되었다.

소련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을 착수하는 데 충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부여했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의 경영주, 상업가 또는 기업인들이여, 왜놈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 등을 회복하라, 새로운 생산 기업을 개시하라, 소련군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의 재산 보호를 확보하고, 그 기업소의 정상적 작업을 보증하는 데 있어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의 노동자들이여, 노력에 의한 영웅심과 창조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인의 훌륭한 민족성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에 의한 조선이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꾀하려는 자만이 조국 조선에 대한 애국자가 되고 충실한 조선인이 되는 것이다.

해방된 인민 만세!

1945년 8월 24일

소련군 사령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제 5 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미 육군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 덕 희

마크 W.클라크

김 일 성

< 참 석 자 >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윌리엄 K.해리스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점을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 부장과 리후락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 사항이 조국 통일을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리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리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6. 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조-일 공동선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문제들에 성의 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 9. 17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

Joint communique between DPRK and US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 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합중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과 미합중국 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 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 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 관계에서 새로운 방약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 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의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 무역 전문가들의 호상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조-미 관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합중국 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번 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 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합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하였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 시기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진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급 상봉 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합중국 쪽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 쪽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 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합중국 인민이 방문 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 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제네바 조-미 핵 기본 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진다.

양측은 핵이 없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1. 양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가. 미합중국 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원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합중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합중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합중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합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나. 1994년 10월 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합중국 대통령의 보장 서한에 의거 미합중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 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한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 일정에 따라 연간 50만 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다.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 서한 접수 즉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 기간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라.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가.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나.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가.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다.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 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나.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 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방 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 계약 체결 시까지, 안전 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다.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1994년 10월 21일

미 합 중 국 수 석 대 표
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

미 합 중 국 본 부 대 사
로 버 트 갈 루 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 석 주

핵보유국의 핵전력 현황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 - 2000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영 국	프 랑 스
I C B M (대륙간탄도미사일 5,500km이상)	개수	550기	756기	35~40기	0	0
	종류	미니트맨III :500 피스키퍼 :50	SS-18:180 SS-19:160 SS-24: 46 SS-25:370 SS-27: 20	CSS-4:15~20 (DF-5) CSS-3/20:10 (DF-4)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2,500~5,499km)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800~2,499km)	개수	0	0	46기	0	0
	종류	-	-	CSS-2:38 (DF-3) CSS-5: 8 (DF-2)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수	432기	412기	12기	48기	?
	종류	트라이던트C-4: 192 트라이던트D-5: 240 (SSBN:18척)	SSN- 8: 60 SSN-18:160 SSN-20: 80 SSN-23:112	CSS-N-3 : 12	트라이던트D-5: 48 (SSBN: 3척)	M-51:? M-45: (SSBN: ?척)
전략폭격기	개수	178대	74대			
	종류	B-2A :17 B-1B :91 B-52H:70	TU-95 :68 TU-160:6			

남북 군사력 비교

1999. 12. 31.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지 상 군		56만여명	69만여명	100만여명	117만여명
		해 군 ¹⁾		6.7만여명		6만여명	
		공 군		6.3만여명		11만여명	
주 요 전 력	지상군	부 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49개 ²⁾		67개 ²⁾	
			여 단 ⁴⁾	19개		78개(포병 30여개 여단 제외)	
		장 비	전 차	2,36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400여대		2,300여대	
			야 포 ⁵⁾	5,180여문		12,500여문	
			헬 기	600여대		-	
	해 군	수상전투함		160여척		430여척	
		지 원 함		20여척		470여척 ⁶⁾	
		잠수함(정)		10여척		90여척 ⁷⁾	
		항 공 기		70여대		-	
	공 군	전 투 기		540여대		870여대	
		특 수 기		40여대			
		지 원 기		230여대		840여대 ⁸⁾	
예 비 전 력(병력)				304만여명 ⁹⁾		748만여명 ¹⁰⁾	

[주]

- 1) 해병대를 해군에 포함
- 2) 해병대 사단 포함
- 3) 미사일 사단(1) 포함
- 4) 보병, 기보, 전차, 특수전, 경비, 해병, 강습 등 기동/전투여단 포함
※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여단 제외
- 5) 야포는 로켓, 유도무기, 다련장, 방사포 포함
- 6) 해상경비정대 소속 해상경비정 170여척 포함
- 7) 잠수정 40여척 포함
- 8) 항공기(헬기)는 공군에서 통합 운용
- 9)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 10)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군위대, 사회안전부 요원 포함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 총 관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총 병 력	1,371,500	1,004,000	약 2,480,000	36,300
예 비	1,303,300	약 20,000,000	1,200,000+	49,900

■ 육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현 역	469,300	348,000	1,830,000	145,900
	예 비	783,900	?	1,000,000	?
사 단(예비)		10(8)	37	80	12
전 차		7,684	15,500	9,300	1,080
경 전 차		6,715	200	1,200	-
정찰전차		113	2,000	-	90
장 갑 차		17,800	26,300	5,500	840
견 인 포		1,593	2,075	14,500	460
자 주 포		2,555	2,636	다 양	310
다련장포		857	900	〃	110
박 격 포		879	254	〃	1,250
대 전 차 유도우기		토 우 8,457 드래곤 24,400 재블린 500	AT계열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680
지대공 미사일		1,737	2,300	11	710
헬 기		4,923	2,300	143	453
항 공 기		249	-	-	10

■ 해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력(예비)	369,800 (23,480)	171,500	230,000	43,800
잠수함(전략)	84(18)	70(21)	71(1)	16
항 공 모 함	12	1	-	-
순 양 함	27	7	-	-
구 축 함	54	17	18	9
프 리 기 트	37	10	35	46
해안초계함	21	112	676	3
소 해 함	26	72	119	34
상 륙 함	42	25	70	6
상 륙 정	202	?	140	-
지 원 함	92	436	160	29
수 송 함	24	-	39	10
전략수송함	86	상선 약 2,800	?	-
예비수송함	142	-	-	-
전 투 기	1,510	114	435	90(PC-3C)
헬 기	506	362	176	100
해병사단	3	1	2(여단)	-

■ 공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력(예비)	361,400 (176,500)	210,000	470,000	45,600
장거리폭격기	208	232	폭격기 320	-
정 찰 기	259	135	290	26
지 휘 기	40	-	-	-
전 투 기	2,598	1,455	3,000	363
수 송 기	1,051	약 280	425	43
급 유 기	606	20	?	-
훈 련 기	1,217	1,000	200	170
헬 기	216	-	210	-
민 간 예비	630	1,500	?	-

※자료:The Military Balance 1998-1999

세계무기수출입 현황

1. 수출현황

(단위:US 백만불, 1990년 불변가)

수출국 및 순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4-1998
1994-1998	1993-1997						98
1 미국	1	9,844	9,580	9,712	12,404	12,342	53,882
2 러시아	2	1,155	3,271	3,602	2,956	1,276	12,260
3 영국	5	756	806	1,924	3,284	3,815	10,585
4 독일	3	1,494	1,708	1,800	3,238	673	8,913
5 중국	4	2,637	1,425	1,399	686	1,064	7,211
6 네덜란드	6	731	849	751	338	157	2,826
7 이탈리아	7	495	378	414	551	506	2,344
8 우크라이나	8	306	330	366	442	298	1,742
9 캐나다	10	189	192	195	516	449	1,541
10 스페인	9	365	436	239	137	217	1,394
11 이스라엘	11	275	111	99	637	221	1,343
12 체코	12	115	206	257	292	147	1,017
13 벨라루스	13	378	188	132	30	16	744
14 벨기에	14	8	24	129	516	16	693
15 스웨덴	16	20	296	144	89	51	600
16 모로코	17	63	180	155	51	136	585
17 폴란드	15	165	-	-	392	-	557
18 호주	20	131	184	65	20	1	401
19 스위스	19	24	22	15	318	3	382
20 노르웨이	18	70	75	122	62	35	364
21 덴마크	21	186	54	9	56	2	307
22 슬로바키아	22	230	-	3	-	-	233
23 아제르바이잔	23	28	85	48	44	-	205
24 우즈베키스탄	63	-	-	-	-	170	170
25 브라질	25	38	40	28	28	-	134
26 싱가포르	31	11	2	-	75	41	129
27 북한	24	48	48	22	-	-	118
28 인도네시아	33	25	38	-	-	52	115
29 아타르	26	51	15	-	44	-	110
30 카타르	29	8	25	20	27	30	110
31 한국	35	-	-	30	52	18	100
기타*		226	298	303	131	209	1,167
합계		20,073	20,861	21,984	27,416	21,944	112,278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억달러 미만을 수출한 국가들

(출처:SIPRI Yearbook, 1999)

2. 수입현황

(단위:US 백만불, 1990년 불변가)

수입국 및 순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4-1998
1994-1998		1993-1997						
1	대 만	2	731	1,162	1,451	5,311	4,656	13,311
2	사우디아라비아	1	1,298	1,249	1,961	3,292	1,948	9,748
3	터 키	3	1,386	1,327	1,132	1,394	1,376	6,615
4	이 집 트	4	1,926	1,645	940	931	440	5,882
5	한 국	5	642	1,553	1,589	731	656	5,171
6	그 리 스	7	1,172	943	241	832	1,566	4,754
7	인 도	8	497	932	988	1,266	466	4,149
8	일 본	6	678	948	624	662	1,181	4,093
9	아랍에미리트	11	629	442	600	840	756	3,267
10	타 일 랜 드	12	758	628	555	1,128	63	3,132
11	쿠 웨 이 트	10	49	974	1,338	418	228	3,007
12	말 레 이 시 아	15	453	1,143	200	780	59	2,635
13	파 키 스 탄	14	683	242	552	614	525	2,616
14	중 국	9	112	427	1,115	834	104	2,592
15	미 국	13	711	459	431	696	223	2,520
16	이 스 라 엘	20	796	229	73	46	1,285	2,429
17	스 페 인	18	646	395	441	230	402	2,114
18	핀 란 드	19	196	162	581	439	647	2,025
19	싱 가 포 르 아	26	187	232	538	123	685	1,765
20	인 도 네 시 아	21	600	359	547	141	66	1,713
21	브 라 질	23	236	236	491	437	196	1,596
22	스 위 스	31	114	106	199	400	441	1,260
23	칠 레	25	151	537	223	194	103	1,208
24	이 란	16	348	243	537	24	24	1,176
25	이 탈 리 아	24	131	187	241	552	4	1,115
26	카 타 르	36	14	15	58	553	389	1,029
27	독 일	17	596	130	110	18	132	986
28	오 만	30	201	175	347	158	17	898
29	캐 나 다	27	432	177	164	86	33	892
30	페 루	29	142	97	182	469	-	890
31	영 국	44	38	93	216	88	362	797
32	베 트 남	37	-	277	246	96	168	787
33	호 주	28	302	71	149	24	189	735
34	멕 시 코	40	65	65	63	230	306	729
35	스 웨 덴	35	252	84	47	258	87	728
36	노 르 웨 이	34	57	102	200	186	170	715
37	네 달 란 드	38	140	47	187	99	242	715

수입국 및 순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4-1998
1994-1998		1993-1997						
38	미 안 마	32	-	223	93	243	131	690
39	카자흐스탄	39	-	162	219	166	-	547
40	알 제 리	41	161	332	5	29	-	527
41	아르헨티나	47	148	85	44	98	110	485
42	아르메니아	45	310	51	106	-	-	467
43	포 르 투 갈	33	431	15	3	14	-	463
44	덴 마 크	49	66	129	53	74	141	463
45	오스트리아	54	56	37	14	169	177	453
46	프 랑 스	55	3	41	30	160	210	444
47	콜 롬 비 아	50	39	87	39	160	119	444
48	뉴 질 랜 드	46	16	4	18	349	17	404
49	모 로 코	43	129	40	89	143	-	401
50	사이프러스	48	61	29	177	110	18	395
51	바 레 인	51	14	26	225	74	9	348
52	요 르 단	64	-	24	43	104	164	335
53	헝 가 리	22	4	67	125	72	58	326
54	스 리 랑 카	50	56	60	158	42	40	356
55	슬로바키아	41	35	252	35	-	-	322
56	폴 란 드	58	6	154	114	-	-	274
57	필 리 핀	56	109	32	30	54	47	272
58	방글라데시	57	89	126	4	24	-	243
59	예멘 남부반군	62	196	-	-	-	-	196
60	앙 골 라	63	96	1	10	3	84	194
61	크로아티아	60	57	86	2	37	-	182
62	튀 니 지 아	64	21	58	60	40	1	180
63	벨 기 예	59	64	28	2	34	34	162
64	불 가 리 아	65	1	-	51	77	16	145
65	예 멘	67	-	142	-	-	-	142
66	시 리 아	53	63	43	21	-	-	127
67	레 바논	66	13	59	27	6	17	122
68	에리트레아	75	16	1	30	48	27	122
69	루 마 니 아	73	43	1	35	12	20	111
70	캄 보 디 아	72	64	-	34	6	4	108
71	남아프리카	68	19	38	51	20	-	128
	기 타*		334	342	398	512	241	1,827
합 계			20,07 3	20,86 1	21,98 4	27,41 6	21,94 4	112,278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억 달러 미만을 수입한 국가 및 비 국가 단체들
(출처:SIPRI Yearbook, 1999)

북한 연도별 군사비 규모(1991~2000)

()내는 북한 공식발표 군사비, (단위: 억\$)

연 도	G N P (한국은행)	총 예 산 (북한발표)	군 사 비	GNP 대 군사비 비율(%)	총예산 대 군사비 비율(%)	환 율 (미1불:북한원)
1991	229	171.7	51.3(20.8)	22.4	29.9(12.1)	2.15
1992	211	184.5	55.4(21.0)	26.3	30(11.4)	2.13
1993	205	187.2	56.2(21.5)	27.2	30(11.4)	2.15
1994	212	191.9	57.6(21.9)	27.2	30(11.5)	2.16
1995	223	208.2	63.0	27	30	2.05
1996	214	?	57.8	27	?	2.14
1997	177	91.0	47.8	27	52	2.16
1998	126	91.0	47.8(13.3)	37.9	52(14.6)	2.20
1999	158	92.3	47.8(13.5)	30	51(14.6)	2.17
2000	?	93.6	45~50(13.6)	?	48~53(14.5)	2.18

※1995~1997년도 군사비 규모는 GNP의 평균 27%, 1998년도는 총예산의 평균 52%를 적용한 잠정 추정치임

대한민국 연도별 군사비 규모(1996~2001)

1996년도

1. 일반회계(단위: 억 원)

구분	1995	1996	증감	증감률(%)
운영유지비	7조 8,477	8조 7,768	9,291	11.8
방위력개선비	3조 2,267	3조 4,666	2,399	7.4
국방비계	11조 744	12조 2,434	1조 1,690	10.6

2. 특별회계 (군인연금 9,208억 원, 국유재산관리 2,328억 원)

1997년도

1. 일반회계(단위: 억 원)

구분	1996	1997	증감	증감률(%)
운영유지비	8조 8,126	9조 8,071	9,945	11.3
방위력 개선비	3조 4,308	3조 9,794	5,486	16.0
국방비계	12조 2,434	13조 7,865	1조 5,431	12.6

2. 특별회계(군인연금 3,103억 원, 국유재산관리 3,103억 원)

1998년도

1. 일반회계(단위: 억 원)

구분	방위비		국방비		형무행정비		전·통경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액	15조 2,457	14조 3,755	14조 6,275	13조 8,000	1,702	1,590	4,480	4,165
구성비	100%	100%	96.0%	96.0%	1.1%	1.1%	2.9%	2.9%

추가경정(단위: 억 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7 예산대비		증감	
		당초예산	추경예산		%	증	감
국방비	13조 7,865	14조 6,275	13조 8,000	135	0.1	△ 8,275	△ 5.7
방위력개선비	3조 9,794	4조 2,886	4조 802	1,008	2.5	△ 2,084	△ 4.9
운영유지비	9조 8,071	10조 3,389	9조 7,198	△ 873	△ 0.9	△ 6,191	△ 6.0
·인력운영비	6조 3,366	6조 6,184	6조 2,529	△ 837	△ 1.3	△ 3,665	△ 5.5
장비유지비	1조 3,203	1조 4,358	1조 5,127	1,924	14.6	769	5.4
·부대운영비	9,597	1조 981	1조 110	513	5.3	△ 871	△ 7.9
·시설및기타	1조 1,905	1조 1,866	9,432	△ 2,473	△ 20.8	△ 2,434	△ 20.5

2. 특별회계(군인연금 1조 280억 원, 추경 329억 원 감액 9,951억 원, 국유재산관리 2,537억 원, 추경 편성 시 385억원 감액 2,152억 원)

1999년도

1. 일반회계(단위: 억원)

구 분	1998 예 산 (%)	1999 예 산 (%)	증 감 (%)
국 방 비	13조 8,000 (100.0)	13조 7,490 (100.0)	△510 (△0.4)
방위력 개선	4조 802 (29.6)	4조 1,403 (30.1)	601 (1.5)
운영유지비	9조 7,198 (70.4)	9조 6,087 (69.9)	△1,111 (△1.1)
인 건 비	5조 2,903 (38.3)	5조 604 (36.8)	△2,299 (△4.3)

2. 특별회계(군인연금 1조 130억 원, 국유재산관리 2,879억 원)

2000년도

1. 일반회계(단위: 억원)

구 분	1999 예산	구성비	2000 예산	구성비	증 감	%
국방비	13조 7,490	100.0	14조 4,390	100.0	6,900	5.0
투자비	5조 2,304	38.0	5조 3,437	37.0	1,133	2.2
경상운영비	8조 5,186	62.0	9조 953	63.0	5,767	6.8
인건비	5조 298	36.6	5조 5,609	38.5	5,311	10.6
사업비	3조 4,888	25.4	3조 5,344	24.5	456	1.3

2. 특별회계(군인연금 1조 593억원, 국유재산관리 2,414억원, 책임운영기관 185억원)

2001년도

1. 일반회계(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구성비	2001년	구성비	증감	비율(%)
계	14조4,774	100(%)	15조 3,884	100(%)	9,110	6.3
전력투자비	5조 3,437	36.9	5조 2,141	33.9	△1,296	△2.4
경상운영비	9조 1,337	63.1	10조 1,743	66.1	1조 406	11.4
인건비	5조 5,512	38.3	6조 4,822	42.1	9,310	16.8
사업비	3조 5,825	124.8	3조 6,921	24.0	1,096	3.1

<기타 참고 자료>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 61년 7월 체결

유효기간 : “본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다. 단 어느 일방 국가도 파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

- 95년 8월 러시아 ‘사문화’ 선언

- 96년 9월 폐기

■ 소방관 • 방화범의 비유

■ 고 • 고 • 새의 비유

■ KATUSA 와 USATKA 이야기

■ “방견(番犬)”과 “세파트” 그리고 상전

■ “도둑과 장물아비” 이야기

■ “경계와 작전” 이야기

2

군사주의와 여성

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 한국현대사 (2002.10.17)

1. 들어가는 말

-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 왜 여성들이 군대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나?
- 최근 이대 총학생회에 대한 사이버 테러
- 군 가산점 논쟁 당시의 사이버 테러
- 월장 사태
-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 30여 년의 군사독재: 대통령만 민간인 출신이 된다고 군사독재 체제가 바뀌는 것은 아님: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의 지속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군사주의의 여독
- 군사주의는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 일상생활에서 군사주의의 영향과 여성

2. 병영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 역사적 배경
- 조선시대: 전통적으로 문(文)을 중시: 군사력 육성에 힘을 쏟지 않음
- 대한제국기: 부국강병에 대한 소망: 그러나 실현되지 못함
-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징병제 실시
외국의 지배 하에 징병제가 실시된 특이한 사례
- 대한민국 건국: 징병제의 도입과 폐지
- 한국전쟁
- 국민방위군 사건
- 한국전쟁 종전과 군의 팽창: 60만 대군
- 한국현대사에서 왜 군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 감군 압력
- 5·16 군사반란
- 베트남 파병과 군사주의의 확산
- 1968년 1·21사태 이후의 변화: 예비군 창설, 군복무기간 연장, 주민등록증

제도 / 3선개헌 /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군사교육 실시 / 주한미군 철수

- 병영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만주국과의 비교

3. 징병제의 문제점

- 근대국가의 출현과 징병제도의 의의
- 징병제도의 한국적 특수성
- 현행 부분징병제의 문제점
 - 형평성: 국민개병제에서 빈민개병제로 전략
 - 사병 인권
 - 사병 처우: 월급 문제 / 후생
 - 인력 관리의 효율성
- 현행 징병제의 기능: 국방력 충원기능
훈육기관으로서의 기능
- 모병제의 가능성과 문제점

4. 병역비리

- 노블리스 오블리제?
- 전통사회에서 엘리트와 병역의무 / 서구와의 비교
- 1950년대의 병역기피
 - 병역기피와 사립대학 비리
- 1960년대의 병역기피
- 1970년대 이후의 구조적 문제점: 인구자원의 증가와 복무기간 연장: 인력이 넘쳐나게 됨: 정부는 이 인력을 각종 특례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해결
 - 방위병 제도 / 전투경찰 제도
 - 병역특례의 확대: 처음에는 방위산업체: 현재 일반제조업까지 확대
 - 전문연구요원 등 각종 특례
- 박정희 시기: 특수층 자제들에 대한 특별관리
- 1980년대: 석사장교 제도: 특수층 자제들의 합법적인 병역면제 통로: 1990년대 대학원 입학자들을 마지막으로 이 제도 폐지: 특수층 자제들의 군대 빼먹기 심각해짐
- 현재 병역비리 문제의 본질은?
- 병역비리의 해결책은?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 신자들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어 옴

-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된 보편적인 문제
 - 사상의 자유와 비전향 장기수
 - 양심의 자유와 여호와의 증인
- 이 두 집단은 국가주의, 반공주의, 군사주의 하에서 가장 철저히 박해를 받아 온 집단
- 1980년대 이후 치열한 민주화운동: 그러나 단 한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만들어 내지 못함: 왜? 그리고 그 의미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40여 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처럼 집요하게,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한국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나라는 없음
- 2001년 초 『한겨레21』 보도 이후의 상황 전개
- 불교신자 오태양 씨의 선언
- 법원의 태도 변화
- 유호근, 임치윤, 나동혁 씨의 비종교적 양심에 따른 선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세 가지 반대 입장에 대한 검토
 - 1) 국방부 등 안보논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주면 누가 군대가겠나?
 -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개선해야: 형평성, 인권, 처우, 복무기간
 - 2) 한기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이다!
 - 서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역사는 곧 기독교 평화주의의 역사
 - 왜 한국의 기독교는 국가주의, 군사주의와 밀착되었는가?
 - 근대국가에서의 정교분리 원칙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특정종교에 가해진 국가권력의 부당한 박해를 거두는 것
 - 3) 일반 예비역: 군대도 안갔다 온 것들이...
 - 예비역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점
 - 이유있는 분노, 잘못된 방향
- 대체복무제도란?

6. 맺음말: 여성과 군사주의

-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않고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
 - 참전군인의 찢겨진 삶 / 참전군인 아내의 찢겨진 삶
- 여성들도 군사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 군대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사이트
- 군대갔다 온 남자들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의식
- 전쟁이나 군대, 남성성에 대한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접근 필요
- 군사주의를 해체해야 민주주의와 평화가 가능

<참고 자료>

그들은 왜 말뚝을 안 박았을까

군대를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 아직도 요원한 군사문화로부터의 해방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무렵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은 5.17. 우리는 연이어 이틀을 군사쿠데타의 망령 속에서 보내야 한다. 5.16이 일어난 1961년부터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까지 우리는 장장 40여년을 군부독재 아래 살아왔다.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만, 과연 이 땅에서 군부독재의 잔재는 청산되었는가? 과연 군부독재와 징병제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돼온 군사문화는 사라져가고 있는가? 불행히도 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군사독재의 잔재는 이 땅에서 대단히 안녕하시다. 아니, 잔재, 즉 찌꺼기가 아니라 몸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공동여당의 한축을 이루는 자민련의 실질적 소유자인 5.16의 핵심인물은 불사조처럼 살아남아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란의 동료들과 함께 어디서 이 날을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70년대, 수많은 장교들의 미국 유학

최근 <한겨레21>의 지면을 뜨겁게 달군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서 3년여의 도피생활 끝에 마침내 검거된 박노항의 병역비리에 이르기까지 군대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완의 혁명이 돼버린 1960년의 4월민중항쟁과 이듬해의 군사쿠데타 이래 30여년간 한국현대정치사는 군부와 학생의 격돌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사회운동 세력이 파괴된 이남에서 학생들은 유일하게 조직된 잠재적 정치세력이었다. 지식인이 정치를 담당하는 오랜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역할은 학생 자신들에 의해서나 사회에 의해서나

당연한 것으로 용인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학생운동이 급격히 퇴조한 것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학생들이 점차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덜 갖게 된 것 등의 내외적 요인과 아울러, 그동안 학생들이 비정상적으로 대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중운동의 각 부문이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군부가 한국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제3세계 일반에서 군부독재의 출현이라는 일반적 현상과 아울러 분단과 전쟁,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이다.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로 처음 출발할 때 6천명에 불과했던 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5만명,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8만여명으로 급속히 팽창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군은 25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정작 지금과 같은 60만명이 넘는 대군으로 성장한 것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이다. 이런 방대한 군은 1950년대에는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1980년대 후반까지 30%가량을 할당받아 물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다른 어떤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렸다.

한국에서 군이 급성장하여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누렸던 것은 비단 무력을 장악하고, 무제한의 물질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려시대 이래의 상문천무(尙文賤武)라는 문인 우위의 전통을 지닌 유교문화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 또는 학생운동 세력은 군인들을 무식한 집단으로 알잡아왔다. 1970년대 지식인들의 박정희에 대한 반감의 상당 부분도 그가 가난한 농민 출신의 군인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 장교집단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중 하나였다. 1953년부터 1966년까지 해외유학인정 선발시험을 통과해 해외로 유학한 사람은 모두 7398명으로, 그중 86%인 6368명이 미국으로 유학했다. 그러나 이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한국군 장교는 1950년대에만 무려 9천여명이 미국의 각종 군사학교에 파견되어 교육받고 돌아왔다. 물론 장교의 미국 연수기간이 일반 유학생들의 유학기간에 비해 짧았다고는 하지만, 군은 일반사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해외유학 경험자들을 보유했다. 또 사회에 재교육 기관이 거의 없던 시절 군은 육군대학, 국방대학원, 보병학교, 공병학교, 통신학교 등등의 방대한 자체 교육기관을 갖춘 유일한 사회집단이었다. 군은 또 정밀한 무기를 다루고, 최첨단의 통신과 수송수단 장악했을 뿐 아니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고도의 행정관리 체계와 기술을 보유했다. 한국사회에서 조직관리와 경영학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집단도 기업보다 군이었다.

한국군이 광복군을 계승했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군부가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였다. 미국이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가며 직접 육성한 기관은 군밖에 없다. 육군사관학교의 모태가 군사영어학교라는 사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수많은 장교들의 미국 유학은 한국군과 미국간의 심상치 않은 관계의 한 증거일 뿐이다. 특히 군은 처음에는 유엔군 사령부,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중진 국회의원들이 주한미대사관의 서기관급하고도 밥을 같이 먹지 못해 안달하던 것에 비하면, 고위장교 집단은 아주 안정적인 대미 접촉통로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군부는 미국문화 도입의 중요한 창구이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문화의 유입에서 기지촌이 저급문화 유입의 통로였다면 군은 중급 내지는 고급문화 유입의 통로로 기능했다.

사관학교라는 특수한 교육경험을 공유하면서 선후배간의 관계로 얽혀 있는 장교들의 응집력은 한국사회에서 다른 집단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응집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무제한의 물자와 인력을 사용하고, 무장력을 갖추었으며, 게다가 미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군이 한국에서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60만 대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군에는 몇 가지 감추고 싶은 기억, 또는 현실이 있다. 짧은 지면에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 한국군의 뿌리가 일본군과 괴뢰 만주군이었다는 점, 한국전쟁 당시 일패도지하여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었다는 점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경찰과 함께 군이 친일 인맥이 고스란히 보존된 집단이라는 것이야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군의 친일인맥을 들춰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박정희 시절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에 일본 육사나 만주군관학교 출신 등 확실한 친일경력자보다 당시 일반적으로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인식되던 학병 출신들이 많이 앉힌 것도 군의 친일 색채를 조금이나마 열게 해보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1990년대 들어 군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마치 한국군이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전쟁기념사업회가 ‘군의 정통성’이라는 부제를 달아 펴낸 <현대사 속의 국군>이란 책이 그 한 예이다. 광복군 출신들 중 군에 투신한 사람이 상당수 되지만, 한국군에서 이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일본군, 만

주군 출신에 밀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광복군이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여 중국군으로부터 되찾은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은 미군에게 맡긴 지 50년이 넘도록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군이 광복군의 맥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애편지’ 국방장관의 여유는...

한국군의 또다른 악몽은 한국전쟁 당시 일패도지하여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불패의 군대라던 미군도 한국전쟁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북과 가장 어린 나라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맺었다. 이것이 베트남에서의 패배라는 더 큰 악몽에 묻힌 다음에도 두고두고 상처가 되어 미 군부의 이북에 대한 적개심의 원천이 되고 있듯이, 한국군에게도 한국전쟁 초기의 악몽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주월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당시 만약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베트남으로 빼갈 것이고,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이북이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파병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에서조차 이북에 크게 뒤져 있던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난 수십년간 안보, 안보를 외치면서 국가예산을 물쓰듯 써놓고, 경제력에서 이북의 25배 규모에 이르렀다는 오늘까지도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린다 김 사건에서 단연 화제는 국방장관이던 양반이 린다 김에게 보낸 연애편지였다. 한 여자 정신과 의사는 마초사회 중 마초사회인 군에서 공군 출신이란 약점을 안고 합참의장에 이어 국방장관에 오른 이양호씨의 외로운 심리가 린다 김이라는 한국사회와는 다소 이질적인 여인에게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속마음을 토로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개인 심리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방장관이라는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집무실에서 연애편지를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을 수 있게 만든 원인은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통관료’와 군사문화의 해게모니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5월 계엄령하의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이 탄 버스가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어 많은 국회의원이 국제공산당과 연루되었다는 상투적인 누명을 쓰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이 사건으로 정국은 극한대치 상황에 빠졌다. 일치단결하여 전쟁을 수행해도 힘이 부칠 판에 어떻게 해서 이승만은 이런 폭거를 감행할 수 있었고, 야당은 또 이에 맞서 박터지게 싸울 수 있었을까? 그러고도 망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다 미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직전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론을 주장했을 때- 당시 인구규모로 본다면 오늘날의 60만 대군에 필적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왜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조공제(朝貢制)라는 중국적 세계 질서 속에 조선이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믿고 기댈 곳이 있을 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는 형성될 수 없는 법이다. 선살이 넘은 대한민국 국군이 진정한 성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군 수뇌부가 사춘기 소년 같은 연애편지를 외국 로비스트에게 보내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국의 로비스트는 주적이 아니니까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 미군의 그늘 아래 있는 한 대한민국 국군은 진짜 강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뿐 아니라 군이 자각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군사문화의 흔적은 도처에 널려 있고, 군사독재정권은 물러났지만 아직도 그 잔재는 전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있으면 신문에 프로필이 실리는데 거기 자주 등장하는 말에 ‘정통 관료’라는 것이 있다. ‘엘리트 관료’란 말은 이해가 가지만 관료면 관료지 ‘정통 관료’란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참 이상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도 한국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유신 말기에 장교의 공급과잉과 진급체계가 군 내부의 큰 불만으로 대두되자 박정희는 대위급에서 전역희망자를 받아서 행정부처의 사무관으로 임명했다. 이른바 군화 신고 고급공무원이 된 유신사무관이다. 당당히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 바로 ‘정통 관료’이다.

‘정통 관료’라는 말이 공무원사회에 국한된 말이라면, 한국사회 전반에서 군사문화의 막강한 헤게모니를 대변하는 말은 “너, 군대 갔다 왔어?” 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도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장교를 놓고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출세를 위한 사다리였다. 가난한 농촌 청년이나 북에서 월남하여 남쪽에 이렇다할 기반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은 군대를 통해 신분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병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일제의 강점과 전

쟁의 참화를 겪은 대다수의 농촌 청년들은 문맹이었고, 전근대적인 인습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우선 글을 배울 수 있고 자동차, 무기, 통신장비 등 기계문명을 비로소 접하게 된다. 단체생활을 통해서 규율과 협동, 복종을 배우고 질병들을 거느리면서 나름대로 통솔력과 지도력, 사람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된다. 또 1960년대 초반에는 제대 군인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니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 오니 그런 말이 생길 법도 했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이지, 대학교육이 일반화 되어 고등학교 중퇴만 되어도 군대에 가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정병제,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 인격과 인권을 차압당한 채 군대생활을 하다가 제대하여 이를 되찾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천만에 말씀이다. 사람구실을 못하는 자가 군대 가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군대에 가서 ‘군인’, 그것도 인격을 차압당한 졸병이 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사병으로서 수행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군대생활이 신성했냐고? 이보다 더 썰렁한 개그는 없을 것이다. “너, 군대 갔다 왔어?” 라고 물으며 군사문화를 확산하는 장교 출신들에게 반문해 보자. “당신, 사병생활 해봤나?” 고. 군대에서 가장 큰 욕이 “말뚝 박아라” 이고, 제대하면서 군대생활한 동네를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를 흔쾌히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민주사회의 표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는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대한 훈육장으로서의 병영과 그 기반으로서의 징병제를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만 민간인 출신이 된다고 군부독재의 잔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 시대에 맞는 군의 역할과 규모, 위상, 그리고 군사문화의 청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어찌 예비군 마치고 민방위가 되어서까지 아직도 가끔 군대 꿈을 꾸고 찻찻하게 일어나는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일까?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신성한 국방의무’는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었나

우리 사회는 60만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지난 50년간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의 희생을 강요했다. 한국에서는 1961년 박정희의 군사 반란 이래 30여년간 군사독재정권이 유지돼왔다. 1990년대 들어와 민간정치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군사독재는 종식되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여독은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군사독재의 여독을 제거하고, 한국사회를 지배 해온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청산하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개항 이후 징병제 처음 소개

세계사에서 징병제가 수립되는 과정은 곧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중세의 군주는 봉건계급의 군사적 독점을 파괴하고자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군대를 사게 되었다. 군주가 봉건적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과정은 사실상 중세를 유지해온 정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재원이 확대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군주는 상비용병군을 거처서 상비왕군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프랑스 혁명과 같은 정치·사회적 변화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국민군대가 등장하게 된다. 프랑스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국민군대를 형성한 성과는 나폴레옹의 유럽 석권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시민계급과 농민계급에 많은 정치적 양보를 하면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도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에서 징병제도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참정권 등 시민적 권리의 확대과정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징병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개항 이후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에 의해서였다. 홍영식, 박정양, 어윤중 등 뒷날 개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조사들은 국민개병제에 기반한 일본의 징병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를 고종에게 보고했다. 특히 어윤중은 양반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시행하여 상비군을 확보함으로써 강병

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1894년 12월에 반포된 ‘홍범14조’ 중 제12조에서는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라고 징병제의 시행을 예고하였다. 이렇게 징병제의 실시가 예고된 것은 당시 갑오경장을 주도한 유길준 등 개화파 관료들이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개화파 관료들과는 달리 고종은 징병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사력의 존재이유를 국토방위보다는 왕권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았던 고종은 용병제로 모병한 병사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동학농민전쟁 등을 거치면서 민(民)을 극도로 불신하게 된 고종으로서는 농민층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징병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태평양전쟁과 함께 도입

고종은 민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 수립시 청나라에서 일어난 의화단의 난으로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한때 징병제를 검토하게 된다. 고종은 1903년 3월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칙을 반포하였다. 고종이 추진하려 한 징병제는 국민개병적 성격을 지닌 징병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병농일치제의 부활이었다. 군주나 국가에 의한 막대한 인적·물적인 자원 동원을 요하는 징병제도의 경우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자원제공자들의 동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고종이 생각한 병농일치의 징병제는 근대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에 징병제는 끝내 실시되지 못하였다. 징병제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국권을 수호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지만, 당시에는 군주와 지배층의 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이외에도 열악한 국가재정, 호적제도의 미비,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의 한계, 국민교육의 부재 등 징병제의 실시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었다.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은 그 강령과 정책을 통해 징병제의 실시를 예고했다.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국권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던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대부분은 당연히 전 민족적 총동원에 기초한 독립전쟁을 추구했다. 또 이들은 독립을 쟁취한 뒤에 세울 국가가 부국강병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19일자로 채택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병역에 복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임시정부는 같은 해 12월18일 제정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통해 “만 20살 이상 만 40살 이하의 장성한 남자로 징병령에 의하

야 정모된 자”를 중심으로 상비병을 편성한다고 규정하여 징병제도의 실시를 분명히 했다. 임시정부가 추진한 징병제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시행될 수는 없었다.

이 땅에서 징병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민족 지배하였던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였다. 일제는 1938년 2월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전반적인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가 지원병제도를 도입한 것은 병력자원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조선청년들을 ‘황군’에 복무케 함으로써 황국의식을 주입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일제는 당시 지원병제를 실시하면서 징병제의 실시는 의무교육, 즉 ‘황민화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나서 한 세대 이상이 지나야 가능한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의도와 달리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병력자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자 일제는 1942년 5월8일 각의의 결정을 통해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에 대한 징병제의 실시가 내선일체의 궁극적인 도달점이자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징병제가 예상보다 빨리 돌연히 실시된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한국전쟁, 무자비한 병력 동원

일제는 조선인을 징집하면서 조선인들이 ‘천황폐하’의 ‘황군’에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무한한 영광이자 특권이며,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반도 동포’들이 ‘내지(内地=일본) 동포’들과 나란히 지도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런 허황된 논리 이외에 실질적인 징병 실시의 대가는 주어지지 않았다. 일부 친일적인 조선인들은 이 제도를 징병제의 실시를 통해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완성된다면서 조선인들의 참정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컨대 일제가 강제한 징병제에는 조선인들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에 잠시 실시되었던 징병제는 이남 단독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6일, 전문 8장81조 부칙으로 구성된 병역법(법률 제41호)의 공포를 통해 부활했다. 이 법에 따른 첫 징병검사는 1950년 1월6일에 전국적으

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징병검사를 마지막으로 징병제는 폐지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정원을 10만명으로 동결해두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만일 이승만에게 국경경비와 국내 치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병력 이외에 더 많은 병력을 쥐어줄 경우 이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가 없이는 군대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군 정원동결정책 때문에 1950년 3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채택했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국군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국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여 부대를 수습했을 때 병력손실은 무려 45%에 달했기 때문에 막대한 병력 소요가 발생했다. 군이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였다. 당시 정부는 병역법과 임시 법령조치에 따라 제2국민병을 소집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자 가두모집, 가택수색 등 강제징집과 소집을 통해 병력을 보충했다. 가두모집이란 실제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입대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길 가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잡아가는 것이고, 가택수색이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수색하여 잡아가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크게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21일 법률 제172호로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제정하여 청년층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국민방위군의 동원은 본격적인 징병제가 부활하기 이전의 일이었지만, 50만~60만여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불과 100여일 만에 5만명이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들어 죽는, 있을 수 없는 참사를 낳았다.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는 본 난(362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은 아무리 전시라지만 국가가 시민들을 함부로 동원하고 또 그런 국가에 대해 시민들의 견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참담하게 보여준다.

베트남 파병으로 징병제 지키다

징병제는 1951년 5월25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국군의 정원을 10만명으로 동원하는 미국의 정책도 폐지되어 국군의 수는 1952년 10월 말 현재 25만명으로 늘어났고, 이때 한국과 미국은 국군의 정원을 46만3천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번 가속도가 붙은 국군의 팽창은 급격히 이루어져 휴전 당시에는 55만명으로, 1954년에는 65만명으로

늘어났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65만명의 대군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군의 유지를 위한 물적 자원은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한국에 저렇게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한국군의 감군을 원했다. 미국이 한국군의 감축을 시도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승만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베트남, 라오스 등에 한국군을 ‘반공십자군’으로 파병하겠다고 제의하며 한국군의 감군을 모면하려 했다.

1960년대 들어와 미국의 케네디 정권은 미국의 막대한 군사원조 부담을 줄이고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군의 감군을 추진한 아이젠하워 정권과는 달리 제3세계 국가의 개발을 위해 자원이 군사부문보다는 경제부흥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국군의 감군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군의 감군은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의 기반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박정희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미국이 계획하는 한국군 감축을 피해보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박정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베트남 파병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한 그의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후 한국군 자체의 감군이 심각하게 논의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1968년 1월21일 이북 특수부대의 청와대기습사건과 1월23일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한국군의 감군은 완전히 물건너간 일이 되었고, 박정희는 오히려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비대해진 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 병영국가를 건설했다.

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국가와 시민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징병제도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별다른 고민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민족 지배하의 일제강점기에도 시행되었던 징병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민들이나 징병제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데 아무도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또 징병제는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세력이 꿈꾸었던 제도이기도 했다. 더구나 시민들은 일제가 퍼뜨린 국가주의의 세뇌에서,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온 독재국가의 ‘국민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민개병제는 빈민개병제?

현행 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무제한으로 군대에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하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불과 100여일 만에 5만명을 굶겨 죽인 국민방위군 사건은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1980년부터 1995년 5월까지 15년5개월간 군복무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우리 군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3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고 있는 셈이다. 걸프전 당시 미군쪽 사망자가 269명에 불과한 것에 비한다면 이같은 손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꼬박 2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제복을 입고 보내야 한다. ‘신성한 병역의무’라는 말과 달리 우리 사병들의 복무여건은 참담하다. 아무리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2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아무런 보상없이 보내야 하는 현역복무자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안고 있다. 현역병에 지급되는 급여가 월 1만원선인데, 우리와 안보환경과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대만의 사병들이 1개월간 받는 급여가 우리나라 사병들이 26개월 근무하고 받는 급여와 거의 비슷하다. 국가는 징집된 병사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은 거의 완벽하게 이 의무를 방기해온 것이다. 병역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라면 그들을 일당 400원, 시간당 17원짜리로 둘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로 대우해줘야 한다.

징병제도는 국가와 시민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병제도의 장점을 살릴 길이 없다. 더구나 바람의 아들,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등 특권층을 중심으로 병역비리와 기피가 판을 치고, 사람의 아들들과 어둠의 자식들은 현행 징병제가 국민개병제가 아니라 ‘빈민개병제’라고 비아냥거리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 경제발전, 남북관계의 개선에 걸맞은 병역의무를 시행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행 징병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3

부끄러운 역사를 평화와 화해로 겨안은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차미경 |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집행위원장,
아시아의 친구들 상임운영위원 (2002.10.24)

우리가 사과할래요 ‘미안해요 베트남’

지금부터 2년 전인 1999년 겨울의 일이다. <한겨레21> 주간지에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인들이 남긴 상처들이 현지 증언자들에 의해 보도가 되자 <국제민주연대> 청소년 회원들과 중학교 CA NGO반 학생들은 ‘우리가 먼저 사과할래요’라는 평화피켓과 플랜카드를 스스로 만들어 대학로로 나섰다.

유난히 추웠던 그 해 겨울, 털장갑을 꺼도 손끝으로 전해지는 한파의 추위는 함께 나선 어른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학생 회원들은 매주 대학로에서 1시간 이상 거리 캠페인에서 만나는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 쓴 ‘베트남에 보내는 편지’의 전단을 나눠주며 서명을 요청했고 이들로 인해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의 물꼬를 새롭게 형성되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그 해 겨울의 토요일 오후 시간을 캠페인에 고스란히 반납했고, 한국의 침묵하는 언론과 어른들을 대신해 상처받은 전쟁 피해자들의 죽어간 영혼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평화의 비둘기들이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전쟁세대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의 목소리라는 것도 모른 채 행동하는 용감한 독수리들이 되어 신나게 날고 있었다.

살아남은 전쟁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여성들

여기서 잠시 당시의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베트남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예상보다 심한 참전군인들의 위협이 주최측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지라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정신적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미 몇 번의 행사를 통해 참전군인들과 부딪히며 폭행까지 당한지라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 공포를 안고 살아갈 정도였고 심지어는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빨갱이 운운하며 사무실에 쳐들어오겠다는 참전군인들의 용감함에 그대로 맞서야 할지 아니면 아니면 캠페인을 중도에 하차

해야 할지 직면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를 위로하며 이 어려운 길의 물꼬를 튼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과 전쟁을 겪지 않은, 그래서 반공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과 전쟁 중 당한 피해들을 증언해준 할머니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끝까지 ‘미안해요 베트남’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유학 중이던 구수정(한겨레 통신원/여) 씨는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의 유학생으로서 최초로 현지 증언자들을 만나며 학살의 증언을 채록하여 한국에 알린 장본인이다.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참전군인들로부터 그녀가 당한 시달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방학을 틈타 귀국한다는 정보를 얻은 참전군인들이 집 앞에 와서 플랜카드를 걸고 진을 치는 가 하면, 집 안에까지 들어와 가족들에게 시달림을 줄 정도였다.

그녀는 전쟁의 참회와 진정한 사과가 한국과 베트남의 오늘과 현재에 빠져서는 안됨을 알린 그 죄 하나로 지난 7년 동안 살던 베트남의 현지 한국인들로부터 고립되어야만 했다.

이런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전쟁피해자들과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운동에 참여한 이들, 특히 참전군인들로부터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것들이 전쟁 운운한다”며 노골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여한 여성활동가들은 현존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길눈이와 다름 바 없었다.

왜 하필이면 ‘베트남’이었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 국내에서는 ‘미군에 의한 범죄와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과 ‘국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지난 반세기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 두 문제야말로 역사 과거청산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임을 필자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쟁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던 베트남 전쟁을 빼놓고

우리가 당했던 아픔만을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평화의 심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누군가 우리로 인해 상처 입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감추어둔 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우리만의 상처를 계속 치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이들 전쟁 피

해자들은 베트남의 가난한 민중들 속에서도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민초들이었다.

왜 베트남과의 과거청산을 함께 하는 것이 국내 평화운동에 기여하는 지 베트남진실위원회 집행위원이자 한겨레 21 기자로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고정태 기자의 글을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 입장은 당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활동의 의미와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1. 사죄 캠페인은 반전평화운동입니다.

-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빈농의 자식들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부산항에서 수송선을 탔습니다. 그들이 최고로 사랑한 가치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몸 성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아득함이 지배하는 정글에서, 그들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총을 쏘았습니다. 전우들의 죽음 앞에서 때로는 제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다시는 그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범죄는 가차없이 비판받아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똑같은 역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2. 캠페인은 한국의 시계를 세계의 시계에 맞추는 일입니다

베트남전쟁은 명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부도덕한 전쟁이었고 명백한 미국의 침략전쟁이었습니다. 65년 통킹만사건을 미국이 조작했다는 것, 베트남전쟁이 베트남인들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만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습니다. 베트남전 파병이 자유세계 수호를 위한 전쟁이었다니요?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한국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에 32만명이라는 대군을 파병한 한국은 무엇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베트남전이야말로 독재자 박정희의 무능과 집권야욕을 읽는 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무력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미국에 잘 보여 자신의 집권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박정희가 무고한 젊은이들을 이국 땅에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이 힘없는 약소국 군대는 베트남의 정글에서 가장 힘들고 험한 유격대 토벌작전에 동원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전사들인 베트콩 게릴라들을 소탕해야 하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일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지배했고, 특히 베트남전 야전지휘관 출신 전두환·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베트남전의 진실을 속시원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전은 공식적으로 재평가돼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잘못 맞춰진 한국의 시계를 세계의 시계에 맞추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사죄캠페인은 진실을 인정하는 운동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은 주월한국군사령부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지만, 궁극적으로 미군을 대리해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전쟁범죄 행위는 모두 미국에 귀속되는 것일까요. 법적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미국에 책임을 묻는 일과 우리에게서는 잘못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근본적인 전쟁 책임자라고 하여 우리의 책임이 면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자기성찰과 성숙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진실을 인정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우익들이 언제 난징 대학살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전두환씨가 광주학살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온갖 상황논리로 변명하고 합리화한다고 명백한 진실이 가리워질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4. 사죄캠페인은 한국사회의 ‘명예’를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진정한 국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명예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떳떳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전 당시 대규모 전투부대 파병으로 제3세계 비동맹권으로부터 손가락질당하며 ‘왕따’가 되었던 나라. 베트남 중부지역 주민들에게 소름끼치는 악명과 원한을 남겼던 군대의 나라. 그 모욕적인 역사를 갚는 일이 바로 ‘양민학살’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캠페인입니다.

만약 이것이 한국 정부 차원의 솔직한 사죄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위신의 추락이 아닌 국가적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트남 외무부의 판투이 탄 대변인은 “베트남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한국이 벌인 활동과 물질적 지원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 사회에 뜨거운 감동의 파동을 일으킨 캠페인. 이것은 한국사회의 진정한 자존심과 명예를 회

복하는 운동입니다.

5. 사죄캠페인은 고엽제피해자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을 겨냥한 운동입니다.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이들은 과연 참전군인들의 적일까요.

우리는 은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이 부도덕한 일이었다는 관점을 시종일관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참전군인들이 고통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캠페인은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지, 병사들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모순된 전쟁에 동원된 병사의 아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병사의 그것보다 몇곱절 되지 않을까요?

참전군인들의 참다운 명예를 찾는 첫걸음은 당신들이 이유없이 전장에서 피흘려야 했던 역사적 맥락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일입니다. 베트남전쟁이 20세기에 서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미스터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지도 모릅니다. 고엽제 피해보상을 받는 일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참회와 진정한 사과는 평화의 화두이자 갈등해소의 첫 발걸음

예측불허의 상황을 안고 일하는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국제민주연대에서 발간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잡지에 1년 동안 베트남 캠페인이 계속 연재되자 시민들을 비롯한 아이들의 편지와 성금이 사무실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기성세대들은 전쟁을 잊고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있었고, 그 과거사를 들추며 다시 생각하는 현대사를 주저하고 있을 때, 어린이들은 ‘이제 우리가 사과해요’ 당당히 이야기하는 평화의 수호천사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래요?” 속삭이는 것이었다.

주저할 일이 없었다. ‘학살진상규명’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전쟁의 상흔을 쳐다보는 일이었다.

새해 봄이 오자 평화의 사죄캠페인은 전국의 시민들,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미안해요 베트남’ 평화음악회로 이어졌다. 음악회에는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0여 명이 시민들이 모였고, 음악회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려퍼지는 ‘전쟁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를 전하는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끝을 맺었다. 그 자리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2,500여 명의 참전군인들은 이 시대가 감당해야하는 운명과 같은 슬픔이었지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비폭력의 목소리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총을 들었던 남성들이 이제는 평화를 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을.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단지 반대만을 외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평화운동의 들머리에 서야 함을..

전쟁터로 아들과 남편을 보내는 역할에 머물던 여성들이 전쟁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고통 모두를 헤아리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나선 용감한 모습들은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피해자로서의 외침이 주류였던 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운동을 통해 과거청산을 위해 애쓰는 여성들의 노력은 단순히 피해자들을 향한 참회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이 그간의 반공주의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평화의 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과 상처로부터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갈등해소와 평화교육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평화교육’과 함께 해야 할 갈등해소 교육

21세기 미래시민이 될 어린이들은 지금 환경, 전쟁, 교육, 빈곤의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는 지구촌 곳곳의 전쟁소식을 들으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전쟁의 공포’를 무의식 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살아갈 21세기를 위한 살아있는 평화체험이 담긴 교육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의 심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유네스코 산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평화교육’을 꼽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교육은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존엄성, 평화, 관용, 민주주의, 사랑, 배려, 등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여기며 국경없는 지구촌의 문제에 다가서고 있는 국제기구들과 민간기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지구촌의 끝나지 않는 비극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인권과 평화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민간기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평화·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대상자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매체,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는 것도 그 탓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 중 대다수가 세계와의 상호의존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은 사례로부터의 교훈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

한국처럼 세계교류가 언어와 분단으로 인해 막혀있는 나라도 드물다. 더욱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과 맞물려 있던 시절의 전쟁이야기, 금기시된 전쟁사의 얼룩들을 들춰가며 평화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교사들에게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과 선입견에 굳어져 있는 기성세대들보다 아이들의 마음은 평화의 텃밭으로 가꾸기에 무궁무진하다.

느린 어른들의 발걸음에 미래는 없다. 가벼운 아이들의 발걸음에 평화의 신발을 신겨보자.

그들은 21세기 전쟁터로 끌려가는 군인들의 아픔을 더 이상 자신의 몫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풍요로운 평화교육을 통해 ‘생명’과 ‘화해’의 소중함을 체득한 어린이들은 지구촌이 총칼에 의해 눈물과 아픔의 회생터로 변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화의 붉은 악마’가 되어 21세기 평화의 축제를 열어 가는 주역이 될지 누가 알까?

학교와 가정에 ‘또 하나의 평화학교’를 제안하며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미국에는 그 죄 만큼이나 이를 극복하려는 시민활동이 교육차원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세계화 교육을 이끌어온 <조슈아 이튼 초등학교>에서는 평화와 군축에 정통한 ESR(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육자들의 모임)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소련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교육과정에는 소련과 관련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소련을 방문했던 사람을 통해 방문의 경험을 듣고 토론하게 하며 전직 러시아어 학자를 통해 러시아 시를 영어로 읽혀주도록 한다. 더 나아가 소련 어린이들의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전국 순회를 하여 미국과 소련에는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쟁의 공포와 치유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서로가 이제는 싸워서 안 되는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도 현대사를 통해 우리의 꿈나무들이 평화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줘야 한다. 분단과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의 현대사는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무거운 과거사의 이야기를 피한 채, 추상적인 평화를 주장하도록 하는 교육보다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흐르는 사회를 알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평화학교’이다.

베트남 평화운동의 수호천사들이 된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베트남과 한국의 화해를 위해 약 5년에 걸친 사업의 첫 발을 디디려고 하고 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언젠가 태어날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 진실위원회에서는 베트남에 ‘평화역사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역사관 설립은 그 긴 과정 동안 다양한 평화교육과 결합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평화역사관 추진사업이 교육의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는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해 다시 알아보기, 세계 평화를 위한 호소문 작성해보기, 인류 평화에 기여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비디오 자료를 보고 토론하기,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와 평화체험 내용 알아보기 등을 각 학교에서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4

아프간의 땅, 여성이기를 거부해야 하는가?

김영미 | 일본 니혼TV PD (2002.10.24)

※ 참조 : 이 강의는 강사(김영미 PD)가 직접 몇차례 아프간을 다녀오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편집하여 상영한 관계로 자료는 대체됩니다.

- 아프간의 여성, 아이들의 교육환경, 집안 일 등에 관한 생활모습
- 아프간 주민들의 생활상
- 여성문제 관한 이야기들
- 아프간에 가게 된 계기, 촬영배경 및 목적 등
- 활동에서 드는 생각 몇가지
- 기타

5

여성평화의 눈으로 대중문화 틈새 가기

김현미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연구위원,
연세대 교수, 사회학 (2002.10.31)

☐ 대중 문화 읽기 : 소비자/생산자의 입장

: 문화텍스트는 ‘한결된’ 의미 망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이미지는 텍스트 자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는 사람이 특정 이미지를 해석하고 경험하는가와 이러한 이미지들이 모여지는 ‘맥락’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의미가 생산된다(Sturken and Cartwright 2001: 45). 주류적이고 공유된 의미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이미지가 해석되고 사용되어지는 방식은 이러한 주류적 해석과 다를 수 있으며, 의미를 만들어 내는 ‘보는자’들의 해석 과정이 포함된다. 즉 이미지가 관객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자들도 이미지로부터 의미를 창조해낸다. 보는 자들은 이미지를 해석하는데 있어, 자신의 경험과 연상들을 동원하고, ‘맥락’에 따른 해석을 한다. 그들은 수동적 소비자로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적 의미의 생산자로서 존재한다.

☐ 대중문화와 성별 / 폭력의 예들

- 1) 아버지에 대한 저항 / ‘파괴’와 ‘일탈’의 쾌락
- 2) 미학과 가학 / 남성작가주의와 여성혐오
- 3) 죽음과 폭력의 ‘희화화’와 조롱(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들을 오락과 불거리 쪽으로 전환시킴)

☐ ‘중단 없는 위반 행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성찰의 윤리학’으로

폭력의 과잉(유사성과 모방) --> 폭력에 대한 무감각화 --> ‘어떻게 멈춰야 할 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사회’(눈과 귀를 통해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에 열중한다.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거기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면서.)

올리비아 룡쟁(1999, 이미지의 폭력, 동문선), “폭력 이미지들을 외면하면서 폭력에서 벗어나는 듯한 꾸밈, 마치 폭력의 재현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도덕이라는 변명 속에 감추어진 회피와 무관하지 않다.”

죽은 자들에 대한 존경 - “죽은 자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품위와 명예가 존중되는 세계와 다시 결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출구는 없다”

1. 성폭력은 ‘성해방’의 한 표현이다?

거미여성들(Spider Women)이라는 미국의 인터넷 여성주의 그룹(<http://www.spiderwomen.org>)은 1999년 8월에 열렸던 ‘우드스탁 뮤직 페스티벌(Woodstock Music Festival)’을 “강간스탁(Rapestock)”이라 부른다. 그들은 당시 우드스탁에서 여덟 건의 여성 강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명만이 가해자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왜 500명의 안전 요원이 상주했던 우드스탁 콘서트에서 여성들이 옷이 벗겨지고 심한 성적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미디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누가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하기를 원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드스탁에 참가한 마흔 아홉 팀의 밴드 중 마흔 여섯 팀의 밴드가 모두 남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 중에는 림프비스킷(Limp Bizkit)과 같은 랩 메탈밴드도 있었다.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 중 약 60%가 남성이었고, 40%가량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우드스탁에서 공연한 많은 밴드들은 흥분한 여성들에게 웃옷을 벗어 던지고 가슴을 드러낼 것을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흥분한 관중들 위로 던져지고, 그들의 옷은 찢겨나갔으며, 집단적 마초 트랜스(trance) 의례의 제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의 문제는 곧 잊혀졌다. 소위 저항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중 문화의 현장에서 ‘성폭력’은 곧잘 ‘성해방’의 표현으로 번역된다. 바로 이점이 페미니스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드스탁은 전통적으로 젊음, 저항, 열정을 상징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문화 공연이다. 메이저 음반사에 의해 기획되고 상품화되는

기성 가수들에 비해 우드스탁에 모여드는 밴드들은 나름대로 언더그라운드적 저항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우드스탁은 주류 문화의 상품성과 제도적 규범에 대항하는 ‘생각 있는’ 뮤지션들이 모여드는 자유와 해방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소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음악’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공격적인 밴드들이 성차별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성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이 내세운 진보와 저항의 메시지는 종종 여성 혐오적이며, 성폭력적인 욕망을 부추기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우드스탁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저항적 대중 문화의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기성 세대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내세우는 ‘생각 있다’는 밴드들의 공연에서조차 여성 비하가 자연스럽게 자주 표현되고, 여성 백댄스와 보컬들의 ‘섹시한 몸’이 도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의 격한 몸짓이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다. 심지어는 대학의 응원가에서조차 ‘마초맨’이라는 노래가 당당하게 불려지고 있다.

남성 마초들이 주도하는 ‘저항성’은 자신을 규제하는 ‘잘 나가는 아버지’들에 대한 분노이며, 기성세대의 물적, 상징적 자원에 대한 뼈뺀 냉소이다. 기성세대들이 제도와 자본을 통제하며, 힘을 얻고 있다면, 이들은 젊은이들의 감정과 몸을 지배하면서, ‘권력’을 얻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들은 매력적이지만 ‘위험스럽다.’ 그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권력과 자원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지만,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리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하다. 그러므로 젊음이 상징하는 ‘변화’와 ‘저항’이라는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될 때, 대중 문화의 장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성폭력은 의도적인 범죄로 인정되기보다는 열정이 과다해서 또는 위선적인지 않은 욕망의 표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일탈’로 취급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중 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유통되는 ‘현장들’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의 문제는 더 드러내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여성들도 시대적 유행에 동참하고, 세련된 취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중문화가 생산해 내는 ‘성적 폭력’들에 대해 관대하다. 촌스럽거나 완고한 도덕주의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곧잘 ‘표현의 자유’에 동참하고, 모든 ‘규제 세력들’에 대해 적대적이 된다. 또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사사건건 성차별과 억압을 논하면, 주류 문화 담론에서 곧 아웃(out)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대학가의 여성들이 노골적인 여성 비하를 만화 속에 표현해냈던 이현세를 지지하고, 나쁜 남자의 김기덕 감독을 감각 있는 영화꾼으로 평가하는 것도 ‘최첨단의 문화 유행’을 수용하기 위해 여성 폭력에 대해 눈감아 버리겠다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 문화 속에서 ‘모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이란 기호는 단지 상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바로 현실 속의 여성이다. 미성숙한 자아를 지닌 누군가의 욕망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제한되고, 도구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문화 정치학이다.

2. ‘죽음’은 오락이다?

대중 문화는 새로움과 차이를 통해 잉여를 만들어낸다. 최근 죽음은 대중 문화의 주요한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이제 죽음은 ‘신비스럽거나’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보고, 즐길 수 있는 오락의 대상으로 적극 활용된다. 인터넷 자살사이트처럼 죽음에 대한 과감한 실험 정신이 새로운 ‘욕망’으로 변화되면서, 죽음은 점점 ‘낭만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음은 이제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사건이며,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남과 공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죽음의 낭만화’가 가장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신세대(Youth Culture)의 하위 문화로 자리잡게 되는 것도 최근의 현상이다. 죽음은 대중 문화와 결합하면서, 영상, 음악 그리고 인터넷의 세계에서 언설의 영역을 빠르게 확장시켜내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 관계의 도구화나 삶의 의미 없음, 외로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분노 등은 타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성으로 전도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리니지와 같은 오락 게임처럼, 괴물과 싸우던 플레이어들이 다른 플레이어를 죽일 뿐 아니라, 혈맹과 혈맹끼리도 전투를 벌이는 ‘살인’ 경쟁이 게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살인 경쟁의 승리자가 게임의 ‘고수’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살인과 죽음에 통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이머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셈이다. 어떤 엽기 사이트는 탈격이 주는 풍자와 해방감으로 인해 신선한 웃음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목이 순식간에 달아나고, 육체의 일부가 절단된 많은 시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명목 하에 버젓이 시각적 폭력성을 행사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록의 저항성을 ‘죽음’과 연결시키는 ‘death metal’ 장르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악마적 이미지를 낭만적 저항성과 허무주의와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드코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영화들은 잔혹한 죽음의 과정을 냉정하고 침착한 시선으로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대중 문화에 ‘죽음’의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차용됨으로써 죽음은 ‘윤

리'와 '고통'의 문제를 수반하기보다는, '오락'과 '쾌락'의 영역이 되고 있다. 죽음 앞에서 인간들이 보여왔던 경건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죽음과 폭력, 그리고 쾌락은 이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3대 히트 상품'이 되고 있다. 이미지는 실체는 죽음의 고통이 누군가의 잠시 잠깐의 흥분과 오락을 위해 조장되는 것에 대해, 자주 실망하고 절망한다. 정말 소박하게,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마음과 육체의 '평화'를 상상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쾌락과 오락은 점점 '파괴'와 '폭력'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대중 문화의 소비자들이 재현되고 있는 폭력성을 그대로 내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죽음의 낭만화가 시대성을 반영하며 유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갱스터 랩(gangster rap)을 만들어내는 한 미국의 레코드 회사의 프로듀서들이 실제로 갱의 멤버로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은 '문화'와 '현실'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의 낭만화를 기반으로 한 대중 문화는 인터넷과 방송매체, 문화 상품의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중 문화에서 재현되는 죽음의 낭만화가 21세기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객기와 삶에 대한 무기력은 폭력을 찬양하고, 죽음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집단적 무감각증을 생산해내고 있다. 죽음과 같은 더 강한 자극과 충동을 통해서만 '유희'의 느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삶의 '평화로운 느낌'을 포착해줄 감성과 감정의 축수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대중 문화를 '인간화'하려는 노력은 일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주요한 실천일 수 있다.

6

적, 여성, 섹슈얼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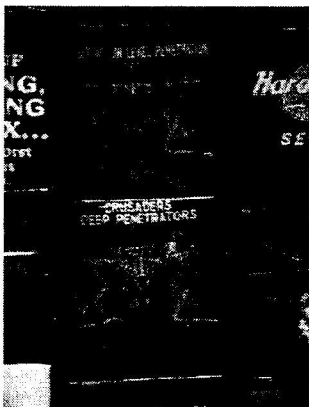
김엘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2002.11.7)

본 글은 전쟁담론이나 적의 이미지 창출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차용되고 있으며, 여성과 여성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해석되고 있는지 살피는 데 있다.

1. 티셔츠의 그림 이야기: 정복의 욕망

며칠 전 송탄을 방문했다. 지난 8월, 서울 국제회의의 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송탄의 오산 미군기지촌을 돌아본 일이 있는데, 그 때 눈여겨 본 한 티셔츠 도안이 나의 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점 문 밖에 길게 늘어뜨려져 전시되어 있는 그 티셔츠 도안을 처음 보았을 때, 난 뉘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아쉽게도 상점 문은 잠겨 있었다. 그렇게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방문은 다행히도 상점의 사장과 만날 수 있는 호기를 가졌다. 여전히 길거리의 한 켠을 장식하고 있는 이 티셔츠 도안은 날 다소 흥분시켰다. 별거 벗은 채 누워있는 한 여인의 벌어진 사타구니 사이로 각 각의 비행기들이 목표표를 조준하고 깊고 낮게 침투하고자 활공하고 있는 이 도안의 이미지는 여전히 우리네 삶의 한 재현으로서 버젓이 세상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 이미지에 집착하며 이 도안과의 재상봉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그 그림 앞에서 바짝 타는 입술의 긴장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 상점의 사장은 다소 싱거운 얼굴로 날 마주 대하고 있었다. ‘여자가 왜 여기 왔지?’ 하는 약간 재미없는 눈빛으로 의아함을 표현하였다.

“한국사람들이 이 티셔츠가 왜 필요하죠? 이걸 미군들이 부대별로 구분하면서 입는 유니폼 같은 거예요.”

“미군들이 이것을 입나요?”

“그럼요, 다같이 맞추어서 입지요. 이 비행기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각 부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명예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벽이나 수첩에 부착된 편엽 결들의 사진들이었다. ‘금발의 미인들은 군인들로 하여금 왜 이 전장에 내가 있어야하는가를 상기시켜주고 힘을 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게 하는 존재였다’고 회상하는, 퇴역한 한 미국남성의 말은¹⁾ 군대(인)와 여성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밀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점 점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며, 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일게다. 나신의 여성에게로 침투하는 것이 곧 적의 진지로 향하는 전투의 짜릿함으로 재현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재현은 티셔츠나 사진이라는 상품을 통하여 유통되고, 이미지가 보여주는 의미는 이러한 유통과 소유의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결정되고 확산된다²⁾. 자, 군인들이 여성의 나체 그림이 든 티셔츠를 집단적으로 입고 걸어간다고 상상해보자. 참으로 웃기는 일이지만, 잠시 웃음을 참고 생각해본다면, 이 유치함이 갖는 정치적 의미의 무게는 단순히 세상의 유치함으로 또는 상식 이하의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다.

우선, 집단적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는 공통의 티셔츠를 착용함으로써 그들은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남자라는 것, 전사라는 것, 같은 부대의 소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남성성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특징화된다. 그들은 민족 또는 한 사회의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는 주체로서 남성적 연대감을 형성하며, 고귀한 애국심으로 어린이와 여성, 일반인의 안보를 지키는 선한 수호자이다. 따라서 그들이 갖는 남성성은 개별적 남성의 특징이 아닌, 집단적으로 발현되는 남성 특권적 권력으로 작동한다.

1) <Q논픽션> 케이블 텔레비전의 편입결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존 버거, 「이미지: 시각과 미디어」, 서울: 동문선, 2002 (원본은 1972년 출판); 아네트 쿤, 이미지의 힘: 영상과 섹슈얼리티, 서울: 동문선, 2001 (원본은 1995년 출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클래머 여성의 이미지는 이러한 집단적 남성의 시선에서 고정화된다. 이미 누워있는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 주체성이 은폐된 채, 남성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여성이다.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의 편집 사진이나, 지하철 가판대의 잡지 모델에 박혀진 클래머형의 여성이미지는 대량 생산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극단적 성적 여성성이 표출된 여성의 재현은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갖지 못하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 욕망은 그 티셔츠나 사진을 구입하여 소유하는 욕망으로 대치된다. 여성의 재현은 유통되고 소유되는 상품으로서 하나의 교환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군인이 소비자일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적 의미가 창출된다. 전사들을 위로하는 여성, 위험한 전투의 황량함이 오르가즘의 짜릿함으로, 배출의 즐거움으로 환상을 갖게 하는 여성이 민족주의적으로 필요하다. 다리를 벌리고 ‘자, 나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겨냥해보세요’라고 말하는 여성이 국가적으로 요청된다. 그것은 전투력의 향상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애국적 행위이다.

적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여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만난다. 이러한 욕망은 사실, 군대의 현장에 있는 남성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성의 판타지이다. 한 비뇨기과 의사가 성의학 입장에서 남성들에게 전하는 섹스방법에 관한 글에서 이를 엿보기로 하자.

한국남성들의 성행위는 흡사 ‘전투’와 비슷하다. 그것도 ‘장기전’이나 ‘전면전’이 아닌 ‘속전속결전’이다. ‘선전포고’도 없이 일단 시작하면 순식간에 해치워버리고 만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전투적’으로 살아온 한국남성들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중략)..... 최소한 아내에게 ‘선전포고’는 해야할 것 아닌가. 그러나 때로는 선전포고를 해놓고도 싸움다운 싸움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발기부전과 조루가 대표적이다 (이선규, ‘남성학 강의: 선전포고하고 전쟁해야지’에서)3).

위의 글은 섹스를 전투로 비유하여, 한국남성들의 성질 급한 섹스의 습관과 경향을 ‘속전속결전’로 규정하면서, 아내를 위한 배려로서 전희, 즉 ‘선전포고’를 권유하고 있다. 선전포고는 전쟁을 치루는 법칙의 예의인 것처럼 아내에게도 느긋한 자신감으로 섹스를 준비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런데 이 글은 섹스의

3) <http://newsmaker.hkan.co.kr/leports/n367g02.htm>

중심을 남성의 성기에 두고 마치 목표달성을 위하여 분기 투쟁하는 장면을 연상케하면서 섹스는 남성적인 사업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복과 성공, 성취라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듯, 섹스를 전투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여야 쉬운 설득력을 갖는 남성세계는 이미 전쟁이 그들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티셔츠의 그림이야기에서 시작된 섹슈얼리티와 이를 통한 여성의 이미지 재현 문제는 다음의 물음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과연 군인이 군인답게 되는 주요한 기제로서 어떻게 여성이 인식되고 이미지화되는가? 전쟁담론에서 여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쟁담론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쟁을 섹슈얼리티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이 어떤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전쟁담론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차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여성과 여성성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먼저 전쟁담론을 주요하게 형성하는 ‘적’의 이미지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2. 부시의 반테러리즘 정책과 적의 창출

1) 부시의 테러리즘과의 전쟁

군사주의는 적을 필요로 한다. 전쟁과 군대가 성립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타자’로서의 적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911 참사가 일어난 후, 미국 부시는 이에 대한 보복전쟁을 선언하면서 세계적 지지를 호소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적이다. (You’re with us or against us.)” 세계적 협조를 요청하는 건지, 위협을 하는 건지 애매한 부시의 이 유명한 발언은 2002년 미국의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면서 세계를 아군-적군,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분리시켰다. 그리고 마치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자와 이를 위협하는 자와의 대립으로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실로 세계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기치아래 마치 준전시체제의 긴장과 불안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하다. 이라크와의 전운이 감돌고, 그 다음 차레는 북한이라는 예정설과 함께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일

어나고 있는 테러사건들이 더욱더 이 전쟁의 근거와 의미를 확고하게 다져주는 양상으로 발전한다.

현재 팔레스타인, 아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발사건은 미국 행정부가 명명하는 ‘테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의 정치적 의미는 미국행정부가 명명하는 ‘테러’와는 사뭇 다른 사회 역사적 맥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집단간의 사회적 갈등과 소수 종족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 저항은 미국의 독점권과 불균등한 세계질서에 관한 저항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미국이 정의하는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미국정부가 테러리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배치되어 인식되고 있는가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는 태생적으로 보편적일 수 없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테러행위 자체가 일반적 범죄와 다르게, 정치적 행위라고 개념화됨으로써,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읽는가에 따라 그 정의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안중근의 도시락 폭탄 투하 사건은 일본측에게는 테러행위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독립을 위한 애국적英勇행위이다.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행위는 전혀 다른 해석을 동반한다⁴⁾.

그런 의미에서 테러리즘의 정의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에 주요한 관건이 된다. 미국정부는 테러리즘을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국가하부집단, 또는 비밀요원이 비전투원에 대해서 행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폭력행위”라고 본다.⁵⁾ 연방수사국(FBI)은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부, 국민 전체 또는 일부를 위협, 강요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불법한 실력 또는 폭력의 행사”라고 정의한다.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데 공통적으로 간주되는 요소는 (1)정치적 동기 (2)민간인에 대한 공격 (3)불법적인 폭력행사 등이다. CIA의 반테러리스트 센터의 부원장으로 일한 바 있는 필라(Pillar)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⁶⁾.

4) 2002년 5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슬람의 자폭문제를 테러로 볼 것인지, 자위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를 지역별로, 국가별로 드러내었다.

5) Perl, 위의 글, 2001 CRS-3.

6) <http://www.terrorismanswers.com/terrorism/introduction.html>

- (1) 분노의 충동적인 행위이라기 보다는 미리 계획되어진 행위
- (2) 돈을 얻기 위해 마피아를 이용하는 집단들의 폭력과 같은 범죄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
- (3) 군사적 목표나 전투부대가 아닌 시민을 겨냥한 행위
- (4) 한 국가의 군대가 아닌 국가보다 낮은 집단들(subnational groups)의 행위

그런데 펄(Perl, 2001)은 이러한 정의가 전통적 개념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이나, 조직화된 비집단의 멤버 또는 개인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테러리스트들의 행위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만 동기 부여되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 문화적인 동기, 경제적인 이익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테러리즘의 양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국가의 역할과 영토의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는 가운데, 전쟁의 주요행위자는 국가만이 아닌,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집단들이 되고 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911 사건처럼 '틈새기술을 이용한 비대칭적 수단'으로⁷⁾ 맞서고 있다. 더욱이 테러행위의 상징성과 심리적 위협감이 지닌 상당한 영향력과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전쟁의 한 유형으로 취급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테러리즘이 주는 위협감을 넘어서 더 위압적인 것은 911사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책이다. 아프간에 대한 과도한 공격⁸⁾과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과장된 강조, 그리고 반테러리즘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⁹⁾의 정책화의 실행으로서 반테러법의 국회 통과를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한

7) 최병두, "세계화와 초테러리즘의 지정학", 「당대비평」, 봄호 18권, 2002: 198-200.

8) 2001년 12월 현재, 아프간의 사망자 수는 3,767명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미군의 무차별적 공중폭격과 오폭은 60명의 북부지역 추장을 태운 트럭까지도 피해대상으로 삼았다.

9) 미국의 반테러리즘 정책의 기본 틀은 제재를 위주로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여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안보관련 정책입안자들은 1) 세계각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외교정책, 2)반테러법, 안보법 등 법의 강화, 3)테러리스트들의 활동 자금 통제와 물자지원 금지, 4)테러리스트 통제와 제거를 위한 군사적 조치, 5)정보 수집 등 다각적이고 상호통합적인 대응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Perl R. F. "Terrorism, The Future, and U.S. Foreign for Congress". (Nov. 5, 2001); Taylor F.X. "Terrorism: U.S. Policies and Counterterrorism Measure", (Dec. 1, 2001) 참조.

정치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셈이다. 더욱이 인권의 차원에서 볼 때,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대응들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캐나다 국경 강화, 이민자들의 단속, 개인의 언론, 통신 자유권 제약 등은 미국이 내세웠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의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고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가중시킨 것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이다. 부시는 테러리스트와 이를 지원하는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를 전쟁의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부시와 미 행정부가 아프간을 공격하고, 소위 불량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명명한 것은 테러 지원국들에게 가하는 엄포였지만, 이는 테러와 전쟁을 모호하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 테러가 폭력적이고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지만, 부시행정부가 자행하는 전쟁, 역시 폭력적이고 수많은 살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부시행정부는 그들의 목적이 테러리즘과 차별되는 도덕적 우위성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과연, 미행정부에게 누가 세계평화와 자유와 정의의 기준을 주었는지 의심스럽다¹⁰⁾.

1984년 8월, 뉴욕파트 애비뉴 유대교당에서 전 미 국무장관인 조지 숄츠가 한 연설은¹¹⁾ 미국이 테러리즘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세계 문명과 정의의 중심이 미국에 있다는 자국중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현대적 야만이다.” “테러리즘은 서구문명에 대한 위협이다.” “테러리즘은 서구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발언에는 테러리즘이 왜 발생하는가,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왜 미국이어야 하는가하는 성찰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그저 테러리스트(적)들은 짐승과 같은 야만인으로서 위협적인 성가신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설할 뿐이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을 왜 제거해야 하는가하는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데 그치고 있다.

2) 적의 창출¹²⁾

10) 911사태가 발생한 후, 미국 정부는 911테러는 온 인류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였다. 테일러(Taylor)도 그의 글에서 911사태가 단순히 미국에게 가한 일격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문명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말한다 (2001).

11) 이대훈, "9-11 사건과 테러리즘이라는 속임수에 대한 단상", 2002, 9. 재인용.

12) 이 내용은 본인의 글 "한국의 군사주의와 성" 「여성과 평화」, 2002. 2호의 2장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세계가 군사적으로 이원화되고, 새로운 적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이 때에, 눈여겨 볼 점은 군사주의의 메카니즘이 적을 만들고 적에 대한 증오심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간을 폭력적으로 황폐케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왜 이슬람세계는 서구문명을 위협하는 야만인으로 전락되는가? 일반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바꾸고, 죄의식 없이 적을 죽이고, 나아가 그런 행위를 애국심으로 전환하는 기제는 과연 무엇인가?

킨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와 도구적 인간(Homo faber) 못지 않게 인간은 적대적인 인간(Homo hostilis)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라틴어 'hostis'라는 말은 내부인(insider)이 아닌 이방인(stranger)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한다¹³⁾. 혈연이나 종족으로 맺어지지 않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다름과 두려움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는 적개심으로까지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다름과 낯설음에서 오는 갈등,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인간의 역사는 이를 '안보'라는 이름 하에서 남성적 힘과 군사력으로 해결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모델로서 신화가 창조, 유포된다.

신화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 '타자'는 '우리'의 부정어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확인된다. 그리하여 누가 우리의 편이고 선하고 강한 존재인지를 밝힘으로써 우리 편인 아닌, 낯선이(stranger)를 죽이는 것을 거룩한 행위로 만든다.¹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문명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으로 선전되면서 이슬람권의 폭력적 야만성을 강조하는 언론보도에는 이러한 신화가 숨어있다. 국민의 기아에 무책임한 채 대량살상무기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에 대한 비난발언에도 미국과 그의 동맹국이 얼마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선한 존재인지 그 신화가 담겨져 있다.

13) Keen Sam, *Faces of the Enemy*, NY: Haper & Row, 1988, 18쪽.

14) Keen Sam, *Faces of the Enemy*, NY: Haper & Row, 1988, 19쪽.

우리 / 선 / 거룩함 / 내부인	그들 (적) / 악 / 이단 / 이방인
우리는 법 안에 있다.	그들은 범죄자이다.
우리는 계약과 조약, 국제법을 준수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만하고 조약을 파괴한다.
우리는 평화를 수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군사력은 법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이다.	그들은 난폭한 갱이자 범죄집단이다.
우리는 정의와 시민권을 지킨다.	그들은 그들의 국민들에게 야만적이고 억압적이고 전체군주적이다
우리는 외국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그들은 혁명과 혼란을 부추킨다.

3) 적의 이미지

적의 이미지는 참 다양하다. 몇가지 특징 별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적은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양심이 없다. 험악하고 무섭다. 그리고 욕심이 많다. 그래서 ‘적’은 우리의 가정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2) 적은 문명에 뒤떨어진 야만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적의 이미지는 흑인이 원숭이보다 못하다는 차별적 선입견과 함께 흑인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재현되고 있다. 인종차별과 적의 개념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3) 적은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로 쥐, 뱀, 토끼 모양의 형상을 띠고 있다. 북한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양을 탈을 쓴 늑대라든지, 잘 보이면 보이는 도마뱀의 꼬리라든지, 빨달린 도깨비, <뚝이장군> 만화에서 돼지 등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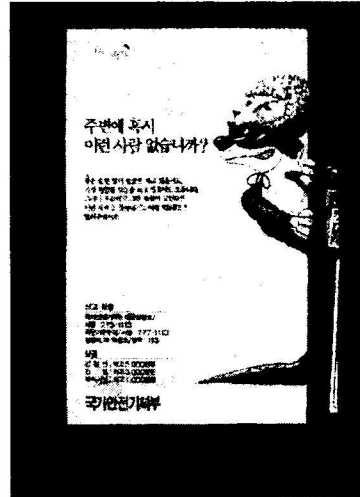


그림 17 <뚝이장군> 중에서

4) 적은 성적 유혹자이자 강간자이다. 순결한 여성을 강간하는 적의 이미지는

마치 민족의 순결을 빼앗고, 정의와 자유를 파괴하는 자라는 이미지로 확대 해석된다.

적이 인간 이하로 그려지거나, 짐승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우리’는 쉽게 적을 증오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적은 마음대로 죽여도 좋은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악마와 같은 존재이다. 만약 적이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이미지화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쉽게 총을 들이댈 수 없을 것이다. 적에게 우리는 인권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비인간화되고 타자화된다.



Sold and Comforted
Germany, 1941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적의 이미지는 ‘우리’의 그림자가 투사된 것이라고 본다. 용이 말하는 그림자는 자아가 모르고 있는 무의식의 일

부인데, 일차적으로 열등한 성격, 나의 부정적인 어두운 면이다. 적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열등한 면을 집단적으로 투사한 악의 원형이다. 그리되면 적은 일종의 괴물로 보이며, 이 괴물을 죽이고 약한 자들을 구출하는 영웅적 행위는 자기희생, 성전, 민족 해방 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진다. 유대인의 학살, 마녀사냥, 매카시 열풍, 좌익색출 등은 일종의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의 예이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개개인의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를 인식할 때, 집

단적으로 투사한 악의 원형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¹⁵⁾



3. 적의 이원론적 구조와 여성¹⁶⁾

선-악, 강-약, 문명-원시라는 이원론적 구도에서 여성

15) 이부영,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서울: 한길사, 1999.

16) 이는 2002 서울국제회의에서 발표한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화를 위해서" 발제문의 일부이다.

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남성=보호자, 여성=피보호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도가 강화된다. 안보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는 여성들은 사회의 온전한 시민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전쟁과 관련된 포스터나 만화에서 여성을 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킨의 지적에서도¹⁷⁾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여성은 역사적으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이나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적'으로서 여성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을 안보의 주체자로 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전투를 한다는 것이 영웅적 명예를 절하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군사적 이원화와 적의 창출은 여성을 타자화시킨다. 일례를 들면, 아프간 전쟁동안 아프간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문제는 미국에게 정당한(just) 전쟁의 하나의 구실로서 전면에 부상되었다. 반전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반인권적인 상황은 전쟁반대의 주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전쟁담론에는 진작 아프간 여성의 삶과 경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의 원시적인 야만성을 증거하는 상징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억압적이라고 '규정된' 이슬람문화에 의해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돌매맞는 불쌍한 피해자로 이미지화 되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슬람정권의 구성과정에서 아프간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주변화되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은 그동안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해왔던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¹⁸⁾.

셋째, 전투에서의 '적'의 정복은 극단적 남성성의 표출을 필요로 함으로, 강한 남성다움이 사회의 우위적 가치로 자리잡는다. 전쟁과 관련된 어떤 것을 말할 때, '정복, 강인함'과 같은 이야기들은 남성적인 것으로 고려되면서 칭송되는 반면, '동정, 약함, 패배'와 같은 이미지들은 여성적인 것으로 비유되면서 하찮은 것으로 간주된다.¹⁹⁾ 여성성을 폄하하고 남성성을 권위적이고 가치있는 것

17) Keen Same, 위의 책, 58쪽.

18) 북부동맹의 카불 진입과 관련, 북부동맹의 보수적 남성성을 비판하고, 이슬람 중심의 정권구성보다는 유엔이 개입한 보다 광범위한 민주적 정권 구성을 제안하는 아프간여성혁명연합(RAWA)의 성명서와 탈레반 추출 후,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활동과 입장에 관한 2002년 3월 8일 여성의 날 성명서 참조. <http://www.rawa.org>

19) Cohn C. "Wars, Wimps, and Women: Taking Gender and Thinking War", in M. Cooke and A. Woollacott, eds, *Gendering War Talk*,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으로 부여하는 남성성의 우월의식은 전쟁의 과정과 승패를 묘사하는 은유법에서도 표출된다. 지난 걸프전쟁 당시, 공격은 강간으로 표현되고 (the rape of Kuwait), 이슬람교 식의 절을 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의 들려진 엉덩이 뒤로 미사일이 꽃힐 듯한 그림은 침략의 굴욕성을 강간(fuck you)의 이미지로 대신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약자의 속성은 여성성과 동일시되면서 가치절하되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녀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함축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국제관계의 국가간의 정치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성적 은유가 사용되고, 확산되면서 여성의 차별성과 남성의 폭력적 공격성에 관한 사고방식이 사실화,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성(gender)의 정치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의 폭력성은 단순히 전쟁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의 가부장적인 성 차별성, 남성의 성폭력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전쟁과 군사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성(sexuality)을 통제하는가하는 점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서도 목격된다. 여성을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으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이원론적 성의 구조에서 남성들이 보호해야 할 ‘우리’의 좋은 여자가 있다면, 강간을 해도 좋고 물건처럼 다루어도 되는 나쁜 여성 즉, 적의 여성이나 성매매에 있는 여성들이 있다.

지난 보스니아의 전쟁 때, 강간이 적의 종족 말살이라는 군사적 전략으로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적이 보는 앞에서 적의 아내를 강간하고 다른 종족의 아기를 갖게 하는 고의적 강간은 동티모르 독립투쟁운동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 군부는 동티모르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매 6개월마다 동티모르 여성들에게 불임을 위한 강제 주사를 주입함으로써 여성의 성과 출산권을 통제한 바 있다²⁰⁾. 남한과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네덜란드의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는 전쟁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극단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에는 이들을 위한 매춘여성들이 기지촌의 주요 경제를 담당하며 상주하고 있다.

20) Almeida, 1997

4. 성별화된 반공주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염원할 때, 그 표현이 남녀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되곤 한다. 오랫동안 헤어져 만날 수 없었던 연인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는 노래(직녀에게)나 철선 끊긴 기관차를 타고 그리운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읊는 시(녹슨 기관차 가득히 꽃을)가 그것이다.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듯이, 흔히 북한은 여자로 남한은 남자로 동일시되면서, 남북통합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결혼준비를 잘 해야 하는 부부준비의 노력과정으로 비유된다 (전우택: 2001, 3-4).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관계로 은유되는 통일이야기는 여성화된 북한과 남성화된 남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식민주의 담론에서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과도 동일한 맥락이다.²¹⁾ 서구사회는 남성적 문명의 중심인 주체(Self)로서, 비서구사회는 여성적이고 원시적인 타자(Other)로서 구성되면서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의 관계는 성별화된 성적은유로서 설명된다. 남성화된 지배자인 주체(Self)와 여성화된 종속자 타자(Other) 사이의 정형화된 관계를 통일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사례가 영화<쉬리>이다. 영화<쉬리>는 오랜 역사동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비인간화시켜왔던 반공주의를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기반으로 성별화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4-1. 여성화된(feminized) 북한과 남성화된(masculinized) 남한

먼저, <쉬리>가 표현하는 북한과 남한의 이미지를 살펴보자. 북한은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암시하듯이, 원시적인 폭력성과 잔인함, 조국통일을 위한 개인희생, 고집불통같은 확고한 의지의 특징들로 표현된다. 남북한의 2002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분단의 역사적 책임을 기존 정치가들에게 돌리며 남북한의 대통령들을 살해하고자 계획한 북조선 8군단의 대장인 '최민식'의 통일관은 아사 직전에 처한 대다수의 인민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21) 성별화된 은유적 관계를 한국-일본, 한국-미국의 식민주의-제국주의 구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글은 Choi Chungmoo, "Nationalism and Construction of Gender in Korea," in *Dangerous Women*, Elaine H. Kim, Chungmoo Choi eds., NY: Routledge, 1998 가 있다. 한국 근대화 발전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초남성화된 국가와 초여성화된 시민사회의 관계를 유교의 성별화된 유형론으로 분석한 글은 Han Jongwoo and Ling L.H.M.,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ized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98) 42. 참조.

출발하나,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라는 점을 남한의 OP요원인 ‘한석규’를 통해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최민식’과 8군단 요원들은 다소 근시안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융통성 없는 인상을 준다. 북조선의 인물묘사는 8군단 단원들의 무표정함에서 극대화되는데, 이는 그들의 투철한 통일사업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면서도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도 도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다소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한의 OP요원인 ‘한석규’와 ‘송강호’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거시적인 안목, 치밀한 논리와 분석력을 갖춘 인물로 구사된다. 특히 두 집단의 대조적인 인물 특징의 표현은 그들이 등장하는 배경에서도 드러나는데, 남한의 OP 사무실은 어항을 인테리어로 장식할 만큼 여유있고, 인간적이고, 세련되었으며,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첨단 장비들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의 훈련장면은 현대적 무기장비 실행이 아닌, 원시적인 육체적 훈련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살육의 피 튀기는 장면과 함께 비인간적인 과정으로 묘사된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 현실은 그들의 작전수행을 위해서 남한의 CTX 액체포탄을 절도하여 이용할 만큼 열악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적이고, 지적이고 문명화된 남한, 그리고 야만적이고, 육체적이고 원시적인 북한의 대조적 묘사는 여주인공의 이중적 여성상과 결합된다. <쉬리>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윤진’은 두가지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비밀첩보요원인 ‘이방희’ 역의 강인하고 일의 목적성이 투철한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한의 한 남자를 사랑하는 ‘이명현’역의 애교스럽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이방희’는 남자들도 견디기 고된 군사훈련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결국 북한 8군단의 비밀첩보요원으로 남한에 파견된다. 그 군사훈련은 참으로 잔인하고, 극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악발이처럼 생존해야하는 실제훈련으로 연출된다. 이러한 훈련을 바탕으로 ‘이방희’는 단 총알 두발로 주요인사들을 암살하는데 성공하고, 이러한 그의 철저한 테러행위는 남한의 OP요원들에게 악명높은 공포가 되기도 한다. 그의 모습은 목적의식적이고, 철저한 사명의식과 한치의 실수도 없는 일 숨쉴, 강인함, 냉정함, 대담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방희’가 위장한 남한 여성, ‘이명현’은 ‘한석규(애인 역)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의 사랑에 대한 고상함은 ‘키싱구라미’라는 관상용 물고기의 특성에서 대신 표현된다. ‘키싱구라미’는 상대 짝이 죽으면 자학을 해서라도 따라 죽는 열녀같은 특성을 지닌 물고기이다. ‘이방희’는 애인의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면서 애인과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여인이다. 그는

현신적이고, 밝고 명랑하며, 예민한 물고기들의 특성을 다 기억하고 돌보는 섬세한 성격으로 연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한여성 ‘이명현’의 사랑스러운 여성 이미지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남한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반면, 북한여성 ‘이방희’의 강한 여성 이미지는 원시적 폭력성과 무모한 북한사회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표1> 성별화된 북한과 남한의 이미지

항목	여성화된(feminized) 북한	남성화된(masculinized) 남한
이미지	원시적, 폭력적, 야만적, 육체적	현대적, 과학적, 합리적, 문명화
여주인공의 여성상	일에 대한 투철한 목적의식, 강인함, 냉정함, 대담함	남자에 대한 헌신성, 귀여움, 섬세함, 사랑스러움, 명랑성

4-2. 남성화된 남한의 통일로

첩보원인 북한여성과 OP요원인 남한남성은 마치 통일의 미래상을 그리듯 서로 결혼을 약속하며 애정을 나눈다. 그런데 북한여성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랑 앞에서 첩보요원인 ‘이방희’라는 여성과 위장된 ‘이명현’이라는 여성간의 갈등과 충돌에 직면한다. 이 갈등은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북한여성상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세련되고 섬세한 남한여성상을 선택하느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갈등은 애인인 ‘한석규’와의 맞대결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서로 총을 겨누고 선 두 남녀의 대결의 긴장감은 결국 세련되고 섬세한 남한 여성상, 사랑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상의 선택으로 끝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원시적인 타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승리이자 문명화된 남한으로의 흡수를 암시하고 있다. 영화는 북한 신세대 첩보요원의 과격한 통일관을 열정적으로 영상화함으로써 기존의 반공주의가 보여 준 적대감 보다는(권혁범, 2000)²²⁾ 좀 더 세련되게 재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미지는 여전히 야만스럽고 폭력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이 개발하고 구원해야할 타자일 뿐이다.

둘째, 북한여성의 목적의식적이고 강인한 여성상은 여성의 본래적 모습이 아니므로, 사랑스럽고 고운 남한 여성상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

22) 반공주의의 표어의 내용과 비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숲, 2000, 137-174쪽;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0, 49-63쪽. 참조.

다.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남한여성상은 정상적인(normal)인 여성상으로 간주되고, 냉정하고 대담하게 과업을 성취하는 북한여성상은 비전형적인 여성상으로 가치절하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투적인 여성상은 폭력적인 북한의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본래의 여성의 모습이 아닌, 변종된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진짜 여성상’은 남한여성처럼 남자에게 헌신적인,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는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여주인공의 정체성에 관하여 자문한다. 여주인공은 분단의 역사가 낳은 ‘이명현’이도 아니고 ‘이방희’도 아닌 ‘그냥 나’이고 싶음’을 표명한다. 그러나 ‘그냥 나’는 사랑하는 남자의 따스하고 화사한 스웨터를 짜는 여인임을 암시한다. ‘그냥 나’로서의 여성이란 국가나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적인 여성, 남성의 상대적인 성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자율적인 여성이어야 할텐데 (김은실, 2001: 46-47), 영화 <취리>는 ‘그냥 나’이기를 원하는 여성을 여전히 남자와 태아와의 관계에서 위치지우고 있다. 나아가 분단의 현실이 한 북한여성을 ‘진짜 여성됨’으로 만들지 못하고 머리가 9개 달린 히드라 여신으로 만들었다며 분단역사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이 ‘그냥 나’로서 있지 못한 원인을 성차별적 가부장제 사회가 아닌,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만으로 돌리고 있다.

7

최근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²³⁾

박순성 | 동국대 교수, 북한학 (2002.11.14)

1. 평화와 경제

가. 과연 경제는 사회의 평화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우선, 상업과 사회질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 관점
 - 전통적 관점 : 인간의 도덕심을 붕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제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근대적 관점 : 인간 심성을 부드럽게 하고 사회 내부의, 사회들 사이의 질서를 가져오는 경제 - 스미스, 토크빌

※ 참고 : K. 폴라니, 시장경제 또는 악마의 맷돌 ; F. 브로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 경제와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 관점
 - 경제는 삶의 물질 기초를 만드는 행위이면서, 다른 모든 사회활동을 규정하는 행위; 따라서 경제발전은 인류 문명의 기초; 심지어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의 기초 - 스미스, 맑스, 헌팅턴
 - 경제는 삶의 물질 기초를 만드는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경제 자체가 인류 문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제도가 경제활동의 결과를 나아가 인류 문명의 성격을 결정한다 - 롤즈, 센

※ 참고 : 센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식량 감소만으로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은 경제 재난이지 단지 식량 위기는 아니다(여기에서 경제 재난이라는 말은 정치·사회적 제도의 결함, 정책의 실패를 의미); 칸트 - 만약 정의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인간이 지구상에 살 가치가 없다;

23 이 글의 많은 부분은 필자가 최근 쓴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필자의 게으름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 - 만약 인간이 매우 무도덕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이 지구에 살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현대문명은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상업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립적인 두 관점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제가 적절한 지위를 찾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당연히 현대사회에서 경제와 평화의 관계는 복잡하다.
 - 경제는 평화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경제는 평화를 깨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개인의 경우, 사회의 경우 등등
-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론가로서 갈통을 참조.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 구조적 폭력의 원인들
 - 적극적 평화를 위한 조건과 경제

나. 북한 경제와 한반도 평화

- 분단관리의 불안정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평화
 -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불안정한 세력균형상태 하에서 달성되는 민족번영(비유하자면, 분단과 정전상태라는 구조적 폭력 하에서 달성되는 소극적 평화)
 -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 평화(비유하자면, 분단 구조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적극적 평화)
-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상적 전망과 북한 경제 문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과정은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고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단일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분단과 전쟁, 갈등과 긴장의 민족현대사를 20세기 후반 세계정치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주와 상실은 민족의 분단사를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이다. 당연히 평화·통일에 대한 이상적 전망은 자주를 우리 민족의 존재론적 가치이자 전략적 가치로서 요구한다. 그런데 남북이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의 통일방안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갖는 공통성을 인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인정에서 출발하여, 남북은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통해 화해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신뢰를 다지고,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상적 전망으로부터 가치와 방안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다.

역사와 현실에 닿아 있는 이상적 전망이 화해·협력과 안정·번영을 강조할 때, 북한 경제는 핵심적인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위기의 북한 경제는 북한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력의 엄청난 격차와 장기화된 북한 경제의 위기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남북 최고지도자의 공동선언 속 이상적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 북한 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하여,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최대의 공동관심사이다. 남북 사이의 모든 논의는 ‘북한 경제’라는 관문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다.

○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에서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한 논의로

북한 경제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독일이 동독의 붕괴로 급격한 흡수통일을 이루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남한 사회 내에서 통일 관련 논의의 한 축은 독일식 흡수통일의 가능성이었다. 독일 통일비용의 규모가 알려지면서 남한이 주도할 수도 있는 흡수통일의 비용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일비용과 관련한 논의에서 북한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는 중요하면서도 추정하기 어려운 변수였다. 북한 경제의 양적 실체가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내어놓지 못하고 흡수통일의 비현실성과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개방·개혁의 가능성으로 모아졌다.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체제변화의 가능성, 남한의 대북정책으로 옮겨가면, 연구자들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다. 왜곡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순화시켜 보면, ‘북한불변론’이라고 할 만한 관점과 ‘북한변화론’이라고 할 만한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논의의 내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불변론과 변화론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두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대조적이지만, 특히 불변론은 전통적인 대남전략의 유지를, 변화론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강조

한다.

<표 1> 북한불변론과 북한변화론

쟁점	북한불변론	북한변화론
북한은 2002년 현재 경제위기를 벗어났는가	1990년대 말 최저선을 통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말 최저선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빈곤의 늪에 빠져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엇이었나	개방정책의 포기 또는 체제강화 몇 군사화	제한적 개방정책의 소극적이지만 지속적인 추진
현재 북한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재건과 양적 동원체제에 기초한 경제성장	계획기구의 정비와 산업구조·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북한지도부 내부에는 정책갈등이 있는가	김정일 중심의 단일한 정책결정구조	최고정책결정권자 김정일 아래에 관료적 정책대결 존재
북한지도부는 개방·개혁으로 가려고 하는가	개방의 통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강화	개방·개혁의 확대 추진
현단계 북한의 대남정책은 무엇인가	전통적 대남전략 또는 적화통일전략의 기본 노선 유지	수세적 대남전략 또는 공존전략
남한의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변하지 않은 북한 체제의 식체에 대응한 안보중심의 대북정책	대북포용정책과 경제교류협력의 적극적 확대

단순화시킨 두 관점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북한의 현실이 외부로 내어 보내는 제한된 정보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정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제로 제시하는 북한 경제에 대한 관점은 극단적인 두 관점보다는 유보적이거나 절충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에 대한 논의도 연구자의 이념과 정책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결과 논의의 과정에서 유보나 절충보다는 대립적 관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북한 경제의 향방이 대북정책 결정과 남북관계 전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여전히 사실의 판단을 넘어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경제의 향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대립적 관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형성하는 일은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 관련 견해들이 수렴되도록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관점들보다는 공유하는 견해의 폭이 넓은 관점들이 유통될 때, 통일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은 활성화되고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2002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가. 북한 경제의 현실 : 일상화된 경제위기, 절대빈곤, '빈곤의 늪'

북한이 2001년 5월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국민총생산은 1993년 991달러에서 1998년 457달러로 하락하였다. 5년 사이에 국민소득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1인당국민소득은 대략 남한의 8~9% 수준이며,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한 인간개발하위국의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의 가중평균치(1997년도 기준, 982 PPP\$)에도 미치지 못한다.²⁴⁾ 아울러 북한의 보고서는 평균수명(1999년 66.8세), 유아사망률(1999년 천명당 22.5명), 5세미만사망률(1999년 천명당 48명), 예방접종률(1997년 50%), 안전한 식수공급률(1996년 53%) 등에서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신체적 조건에서 1950년대 중반 남한 주민들과 비슷하며, 북한 청소년들이 평균 신장에서 남한 청소년들보다 10-15cm 정도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구나 TV화면에서 굶주림에 표정을 잃어버린 북한 어린이들을 보는 데도 익숙해 있으며, 이제는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였으며 그 중 상당수가 사망하였음도 부인하지 않는다. 북한은 절대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이며, 우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절대빈곤은 무엇보다도 1990년대 북한 경제의 붕괴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기준)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은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경험한 남한의 경우 1998년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기준)은 -6.7%를 기록하였다. 한 해 동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남한 경제에 가져왔던 파탄에 비추어볼 때, 만 9 년에 걸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북한 경제에 가져왔을 결과는 붕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요 산업생산량을 평가하면,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량이 1990년에 비해 1998년에는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원유도입량, 철광석생산량, 강철생산량은 거의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24 1인당GNI와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지수, 1 미달러로 미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가치; 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1998, 234쪽)로 평가한 1인당실질GDP는 평가방식의 차이 때문에 정확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비교로는 이용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추정한 남한의 1997년 1인당GNI는 10,307 US\$이며, UNDP가 평가한 1997년 남한의 1인당실질GDP는 13,590 PPP\$(1인당GNI의 약 1.32배)이다.

북한 경제의 붕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 경제는 자체의 힘만으로는 회복되기 힘든 상태에 빠져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국가재정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히 높았던 북한의 경우(약 75-85%),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의 경우 예산은 과거의 절반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붕괴하였으며, 국가기구조차도 산업의 회생을 위한 투자여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재정의 감소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계획부문의 생산활동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경제는 실질 투자가 확대재생산은 말할 것도 없이 단순재생산조차도 보장하기 힘든 '빈곤의 늪'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그러한 상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경제에서 외부로부터 자본의 유입은 경제성장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 경제의 붕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기능장애와 무기력의 상태에 빠뜨렸다. 명령과 계획의 지배를 받는 북한 경제는 국가기구가 자원의 공급과 배분을 제대로 해주지 못함에 따라, 순환구조의 마비에 직면하였다. 당연히 인민경제의 계획부분은 축소되고,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비공식부문 또는 불법행위에 의지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의 중간 이하 관료들조차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일탈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당국도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러한 행위들을 일정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념과 통제에 기초해 있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적 신뢰와 통합기제를 상실한 일종의 '사회적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였다. 통치권력은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대부분의 관료는 사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부패와 타협하기에 이른다. 주민들은 공식이념의 허위성과 국가기구의 무능을 깨닫지만, 체제 차원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탈진한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고 만다.

빈곤의 늪에 빠진 북한 경제와 공동화 현상에 봉착한 북한 사회, 이 두 상태는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가 위기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가 장기화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식민지배, 전쟁, 공산지배를 거치면서 근대적 정치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은 일상화된 경제위기에 '순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고난의 행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때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대규모 또는 체제거부적 '탈출'로 이어지지 못한다. '비판'의 행위와 결합되지 못한 이탈은 일시적으

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나. 최근 변화와 관련한 논의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체제의 시작(1998년)과 함께 헌법 개정(1998. 9), 「인민경제계획법」 제정(1999. 4)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붕괴된 관료적 조정기구와 계획경제체제를 재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계획경제의 정비와 재건을 강조하던 북한 지도부는 2001년 초부터 사상·사고의 혁신과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진 및 관리체계 개선을 강조하고, 「가공무역법」을 제정(2001. 4)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볼 때, 북한 지도부는 2001년 초부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제도 개선·강화 조치,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가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논란이 많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서, 특히 가격·배급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 북한 지도부가 밝힌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목표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 것이다. 개선·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조치가 획기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변화의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어야만 하는 지도부의 고민을 담고 있다. 위기에 처한 북한의 경제현실은 체제안정을 위한 사회주의이데올로기의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업의 혁신적 변화를 지도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가격·배급제도와 관련한 내용 : 현재 외부세계에 알려진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중 가격·배급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쌀가격을 포함한 물가의 전반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kg당 8 전이던 쌀가격을 44 원으로 인상하였고, 쌀가격 인상과 함께 모든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통비 등 국가서비스 부문의 가격을 인상하고, 심지어 주택비도 상승시켰다. 둘째, 임금을 조정된 물가에 맞춰 20 배 정도 인상하였다. 또한 ‘로력일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번 수입에 의한 평가’에 따른 임금지불을

결정하였다. 셋째,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물가조정 및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급제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시책을 고수하기 위해, 북한은 쌀에 대한 배급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2> 최근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내용

(단위 : 북한원)

구분	품목/계층	단위	국정가격 조정			시장가격과의 격차		
			조정전 (A)	조정후 (B)	인상폭 (B/A,배)	농민시장 가격(C)	조정전 (C/A,배)	조정후 (C/B,배)
가격	쌀	1kg	0.08	44	538	49	612.5	1.1
	옥수수알	1kg	0.07	33	471	33.6	480	1.0
	디젤油	1kl	1	38	38			
	전력	1kWh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요금	평성(평북)~ 남양(함북)구간	50	3,000	60			
	유원지입장료	송도 해수욕장	3	50	17			
	집세	평양지역기준	수입의 0.03%	1m ² 당 월 2원	-			
임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부	월	..	6,000	-			

주: 농민시장가격은 2001년말 전국평균 기준

출처: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02. 8.

원자료: KOTRA, 조선신보, 연합뉴스, Economist 등 종합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 먼저, 북한은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물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붕괴된 관료적 조정기구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을 통해 계획기구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던 북한 지도부는 쌀의 국정가격을 거의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곡물과 관련한 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곡물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한 가격인상조치와 결합됨으로써 암시장의 전반적인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암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흡수함으로써 통화량의 실질적인 축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상승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봉급생활자들(특히 하급 관

료와 군인, 국영공장·기업소 노동자 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김정 일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일정 정도 무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균주의가 아닌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임금지불은 노동의욕을 상승시킬 것이다. 끝으로, 배급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초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 될 수도 있는 경제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개선조치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붕괴된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의 정상화 또는 복원이라고 판단된다.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 : 일차적으로 물가조정의 결과, 주민들은 농민시장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쌀의 경우)는 판단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도 엄청난 가격의 상승으로 돈으로 사야만 하는 상품이 되었다(전력, 주택 등의 경우, 위의 <표 2> 참조)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 당국이 시장기구를 수용하였으며, 경제의 모든 부분이 ‘상품화’ 또는 ‘화폐화’되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유포시키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은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함께 주민들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조정과 결합하여 인플레이션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배급제의 경우에도 곡물가격의 현실화와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 여러 서비스들의 가격상승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부분인 가격·배급제도의 변화는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한다는 정책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기구의 도입 또는 시장경제화라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세 가지 해석

<표 3> 세 가지 해석의 비교

	기본 관점	개선조치의 핵심적 기대효과
계획경제 정상화	○경제전략 및 정책의도 중시 ○단기적 정책변화 강조	○비공식부문 흡수 ○노동인센티브 제고
계획경제 개혁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체제전환의 단계론적 접근	○가격정상화 및 원·부자재 시장 개설 ○독립채산제 및 분권화 강화
시장경제화	○체제전환의 내부 동화 강조 ○장기적 체제변화 과정 중시	○가격기구 도입 및 국가서비스의 상품화 ○시장 범위 확대 및 지배인의 권한 강화

시장중심의 가격결정방식 :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 임금뿐만 아니라 자재와 설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장과 기업소에서 과학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제 가치대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북한은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들이 가격을 조절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으며 시장의 원리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가격조정은 물량동학에 기초한 자원배분체계에서 가격동학에 기초한 자원배분체제로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쌀가격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내세운 생산원가, 국제가격, 수요공급법칙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가격결정기구가 단순히 국정가격원칙에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결정되는 암시장의 쌀가격에 맞춰 가격을 현실화하였으며 모든 가격을 '제 가치대로 계산'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국가의 가격제정권한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가격을 국정가격의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기능밖에 없는 명목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은 국가의 가격제정·통제 기능을 표명하면서도, 수요공급법칙에 기초한 가격기구의 도입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범위 확대와 물가 변동 : 가격기구의 도입과 함께, 경제체제의 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시장의 범위와 물가의 변화이다. 북한은 원·부자재에 대한 시장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시장경제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생산재시장의 규모는 소비재시장에 해당하는 기존의 국영시장이나 농민시장의 규모를 능가할 것이며, 당연히 북한 경제 전체를 시장경제로 재편하는 주요한 견인차가 될 것이다. 한편 물가의 변화는 가격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명목상으로 국정가격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민시장(암시장 포함)의 가격 변동은 국정가격의 변동을 예측하게 하는 선행지표의 의미를 갖는다. 농민시장의 가격과 국정가격의 지나친 괴리는 결국 국정가격의 재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체제 전환의 두 방식과 북한의 가격조정 :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에서 핵심적인 두 현상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원배분메커니즘의 시장화이다. 흔히 말하는 급진적 전환과 점진적 전환의 차이는 사유화와 시장화의 도입 방식에서 나타난다. 중국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사유화와 시장화는 경제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급제약이 해소되면서 추진된다. 북한의 경우, 사유화는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가격조정을 통해 가격기구가 도입되고 시장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시장화는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화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상승 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확대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쌀가격 상승과 축적체제의 변화 : 쌀가격의 상승은 농민 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공업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국내에서 동원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국가가 곡물판매를 통해 얻는 수입이 증대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당분간 주민생활보장을 위해 인상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대부분 다시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생활필수품용 공산품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에 대한 세금제도의 부활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방법도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산업부문간 소득분배의 차이는 정부가 투자자원을 외부로부터 들여올 수밖에 없다(개방화의 압력)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자력갱생형 축적체제가 대외의존형 축적체제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지속시키기 위해 농민들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이는 자연히 협동농장의 관리방식과 소유제도를 사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만들 것이다. 결국 농업과 공업 부문 사이의 상대가격의 변화는 축적체제의 변화를 통해 경제관리와 관련한 미시적 차원의 변화와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제도의 변화라는 체제원리와 관련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자원배분원리의 변화 또는 경제성장전략의 변화 : 경제관리 개선조치에서 국가의 가격결정·통제 권한이 명목상 보장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통한 생산재의 거래·배분, 가격기구의 작동에 기초한 산업부문간 소득분배, 독립채산제와 분권화의 강화 등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북한 지도부는 국가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직접적인 자원분배자의 기능을 포기하여야 한다.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 물량 통제가 아닌 가격조정(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가격왜곡)을 통한 자원배분 조정,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환경 개선 노력, 민간경제행위자와 국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경제정책 결정,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규율 등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외개방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중공업우선노선과 경제건설·국방건설병진노선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는 공급제약의 해소를 통해 거시적 차원의 경제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조건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배분원리와 경제성장전략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개별 경제단위들, 그 중에서도 기업소의 행동원리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의 ‘화폐화’ :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실질적인 화폐개혁이라고 할 만한 가격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배급하던 재화와 서비스가 ‘제 가치대로 계산’된 가격에 따라 판매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자연히 경제의 ‘화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 시작된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경제생활에서 농민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해 있는 상황에서, 가격조정은 주민들에게 경제작동원리의 근본적 변화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경제분야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국가의 무능력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가가 ‘시장기구에 적응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표하였다고 판단할 것이다.

배급제의 실질적 폐지 : 북한 경제체제의 상품경제화 또는 화폐경제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평가지표가 될 쌀 배급제의 유지는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다. 현재 주민들은 자신들이 받은 배급표가 표시하는 만큼의 쌀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쌀 배급제가 의미를 상실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장차 곡물의 공급이 증대하여 농민시장의 곡물가격이 하락할 경우이며, 이 때 주민들은 배급표에 의존하지 않고 농민시장에서 곡물을 구입할 것이다(경우 1). 다른 하나는 곡물의 공급이 극도로 감소하여 과거와 같이 배급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쌀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 때 배급표는 무용지물이 되고 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곡물을 사야 한다(경우 2). 이에 덧붙여 곡물의 공급이 극도로 감소하지는 않더라도 농민시장에 나오는 쌀의 품질이 하락하여 웃돈을 주고라도 국가가 배급하는 쌀을 사야 할 경우(경우 3)와 배급된 쌀을 팔아서 다른 쌀 곡물을 사서 소비해야 할 경우(경우 4)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두 경우 부유한 주민은 국가가 공급하는 질이 좋은 쌀을 사기 위해, 가난한 주민은 좀더 많은 곡물을 얻기 위해 배급표로 산 쌀을 팔거나 배급표를 실질적으로 팔거나 할 것이다(배급표의 유가증권화 가능성 발생). 1, 3, 4의 경우 쌀의 국정가격을 낮추고 충분한 배급표를 주어야만,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배급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2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배급제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쌀가격의 상승폭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결국 쌀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배급표가 쌀을 충분히 구매할 정도로 주어진다면(생활의 보장) 그리고 쌀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배급제 자체는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쌀의 정상적 공급과 적당한 양의 배급표가 주어

진다면(이것이 배급제가 추구하는 목표상태이다), 쌀가격 현실화와 배급제는 모순관계에 놓인다. 쌀가격 현실화—이는 자연히 공급의 정상화를 의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는 배급제를 무의미하게 하고, 배급제는 쌀가격의 현실화—임금의 현실화를 동반한—를 무의미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배급제는 북한 경제의 정상화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소득격차의 발생과 새로운 사회통합원리의 요구 : 수익에 따른 배분과 새로운 가격체계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공장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소득격차를 발생시킨다. 소득격차가 야기됨에 따라 그동안 북한 주민들 사이에 유지되었던 동질성은 파괴되고,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원리를 요구하게 된다. 자연히 평등이라는 이념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사실 199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거친 북한에서 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새로운 경제인의 형성 : 주민들은 조정된 가격에 맞춰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인상된 임금으로 새로운 가격체계에 맞춘 자신들의 지출구조를 짜서 경제생활을 운영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꾸어 버린다. 일종의 가계차원의 경성예산제약은 가격기구의 작동과 시장경제 영역의 확대에 따라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이익을 계산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시장경제에 맞춘 경제인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상되는 북한 경제의 변화 :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라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 경제정책과 경제체제가 앞으로 점증주의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일단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긍정적 전망은 개혁·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자연히 경제안정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 체제는 점진적인 체제전환의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다.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이 점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제성장형 체제전환의 과정이 북한에서 나타날 것이다. 부정적 전망은 시장화와 개방화가 경제침체의 탈피에 실패하면서 경제위기가 다시 심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북한은 체제 전체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북한 지도부의 체제안정 또는 체제보수를 위한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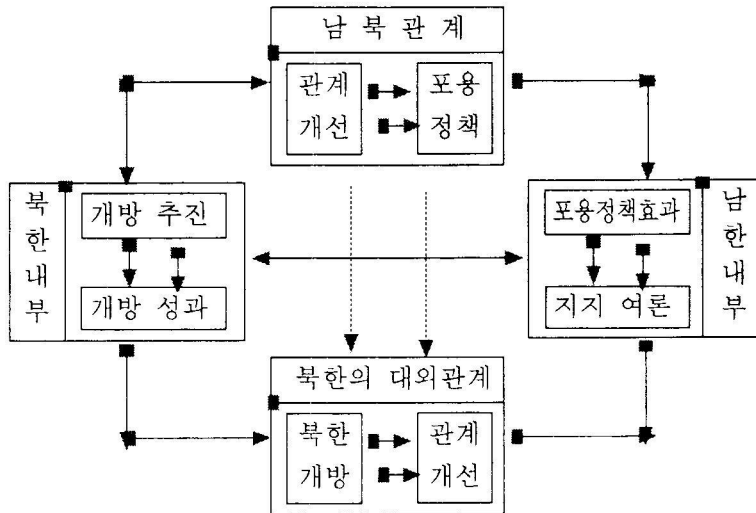
<표 5>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개선조치	예상효과
경제제도	가격기구 도입	시장경제 영역 확대
경제행위자	화폐화	합리적 경제인 탄생
경제성장전략	상대가격체계 변화	자립노선 폐기
대외경제정책	개방화	해외 자본과 기술 유입
경제체제 변화	개방·개혁프로그램	경제안정화와 경제성장

3.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대외관계

<그림 1> 한반도 관계발전의 정책적 순환고리



북·미관계가 2000년 초부터 계속해서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방·개혁과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순환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 북한의 개방정책,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남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순환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동적인 요소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서, 북한의 개방·개혁과 관련한 환경변화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

책기조의 결정에서 남한 정부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다른 한편,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안정화와 남북한 경제관계의 확대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진출과 관련해서 필요조건이자 자극제라는 점도 중요하다.

두 개의 전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상적 전망으로서, 순환고리들이 선순환을 하는 경우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경제적 성과를 낳고 개방·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민족경제가 통일적·균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상과 같은 선순환과정에서는 한반도 전체의 질서변화가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공존공영의 형태(소위 정합게임)를 띠는 것이다. 남북한 각각의 내부 상황도 안정적일 것이며, 분단과 냉전의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가져오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경제가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나아갈 때,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불안정과 불평등을 전파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과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는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의 개방정책이 좌절되거나 포기될 때 그리고 현재와 같이 북·미관계가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때, 북한 경제의 위기는 심화되고 북한 체제 자체의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악순환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긴장으로 몰아갈 것이다. 남한도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민족경제의 발전과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 그리고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성장과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동북아지역 전체의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강화될 것이다.

나. 쟁점 1 : 대북포용정책과 북한 경제정책 변화

- 기본 관점 :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왔다.
- 비판 1 :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대북압박정책과 북한 내부 위기의 결과이다.
- 비판 2 :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못하며 아직 적절한 결과도 얻지 못했다.
- 평화주의적 관점에 기초해서 평가; 과연 대안이 있는가?

다. 쟁점 2 :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 지도부의 정책수행 능력

- 기본 관점 : 북한 지도부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 비판 1 : 북한 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소극적 전략을 취할 뿐이다.

- 비판 2 : 최근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관련하여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정책의 결정·수행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 비판의 적절함을 인정하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강조
 - 위에서 보여준 선순환
 - 동시에 북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쟁점 3 :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공동체

- 기본 관점 :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 비판 1 : 남북한 경제체제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성급한 경제공동체 형성은 비현실적이다.
- 비판 2 : 북한 지도부는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이다. 특히 남한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 비판 3 : 북한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실패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 비판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적절한 대북정책은 남북공동체형성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경제

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몇 가지 논의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개념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전체로서의 집단’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사회형태를 가리킨다. 사회적 존재형태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않거나, 공동체 자체의 특징이 파악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동체는 근대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분화하기 시작한다.

공동체의 분화는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집단적 존재형태인 사회 자체와 분리되면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대립하는 경우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차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이

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와 사회질서 형성을 매개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를 구분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활동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근대시민사회에서 공동체는 이중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자체가 근대시민사회에서 본래의 형태대로 존재하기 힘든 상태에서, 민족공동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가 통일의 단계와 관련하여 사회·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는 분명 근대시민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든 전근대적 사회형태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동체란 사회구성원들의 전근대적 존재형태의 속성을 가리키는 ‘공동체성’보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던 생활방식 또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단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하나의 생활방식이나 생활공간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실질적 내용은 각 영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치공동체의 경우에는 민족이 하나의 정치체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사회·문화공동체의 경우에는 사태가 좀더 복잡하다. 우선, 사회·문화적 단일성을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문화다원주의의 관점은 분명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문화적 소통의 자유와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만으로 공동체를 규정할 수도 없다. 동질성과 이질성의 긴장 속에서도 ‘공동체’라는 용어에 걸맞은 특징이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의 경우에는 민족이 반드시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국민경제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공동체란 정치공동체와 달리 완전한 통합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통합을 향한 경향성이나 의식적 노력이 존재하는 과도적 상태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경제공동체는 엄격한 의미의 ‘공동체’나 ‘경제통합’을 의미하지 않으면서, ‘이익의 공존’ 또는 ‘분화된 이익의 결합’에 기초한 경제활동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한이 현재 서로 분리된 경제단위를 유지하면서 점차 경제교류·협력을 증대시켜 하나로 통합해 가는 상태를 경제공동체의 통상적 의미로 파악한다면, 남북경제공동체란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제도화하여 경제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이후부터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협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개념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족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연상시킬지도 모르는 한 가지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자. 일반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남북의 경제생활권이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남북한 경제가 경제공동체로서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경제생활권이 완전히 민족적인 경제주체에 의해 장악될 필요는 없다. 흔히 남북한 각각에서 제기되었던 민족경제론은 자주적인 또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당연히 민족경제공동체는 이러한 민족경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민족경제, 심지어 국민경제 자체의 존재가치가 부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족경제공동체는 자립적 민족경제론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민족경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면, 민족경제공동체라는 개념 자체의 기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독립된 하나의 근대국민경제를 형성한 경험이 없으면서 지역경제통합을 구상해야만 하는 남북한에게, 민족경제공동체는 일정 기간 동안 목표로서 추구하면서 동시에 극복해야만 하는 한시적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민족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협력과 함께 사고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자. 첫째, 남북한은 경제력 격차의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의 회복을 요구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 또는 경제협력의 심화는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를 자동적으로 해소시켜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경제공동체 형성 또는 경제통합은 남북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크기의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제공동체 형성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남북한은 북한 경제의 개방·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조건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경제개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권의 안정을 북한지도부에 보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지도부가 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이며, 남한은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제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동북아 지역협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흡수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예를 들면 두만강지역협력사업 추진 등은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공동체 형성에 나오도록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남북한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기구가 동시에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의 내부 논란을 볼 때, 더 시급한 질문이 있다. 어떠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논의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과 관련한 논쟁은 대북지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분단비용을 고려할 때, 대북지원은 분단비용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남북이 한반도 남북에 억압을 강요하는 분단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북한 경제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북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투자(평화비용)이며,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자주와 자유를 위한 투자(통일비용)이다. 더구나 경제가 단순히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식조차 좌우한다면, 대북지원은 민족화해의 주요한 행동방식의 하나가 될 것이며, 나아가 남한의 시민사회가 경제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경제위기 상황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갖는 역설적 의미, 분단체제 하에서 북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난다.

8

우리 안의 반공주의를 돌아보다

권혁범 | 대전대 교수, 정치학 (2002.11.21)

kwonhb@dragon.taejon.ac.kr

dragon.taejon.ac.kr/~kwonhb

1. 시작하며

영화 <공동경비 구역> 흥행의 성공은 단순히 작품성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 주민의 머리를 갇혀 왔던 분단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과 관련되어 있다. 불과 몇년전만 같아도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의 병사를 ‘미화’한 이 작품은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아마도 제작자나 감독은 지루하고 저급한 재판의 과정에 얽매이게 되었을 것이다. 확실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남북 관계의 급진전과 평화적 협상의 확대는 강고한 분단규율을 서서히 허물고 있다. 반공주의적 공격은 여전하지만 예전처럼 치명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반공주의는 가고 평화는 오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는 현재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는 한순간의 오해와 충돌, 국내 국제적 조건의 변화로 쉽게 깨질 수 있으며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남북 코리아에 반협력적 반평화적 폭풍이 들이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일회적인 사건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남한과 북조선의 관계가 몇 번의 만남이나 정치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까닭은 코리아의 분단과 그것으로 인한 적대적 감정을 유발 유지하는 냉전주의적 세계관이 정치군사적 대립을 넘어서 코리아 주민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해의 무드가 순식간에 공격적 증오로 바뀌고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문화화한 냉전주의적 가치체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반공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냉전주의적 가치관이 남한과 북조선에서 각각 국가안보 논리를 가치위계의 최상위에 자동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평화, 인권 및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의 유보를 정당화하는 사유체계를 남과 북한 주민 가슴속에 깊게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공동경비 구역>의 결론은, 휴머니즘에 토대한 관계도, 분단 규율의 체화라는 구조적 조건을 해체하지 못하는 한, 한순간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상호살인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체제, 제도, 정책의 변화는 남북의 통일과 코리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소수의 정치적 결단이나 합리적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시적 변화를 강제하는 문화적 압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냉전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의 정치적 합의나 선언은 한순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냉전형 문화를 탈냉전적 평화지향적 문화로 바꾸는 일이다.

2. 냉전문화와 일상적 반공주의

남한에서의 냉전문화란, 단순화한다면, 1) 분단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압력에서 파생되는 일상적 수준에서의 언행 양식 그리고 2)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고방식 및 정서를 의미한다. 그것은 냉전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권이 반공 반북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화화된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적 사고와 정서의 일부로 녹아있다.

물론 극우적 반공주의는 많이 약화되고 있다. 탈냉전,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북한의 기아 등은 현실사회주의의 위협성을 약화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등장 그로 인한 남북한관계의 긴장 완화, 남한경제의 북한에 대한 완전한 우위 확보 등은 반공반북주의의 공간을 어느 정도 잠식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반공주의가 이제 정치/안보/군사의 영역으로부터 일상적 영역으로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문화화한 반공주의 혹은 냉전문화라 부를 수 있겠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 비이성적 정치논리와 정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단순한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비난이면서 동시에 그것과 교묘하게 결합된 고도의 계산적 이성적인 목적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일종의 권력이성은 그것에 순응하고 굴복하는 대중의 처세술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대중의 입장에서 사실은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 및 정서와 결합시킨다. 그것은 오랜 세월 내면화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정신과 가슴속에 특정한 정치 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자동적으로 유발시키는 기제를 만들어놓았다. 그것을 난 내 연구논문에서 '반공주의 회로판'이라고 불렀다.²⁵⁾ 따라서 특정한 자국

25) 내 연구논문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한국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이 실린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는 '남과 북의 문화통합' 프로젝트의 팀의 3년간의 공동 연구로 탄생한 책이다. 이 논문과 내 자신에 대한 성찰적 에세이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 및 권력," {통일

이 주어지면 사회구성원들은 혹은 그들을 대변한다고 자칭하는 주류언론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미 정해진 회로판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 대응을 하게 된다. 그것은 사상적 획일성과 단순성, 군사 동원주의적 심리, 배타적 감시자적 태도, 굴종적 순응적 태도, 반정치적 일원주의 질서 및 도덕주의에 대한 강한 동경과 요청을 유발한다. 물론 여전히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현존과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확보라는 분단현실에 의해 뒷받침, 지속되고 있는 일상적 권력이다.

3. 반공표어에 드러난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사람들이 그것을 읽건 읽지 않건, 의식적으로 수용하건 냉소적으로 지나쳐 버리건 간에 길거리의 반공표어는 한국사회의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핵심적 태도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의식세계가 거기에 머물 것을 공권력 혹은 공권력의 후원을 받는 단체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거리에 장기간에 걸쳐 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과서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공표어야 말로 한국사회 반공이데올로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매체다. 교과서의 세련된 반공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외피라면 반공표어는 내피에 해당할 것이다.

가. 반공표어의 제1차적 의미

이제 반공표어에 드러나는 반공 담론의 의미체계를 분석해보자. 그것은 다음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첫째 반공이 왜 필요한가? 둘째, 반공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되는가?

1) 반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제시된다. 첫째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물리적 공포를 환기시킨다.

<붕괴 직전 북한체제 대남 도발 경계하자> <인민은 기아절망 김정일은 남침준비> <좌익폭력 사회혼란 북한오관 초래한다> <북한속셈 변화 없다 위장평화 경계하자> <우리 모두 간첩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각심을 강화합시다> 등의 표어는 6.25전쟁이후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북한의 남한 침공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워준다. 번영과 평화의 바람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계

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하나의 문화, 1999)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수정하여 이 글을 만들었다. 민족주의적 통일론에 대한 비판에 관심 있는 분은 최근에 발행된 내 책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술, 2000)을 참조하길 바란다.

심을 누그러뜨려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정권의 책임도 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과 과거의 여러 공격적 행위 그리고 6.25 전쟁의 생체험은 남한에서 반공의 무조건적인 필요성의 정당성을 강화해왔다.

둘째, 반공을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 혹은 정반대의 경우에 초래될 손해를 강조한다. <폭력투쟁 방관할 때 민주안정 유실된다> <빈틈없는 대공태세 안정 속에 국가발전> <혼란 속에 간첩 오고 안정 속에 번영 온다> <신고하는 주민의식 선진조국 초석된다> <좌익폭력 밀어내어 민주안정 이룩하자> 등의 표어는 반공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발전/안정/민주주의이고 그 반대는 혼란/좌익폭력/폭력투쟁 등임을 제시하고 있다. 반공이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그것의 침략성만을 강조하는 부정적, 수동적 태도 혹은 이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공주의는 그것의 치명적 약점인 부정적 통합성 (negative integration)을 발전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적극적 긍정성으로 전환시킨다. 반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될 발전, 번영, 안정의 가치를 덧붙여 강조함으로써 반공 담론은 발전주의와의 친화성을 암시한다.²⁶⁾ <튼튼한 안보로 세계화로 이룩하자>는 구호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반공담론은 대체적으로 개발 독재 및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노골적인 반공주의는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이나 국가발전의 명분으로 민주주의 제약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등장하자 반공주의는 재빨리 그것을 흡수하여 새로운 의미체계를 만들어냈다. <좌익세력 경계하여 민주화합 이룩하자>, <민주위장 좌익세력 다시 보고 신고하자>, <좌익폭력 밀어내어 민주안정 이룩하자> <민주의식 저해하는 불순행동 배격하자> 같은 구호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활용하여 오히려 반공주의를 강화하려는 세련된 시도이며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일정한 경계를 통하여 민주화 운동과 방향에서 진보성을 제거하려는 매우 교묘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안정’이다. 문민정부의 반공 표어에서 ‘민주주의’ 담론은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예들은 번영, 애국, 민주, 안정, 세계화 등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목

26. 한 연구는 반공주의가 시대별로 다른 이데올로기, 특히 1960년대부터는 발전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지수, "지배이데올로기와 재생산메카니즘," 한국정치연구회편,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1989), 206면 그리고 박상훈, "'뭉쳐야 산다'에서 '세계화'까지-지배 담론을 통해서 본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한국정치연구회 심포지움 {해방 50년-한국정치의 구조와 동학 (자료집)} (1995년 12월 2일, 중앙대), 41면 참조.

표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반공주의의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혜택 및 손해에 관한 것이지만 반공주의는 일종의 위협에 가까운 개인적 차원에서의 혜택 및 손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가령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에게 눈물된다> <숨겨주면 같이 불행 신고하면 같이 불행> 등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손해에 대하여 호소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그 다음으로 반공을 위해서 요구되는 태도와 방식을 살펴보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과 남한사회 내부의 ‘좌익’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자세로 나뉜다. <신고요원 따로 없다 우리 모두 간첩신고>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4천만의 신고정신 다져지는 국가안보> <간첩신고 너나 없고 간첩자수 밤낮 없다> <간첩신고 너나 없다 수상하면 내가 먼저> <온국민의 신고정신 불순책동 막아내자> <숨은 간첩 찾아내고 자수간첩 도와주자> <침투간첩 잡아내어 적화야욕 분쇄하자> 등의 표어는 사회전체가 간첩에 대한 일상적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¹⁰⁶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설마하는 방심속에 불순분자 스며든다>에는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국민’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온국민의 신고요원화를 강조하는 반공주의는 당연히 모든 의심스러운 혹은 수상한 사람/행위에 대해 경계의 눈길을 떼지 말 것을 요구한다.²⁷⁾

안기부 지하철 광고를 보자.

[취 그림] “잘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우리가 무관심하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간첩선: 최고 1억 5천만원/간첩: 최고 1억원/좌익사범: 최고 3천만원/(폭력/계급혁명 선동, 불온 유인물 배포자)”

[도마뱀 그림] “잘 보면 보입니다./지금 당신 곁에도.../문민시대에도 간첩은 숨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림]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겉은 순한 양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모인다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겠

27. 1970년대에 유행했던 ‘간첩식별법’은 지나치고 반복적인 간첩신고 표어에 대한 예리한 풍자였다. 몇 개를 소개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간첩은 나 혼자뿐이로구나!”하고 생각하는 자. -“우리 피차에 솔직하게 말합시다”하고 말을 걸을 때, “사실은 내가 간첩이오”하고 말하고 즉시 후회하는 자. -간첩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간첩면허증을 소지했거나 갱신하려 하는 자. [홍세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 비평사, 1995), 238-239면.]

죠.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간첩의 가능성이 있고 의심하며 보면 멀쩡한 사람도 간첩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거기에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유혹’도 사람들을 유인한다. 거기에다 <신고하여 상금타고 민주안정 국가발전>의 표어가 노골적으로 강조하듯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도 사람들은 유인한다. 분단의 현실이 지속되는 한 간첩은 있기 마련이고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신고를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철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강조해야 할 정도로, 시민들이 스쳐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눈을 다시 뜨고 경계, 관찰해야 할 정도로 간첩이 그렇게 ‘우글거리는가’하는 점이다. 그러한 표어와 구호들은 순수한 대공적, 안보적 목적을 위해 유포되기보다는, 후반부에 분석하겠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을 ‘움츠리게’ 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좌익’에 관련된 표어는 더욱 그렇다. <좌익폭력 사회혼란 북한오판 초래한다> <우리 현실 바라보고 좌익세력 경계하자> <좌익세력 경계하여 민주안정 이룩하자> <민주위장 좌익세력 다시보고 신고하자> 등의 표어는 모든 좌익을 경계하고 배척해야함은 물론 민주 세력이 좌익일 수 있는 가능성을 힘주어 강조한다. 따라서 남한 내부의 ‘친북’ ‘용공’ ‘좌익’적인 모든 경향은 북한공산주의의 연장-소극적으로는 ‘불순분자’에서 적극적으로는 ‘간첩’-의 가능성을 갖는다. 체제, 국가, 반공주의 이념 등에 대한 모든 비판은 일단 ‘용공’ 혐의의 대상이다.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에게 눈물된다>라는 표어 바로 밑에는 <간첩신고는 113,112로. xx경찰서>라고 쓰여있다. 더구나 <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 나도 살펴보자>고 할 때 좌경혐의자는 간첩의 가능성이 높다.

나. 반공표어의 제2차적 의미

반공표어에 드러난 제1차적 의미는 사실 텍스트를 읽는 사람에게는 남한 사회의 정치문화적 지형을 토대로 거의 자동적으로 제2차적 의미로 암시된다. 그것이야말로 반공표어가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이며 원래의 의도적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반공표어에 드러나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 특정한 정치사회 심리적 현상이 결과되기도 한다. 그것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1) 사상적 명확성과 획일성에 대한 압력

모든 비판적 언행, 주류이탈적 언행은 ‘좌경’ ‘불순’ ‘용공’ ‘친북’의 혐의로 즉각 연결된다. <민주위장 좌익세력 다시 보고 신고하자> <민주의식 저해하

는 불순행동 배격하자><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사회혼란 조장하는 불온문서 신고하자>고 할 때 민주적 주장, 불순한 행동, 수상한 행위 등은 좌익의 혐의를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로 친북용공 혐의와 간첩혐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즉 수상-불순-좌익/좌경-친북/용공-간첩의 회로를 타고 우리들의 의심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한다. 수상한 사람과 간첩은 백지 한 장 차이인 것이다.

2) 사상적 단순성과 이분법의 요구

또한 반공주의 '좌'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은 스탈린주의에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보적 사상을 '좌익불순사상'의 카테고리로 단순화시킨다 <분별없는 좌경용공 북한오판 자초한다> <좌익세력 경계하여 민주화합 이룩하자> <좌익폭력 밀어내어 민주안정 이룩하자> <좌경용공 이적행위 경계하고 신고하자>등의 표어나 '좌익사범 신고는...'운운 할 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이미 좌파적 언행의 공간을 완전히 죄악시, 불법화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과 제37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좌경용공' 논리를 확대하면 좌파 사회민주주의자도 신고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정권을 잡은 국가들과의 교류도 끊어야 한다. 이러한 반공주의의 렌즈에서는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의 구분이 없다. 모두 다 '빨갱이'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신고하자!? 토니 블레어를 경계하자!?

따라서 전혀 좌파나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영역에서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도전도 반공/용공의 이분법에 걸려들기 쉽다. 왜냐하면 반공주의처럼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자를 순식간에 완전히 수세에 몰아넣는 좋은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 수상한데가 있어서...' '그 사람 사상이 좀 이상한 게...'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당사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도 자신을 열심히 방어해야 하는 수세적 위치에 저절로 놓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대한 혐의가 풀려도 여전히 그에 대한 주변의 의심하는 눈초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혐의를 받으면 상당한 물리적 폭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 당사자의 사상이나 행위가 '친북용공' 혹은 '좌경'이냐에 관계없이 이런 낙인찍기의 효과는 발휘된다.

3) 배타적 감시자적 태도와 순응성

반공주의는 한국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을 지배적 규범 지키기의 감시자로 만들어버린다. 24시간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남을 감시하는 태도를 항상 유

지할 것을 강요한다. 체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사람에게 ‘혹 이러다가 용공으로 오해받지 않을까’하고 겁먹게 (<좌경용공 이적행위 경계하고 신고하자> <국가발전 가로막는 용공책동 분쇄하자>), 이탈자를 목격하는 사람에게는 ‘혹 저 사람이 북에서 내려온..’ (어떤 맥주 광고는 장난이 아니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나도 살펴보자> <우리 마을 간첩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양측에게 심적 부담을 부과한다. 더구나 <밝아오는 선진조국 자수하여 동참하자> <속은 인생 어제까지 밝은 생활 오늘부터>라는 구호는 그것을 읽는 주체인 ‘나’를 간첩으로 가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첩이 분명히 아닌 우리도 그것을 읽는 순간 자신이 간첩으로 언제고 오인될 수 있다는 부담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다. 신고와 자수를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반공구호가 과연 ‘간첩’ 잡기만을 위한 것인가? 모든 이웃은 잠재적 간첩이다! 나도 그 중의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간첩신고정신(<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은 형태의 이탈 행위가 억제, 통제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²⁸⁾ 그것은 장기적으로 체제 순응력을 강제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불균형발전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약자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²⁹⁾ 이러한 부담을 통해서 억제되는 것은 단순히 진짜 간첩의 첩보활동만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수상하고 이탈적이고 진보적인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의 기득권세력에 대한 도전적 생각과 행위이다.

4) 군사동원주의적 질서관

이 회로에서는 혼란, 분열, 해이는 즉각 불순책동, 북한의 도발 위협, 안보불안과 동일시된다. <혼란 속에 간첩 오고 안정 속에 번영 온다> <좌익폭력 사회혼란 북한오판 초래한다> <분별없는 좌경용공 북괴오판 자초한다> <너와 나의 방심 속에 무너지는 국가안보> <흔들리는 안보정신 경제불안 사회

28. 다시 서준식을 인용한다. "'간첩'을 입에 올리는 것은 아직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간첩'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그것은 단지 감옥에서 너무도 긴 세월을 보낸 불쌍한 노인들과 억울한 조작 간첩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분단 체제에 마지막 남은 이 금기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며 안될 진정한 까닭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오랜 불안과 공포와 불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준만, 앞의 책, 305면에서 재인용).

29. 안철현, "제1공화국의 반공정책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권 (1994), 17면의 반공교육은 "체제에 대한 순응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분석은 과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탈반공적 사고가 공식적 반공주의를 포위하고 있는 90년대의 상황에서도 사상적 통제는 발전주의의 실리적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

불안> 따위의 구호는 자동적으로 혼란과 방심과 분열에 대한 대항정서 다시 말해 질서, 안정, 안보, 단결, 번영을 즉각 요청하는 심리를 만들어낸다. 결핍하면 언론이나 정부가 사회불안을 강조하면서 ‘안보의식 해이’ ‘기강 이완’이니 ‘우리 내부의 허점’ ‘뒤숭숭한 세대’ 운운할 때 뻔히 요청되고 강화되는 것은 ‘풀어졌더니 군기가 빠졌다’는 식의 군사주의적 질서의식이다. 최근에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나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악화되기 쉬운 이러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공포이다. <북한은 변함없다 위장평화 경계하자> <붕괴직전 북한체제 대남도발 경계하자> <인민은 기아절망 김정일은 남침준비>등의 구호에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승’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공포를 조장, 주입하려는 집요한 의도가 살아있다.

5) 공격성과 적대적 증오

6 25의 생체험과 그후에 일어났던 국지전 충돌 그리고 ‘김일성 때려 잡자’는 식의 반공교육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적대적 증오와 공격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켜 놓았다. ‘북한’과 ‘빨갱이’에 대한 증오심으로 출발한 이러한 성격의 반공주의는 이제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이나 집단 혹은 지배적 규범에서 이탈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 증오감을 유발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소한 충돌이 쉽게 극단적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은 반공주의적 냉전문화에 깔려 있는 이러한 공격성과 증오의 정서 때문이다. 그것은 의심과 경계의 요구와 결합하여 타자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유발한다.

4. 반공주의와 평화문화

앞서 설명한 내면화된 반공주의가 축이 되어 있는 냉전문화는 이제 더 이상 북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만이 아니다. 그것은 불균등 분배로부터 오는 사회적 약자나 비판적 세력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이는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가 아예 코리안의 심성의 일부로 전환되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도전과 이탈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차원의 문화가 굳건한 체계모니를 확보했다.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들어온다.”³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의 눈이 타인의 눈, 정확하게 말하면 소수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생산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이미 대체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30. 박홍/남용우, {레드 바이러스} (서울: 기독교청년문화연구소, 생명문화연구소, 1997), 1면.

반세기를 넘게 재생산된 반공주의 회로는 모든 불법적이고 부패한 현실을 코앞에서 보면서도 그럭저럭 순응하고 사는 버릇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것에 대한 도전이 도전자 개인에게 쓸모 없는 고통과 번민을 안겨줄 것이라는 공포 (“너 혼자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세상이 바뀌겠냐”), 이것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적 범죄 행위에 대한 동참과 인정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뜯어먹으며 사는 거지. 도덕군자라고 별 수 있냐?”)의 정치 사회적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그것은 ‘공안’ 당국을 정점으로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 오래다. 그것을 단순히 교육부/국가정보원이나 극우언론이 강요하거나 조작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이제 그것은 우리 몸속에 녹아 있는 일종의 생체권력이다.

물론 서서히 냉전문화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남북간의 긴장 고조나 남한사회의 위기 시에 순식간에 전면으로 부상하여 안보최우선성을 앞세우고 정당화하는 집단적 결집을 요구하면서 실천적 힘으로 전환한다. 나는 이러한 성격의 냉전문화가 북한사회에도 유사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본다.

반공주의적 냉전문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남긴다. 첫째, 앞서 길게 설명했듯이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사회와 시민의 형성에 치명적 장애가 된다. 감시하고 불안해하고 공격하고 적과 동지로 사람을 나누는 태도는 일종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다. 끊임없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국민’ ‘국가’ ‘민족’ ‘안보’의 이름으로 강박함으로써 다양한 정체성-성적 계층적, 개체적 정체성 등을 억압하는 것도 병리적이다. 그러한 병리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한 우리사회와 그 구성원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렵다. 둘째 반공주의적 냉전문화가 우리사회의 주류적 문화적 토대가 되어 있는 한 안보/국가/군사주의가 항상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한 호응성을 제거하기 어렵다. 남한사회에서는 분단과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구조에 뿌리를 갖고 있는 군산학복합체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전쟁을 원한다고 까지는 말하기 어렵다해도 전쟁의 가능성을 환기시키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정당화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유사시에 그것은 냉전문화의 뒷받침에 힘입어 ‘전쟁불사’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사회의 정신적 건강함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반공반북주의적 냉전문화를 다원주의적 평화지향적 문화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지향적 세계관이 내면화되는 이런 과정은 일회적 사건이나 도덕적 울분 혹은 정치적 비판에 의해서 쉽게 이

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인내심 있고 포용력 있는 교육과 홍보, 계몽 등에 의해 서서히 생겨나는 정치심리적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 비판적 이탈적 언행에 대한 관용, 폭력을 배제하는 합리적 타협과 협상의 존중, 민주주의적 질서의 내면화, 이웃과 생활세계에 대한 이완된 태도, 평화에 대한 일상적 욕망을 유발하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변화과정에서, 차이를 차별로 전환하는 폭력적 가부장제적 질서에 반대하고 그것의 극복을 모색하는 성평등운동이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이유는 충분하다.

9 평화를 위한 대화 :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김숙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2002.11.21)

당신은 평화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정다운 언어로 평화운동을 말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평화를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자신이 미소짓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소짓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결코 평화운동에 기여할 수 없다.³¹⁾

나의 마음은 평화로운가

나와의 평화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과의 불화는 없는가, 가까운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는가, 나는 충분히 안전한가, 자신과 주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가,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가치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평화를 느끼는가, 자신 안에 평화의 부재는 없는가.

내가 평화로운 심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평화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함께 가는 평화, 쉽게 하는 평화, 서로를 보듬고 축복하는 문화, 나를 평화롭게 하는 평화, 나를 필요로 하는 평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차이를 넘어....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화, 서로 다를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평화, 이러한 평화가 기본이 되는 평화운동을 할 수 있을까?

평화운동은 이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간 평화운동은 평화운동의 주요변수인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주로 운동을 전개해왔고 정치적 변수에 상당히 좌우지되는 경향이 많았다. 일정 정도 정치적 변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평화의제들을 일정한 정치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겠지만, 기본 변수는 정치적인 변수를 넘어 대중의 일상 삶 속 깊이 개인의 구체적인 이해

31) 2000. 턱날한 저, 서보경 역.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지혜의 나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정치적 변수에 기반한 평화운동은 소수의 정치 지도자의 결단과 이론적 전문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대중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다.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내면과 일상, 구조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여야 한다. 기존의 고전적인 운동방식(정치적 변수에 따른 운동 과제 설정)을 넘어서 평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인의 일상과 사회통합을 보아야 한다. 국가나 민족, 세계의 평화로서 거대담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생활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선 출발하여야 평화운동이 인간을 위한 현실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구체적인 대상을 위한, 그들을 그 지역을 위해 가시적으로 성과나 혜택이 보이는 그러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평화운동, 사람이 하는 평화운동, 보다 많은 사람이 하는, 개인에서 조직,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반평화를 통찰해서 보는 평화의 눈을 키워야 한다.

우리 삶 속에 평화가 멀리 있는 이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물으면 “평화”라고 대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차원, 가족의 차원, 제도와 국가의 차원 등에서. 그러나 평화를 구체적으로 느끼거나 표현하는데는 무척 곤혹스러워 한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거창하고 정치적인 것 같아서 거리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평화의 현 주소이다. 무엇이 우리들의 생각에서 평화를 멀리, 또 어렵게, 내 문제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음 몇 가지 지점에서 평화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원인을 찾아 볼까 한다.

개인의 인권에서 출발하지 않는 평화 그리고 안보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오늘은 내가 쏠게,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 풀어줬더니 군기³²⁾가 빠졌구만. 군기 잡아. 군번이 어떻게 되나. 지원사격, 확인사살 ... 이러한 일상화된 군사용어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많은 문제를 군대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담겨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할 수 있다.

32) 군기(軍紀):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나 풍기,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년

자신이 태어난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북한도 마찬가지) 전국이 군사시설로 가득찬 거대한 군사기지, 병영국가이다.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모든 도처에서 군사시설의 흔적을 볼 수 있고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한반도 군사지도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면 군사기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매매춘 문화뿐만 아니라 군대폭력, 군의문사, 미군주둔으로 인한 주한미군범죄, 무기비리, 병역비리, 군가산점과 병역제도의 모순, 대인지뢰피해자 등이 보인다. 나아가 오랜 군사권력의 통치로 인한 군사주의문화와 폐해에 너무나 둔감한 대중과 여성의 삶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 전쟁의 위기에 대한 긴장감 조성, 또 이를 대비한 유사시 긴급수용의 자세를 요구(민방위훈련), 국가방어의 신성화, 국민개병제, 30년 이상의 군사통치가 가능했던 토대와 그 이념적 기반, 거기에 따른 문화 형성 등 한 사회의 군사화 과정은 군대문화의 시민사회로의 접목인 군사문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미 사람들의 내면과 일상에 하나의 이념이나 가치체계로 자리잡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군사주의는 전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체계나 전쟁, 전쟁준비와 관련한 사회적 행동의 총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33)

재클린 콕은 현대의 민족이나 우방들 또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적 폭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의 줄기가 군사주의라고 규정했다.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해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초점이 가 있는 군사주의는 남자는 강해야 하며 힘의 논리에 적응하여 성공해야한다는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병제에 의해 군대에 복무를 해야하고 그의 가족들 또한 군대폭력의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제대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도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병역인구가 과잉현상이 되어도 합리적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방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고 국방부는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다. 병력수급의 모순 뿐만 아니라 변화된 정세와 인권의 자유가 무시된 징병제, 군대내의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풍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34) 본인의 의사와 상

33) 권인숙, "우리들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평화아카데미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8-109쪽

관없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사람을 죽여야하는 징병제에 의한 사병근무는 제도적인 합리성의 관점을 넘어 도덕성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³⁵⁾

여기서 우리는 인권을 위해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인간의 인권을 위해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을 조작하는 안보는 너무나 역설적이다. 분단과 군사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강압적인 징병제도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당사자가 인권의 차원에서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보다 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러한 군사주의에 동의하는 것인가, 사회적응을 위한 자발적 자기 인권의 중지행위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포기인가 보류인가.

일상에서의 군사주의 현상은 획일적인 교육제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청소년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이자 자기정체성을 향해 고민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획일적인 수업방식과 교과과목, 대입전망, 두발규제, 복장규제, 지시문화... 선택의 자유가 없다. 다양한 개성, 다양한 희망을 가진 아이들이 선택할 학교가 다양하지 않다. 오직 명령과 복종, 전체주의

34) 김창수, "한국징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1, 4-7쪽

그는 향후 병력규모를 남북 60만 상비병력규모로 남한의 30만 병력을 16만 직업군인과 14만 지원병으로 구성된 정예부대로 구성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의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여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제기하였는데 장교와 하사관은 직업군인제, 사병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직업군인제는 군인으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로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의 지급과 함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35) *홍창욱,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군사제도와 징병제에 깃뚫힌 양심",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1, 24-26쪽

현재 '양심적 거부자'로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는 현재 1400여명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고, 단지 종교적 교리로서가 아닌 그 교리가 폭력과 살상에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분단상황인 한국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때 병역에 준하는 다른 의무가 적용되지 못하고 병역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게 된다. 그 근거는 20세 이상의 남성이 누구나 져야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에 준한다는 것이고 거부자들은 전과로 인해 평생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양심적 거부권은 종교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전권이나 살상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1년4월1일 KBS 9시 저녁뉴스 방영

적 방식은 다양성과 인권, 자발성, 창의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에 자율이 아닌 규율과 규제의 군대식 문화가 답습되고 군사주의 문화로 운영되는 폐해를 답습하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자율과 인권의식을 가진 독립적인 시민을 양산하지 못하는 교육철학의 빈곤,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성찰의 문제와 함께 군사주의에 대한 인권의식의 부재가 아닐까.

그간 군사정권들은 국민들에게 전쟁가능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보불감증까지 강조한 바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비가 정부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해도 그 지출내역과 쏟아지는 다양한 국방비리에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시민의식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군사주의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6.25전쟁이후 군사안보가 정권안보의 논리로 사용되면서 냉전, 반공주의와 함께 결합하여 안보이데올로기가 끝없이 재생산되는 군사주의 영역은 거대한 성역으로 아무도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신의 돈과 귀중한 생명과 시간을 모두

바치면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발언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이미 제도적 군사주의는 일상에서 사람들의 내면에 ‘우리 안의 군사주의’ ‘내 안의 군사주의’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보논리에 의해 국민의 일상에 내면에 억압과 부자유, 불안과 긴장이 자리잡게 되었다면 바로 그 안보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안보는 군사적인 방법, 무기에 의한 힘에 의한 안보가 아니라 정부와 비정부의 외교능력, 갈등을 조정하는 협상과 중재 등의 능력과 기술을 제고하여 평화에 의한 합리적인 안보, 인간을 위한 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평화능력의 향상을 통해 폭력과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 안의 또 하나의 자율신경, 반공주의

군사주의와 함께 반공주의는 한국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핵심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냉전,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주요 기반이기도 하다.

반공주의는 이제 단순히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가 아니고 한국사회의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생체권력이 되어버렸다....외부적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서.... 반공주의는 이미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과 가슴 속에 ‘한국적 정서’의 일부로 내면화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국가권력 못지 않은 또 하나의

권력인 것이다.³⁶⁾

권혁범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반공주의는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비난을 사회구성원의 정신과 가슴속에 오랜 시간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특정한 정치 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유발시키는 기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반공주의 회로판’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정해진 회로판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 대응(예:수상-불순-좌익/좌경-친북-용공-간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상적 획일성, 단순성, 배타적 감시자적 태도, 굴종적 순응주의, 군사 동원주의 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⁷⁾

반공법, 국가보안법, 반공표어 등을 통해 사람 들 사이에 불신과 긴장을 조장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의 내면을 억압하고 위축시키고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탄압해 왔다. 내면화된 반공주의는 냉전³⁸⁾문화의 축으로서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모든 비판적 세력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였다. 모든 형태의 사회적 도전과 이탈을 두려워 하는 사회적 심리가 한국인의 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⁹⁾ 자신의 눈보다 타인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타인의 시선이 중심되는 삶을 살도록 강요당한 것이다.

반공주의적 냉전문화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와 시민 형성에 치명적인 장애와 함께 사람을 적과 동지로 나누는 병리적 현상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든다. 또한 유사시 물리적 충돌에 대한 호응성이 높은 위험성을 갖게 된다.⁴⁰⁾

나는 언젠가부터 태극기를 보면 태극마크가 음양의 조화가 아니라 레드와 블루의 대치, 남북의 대립, 대결을 느끼게 되었다. 순간 순간 내 의식 안에 뿌리깊은 체제이데올로기를 체감한다. 가장 큰 고민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 무언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 집단주의 사고를 강요받으면서도 공동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자신의 혼란이 우리 현대사의 단면이라

36)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출판 2000. 61쪽

37) 권혁범, "우리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96쪽

38) 냉전(冷戰): (군사 행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간의 대립상태,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년

39) 권혁범, "우리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4쪽

40) 위 자료 인용, 105쪽

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 긴장의, 정서적 불안의 뿌리를 찾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던 송두율 교수의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특정신문의 칼럼 기고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언론과 정당의 색깔 공세가 이어졌다. 또 다시 불거진 색깔논쟁은 뿌리깊은 냉전문화에 힘입은 매카시즘적⁴¹⁾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연이은 색깔공세로 참여연대 등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게 “시민운동의 외피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체를 가리지 말라”며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 일부단체들은 현 정부가 이들과 합세해 좌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냉전에의 회귀를 기도하고 있다.(2001, 5, 10 한겨레, 안수찬 기자)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을 좌경집단으로 규정하고, 좌우익의 대립을 조장하여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가진 자들의 공격적인 방어기제로서 여전히 냉전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색깔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희 교수는 최근 한겨레신문(2001. 3. 30 일자) 기고에서 “아무리 훌륭한 대북정책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도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남한 내부에, 나아가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냉전의식을 깨지 않는 한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역사관과 세계관이 개혁될 수 있도록 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합의나 선언은 군사적 변수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쉽게 와해될 수 있다. 정말 향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바꿔나가는 일이다. 그것이 획일적, 폐쇄적, 배타적인 반공주의냉전문화에 길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 경계에서 벗어나 남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문화로 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의식세계가 진정 자연스럽고 자유롭기 위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

- 우리가 만든 집단주의, 관념주의

집단의 이해와 투쟁의 성과가 제일로 강조되는 권위적·남성적 집단 분위기에서, 여성이라는 소수 집단이 자기 문제를 발현하고 성차(性差)를 인정받으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찾아나가는 활동이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41) 매카시즘(McCarthyism): 극단적인 반공주의 및 용공적인 언론·사상·정치활동에 대한 억압을 뜻하는 말,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년

우리는 누구인가, 위계와 권위의 멘탈리티⁴³⁾를 가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많이 생각해야 한다” ... 권인숙씨는 80년대 시대상황에 청춘을 바친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집단적 멘탈리티의 문제를 제기한다.

식민지, 전쟁, 분단, 개발, 군부독재 등으로 점철된 현대사 속에서 우리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의 뿌리를 들여다 보면 체제유지를 위한 교육과 의무로 억압된,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 온 자신과 함께 독재타도, 계급, 민중, 역사, 민주주의, 통일, 민족이라는 거대담론, 이념적 당위에 몰두하며 기존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고 맞서며 자기 자신까지 부정했던 자신이 동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혼재된 삶이 동시대 동일인물 속에서 함께 있었음을.

시대적 상황의 절박성에 의해 일정한 대의만 공유된다면 집단내부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함께 갈 수 밖에 없었던, 그리하여 또다시 권위주의 집단문화를 답습하는... 결국 대안 세력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한국사회의 파시즘적 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근래 화두로 떠오른 ‘우리 안의 파시즘’, ‘일상적 파시즘’의 문제 제기는 정치적, 제도적 파시즘의 극복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일상적 파시즘 즉 우리의 의식과 일상적 삶의 심층에 깊이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규율권력의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치영역에서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진보적 이념이 삶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관념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 생산된 시대적 경험에서 사실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다. 지나친 이데올로기 중심이 현실과 세계,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개인과 조직, 인간과 역사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리적 관념적 사고는 이념은 진보적이나 삶은 보수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하나의 예로 여성을 동원대상으로 주변적인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다. 군사적 권위주의 문화는 여성을 함께 가야할 동반자라기 보다는 보조적인 존재라는 남성중심적이고 집단적인 위계문화를 낳았고 진보적인 남성조차도

42) 권인숙, 1999, '우리는 누구인가- 위계와 권위의 멘탈리티', 『당대비평』 겨울호

43) 멘탈리티 mentality : 정신성, 심성, 지성, 심적 상태, 심리, 사고방식, 성향, 성격

44) 임지현, "파시즘은 살아있다".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13쪽

이 관념과 파시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계층보다도 여성에게 가혹하고 당당하게 집단적 담합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들쥐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80년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의 말

지배와 피지배의 담론 즉 권력담론에 익숙한 우리는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동경하는 습관이 있다. 권위주의 통치에 너무도 익숙한 그래서 모든 하부집단, 운동단체까지도 권위주의문화에 젖어 있다. 한 사람의 주인을 위해 만인이 종이 되는 사회,,, 사람의 가치를 쉽게 대상화, 수단화시킨 반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내가 우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성공, 출세, 일등, 일류주의 등의 권력담론이 내가 속한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더 유명해야 하고 강고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모두 함께 나아가며 발전하는 연대정신을 깨고 다른 조직 위에 군림하려는 패권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상대적 진보에 가려진 위계와 권위문화 또 한편의 내면화된 힘의 논리의 표출, 집단주의의 발로이다.

힘의 논리가 자기중심주의를 낳고 집단주의, 민족중심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낳는다. ‘이상수의 동서횡단’(한겨레21, 4월26일 355호)에서 이상수는 “우리는 일본의 극우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의 똑같은 자국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말한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 등 소수의 우익에 의해 극우로 치닫는 현상에 대해 도미나가 겐이치는 “헌법상으로 일본은 정치적 근대화를 달성했지만 단 한번도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한 경험이 없고 위로부터의 개혁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나 시민사회의 단계를 거친 서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용덕교수는 ‘이는 결국 독자적인 자기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선 리더십이 잘못돼도 저항보다는 모두 따라가는 양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한겨레신문 2001년4월17일 21면 ‘적지만 강한 우익, 광기의 구심력’ 김영희기자)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율적인 인간이 형성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국가주의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소수의 광기적이고 자폐적인 집단에 좌우되

는 이유가 국민들의 자기정체성이 없다는데 있는 것이라니.....!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인간의 내면에 규율권력을 심어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를 생산하고 맹종을 요구하며 민주주의 형성을 방해한다. 힘의 논리로는 민주적 시민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성숙한 인간과 인간의 자발적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있는 반평화의 파시즘을 몰아내야 한다.

집단주의나 관념주의, 즉 군사주의와 반공주의에 기반한 파시즘의 내면화된 결과로서 우리 내면의 파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체성을 억압하고 왜곡시켜 더불어 사는 능력을 파괴시키는데 있다. 정상적인 사회는 한 개인이 한 사회에 대한 건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그에 기반한 진정한 자존감,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나는 그간의 모든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이다.

평화를 위한 대안적 가치, 기술 훈련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획일적인 군사주의,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 된 군사안보, 반공주의적 냉전문화, 우리 내면의 파시즘 등의 반평화를 넘을 수 있는 평화지향적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가 흔히 겪는 조직생활의 위기는 우리 안의 공존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화적 공존 능력을 우리부터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일상화, 생활화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의 형성, 기술훈련 등이 다양하게 요청된다.

평화교육의 일상화

함께 존중하며 사는 평화문화의 형성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화교육이 절실하다. “전쟁의 근원, 폭력문화의 근절을 위해 평화교육운동의 세계적 차원의 전개와 교육부의 평화교육의 의무적 실시, 지원”의 문제가 3차 헤이그평화회의의 또 하나의 핵심 아젠다였다.⁴⁵⁾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극소수의 평화단체에 의해만 평화교육이 이뤄져왔다. 평화교육의 부재 속에

45) 참조: 헤이그 평화회의 www.haguepeace.org

서 평화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긴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다. 제도적 정치적 변화만으로 될 수 없고 개개인의 세계관이 확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성찰이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전문화, 즉 개인에서 구조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관용하기

라틴어 *tolerare*에서 온 톨레랑스,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말은 16세기 초에 처음 등장하여 18세기에는 하나의 가치로서 확립되었고, 그 정의는 오늘날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⁴⁶⁾ 우리 말로 ‘관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말 사정에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톨레랑스한다는 것, 그것은 견딘다는 것입니다.....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⁴⁷⁾ 필리프 사시에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성은 자연의 법칙이고 과오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전혀 동일한 정신유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관용할 수 있는 조건은 둘 이상의 대상들 사이의 갈등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에 기여하되 불관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은 힘이 없어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관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관용하는 것이다. 즉 자비를 베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거나 싫지만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행위의 자발적 중지로서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⁴⁹⁾

관용은 비폭력 합리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갈등에서 국제적 갈등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전략이며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용의 한계로는 “언제 어디까지 톨레랑스할 것인가?”하는 문제로서 톨레랑스를

46) 필리프 사시에 저, 홍세화 역, 『왜 톨레랑스인가』, 상형문자, 29-33쪽

47) 위의 글, 16쪽

48) 위의 글, 67-68쪽 79쪽

49) 김용환, '관용·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도덕적 명령', 평화교육자료집 21세기 평화운동과 여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95-96쪽

보존하기 위해 “어느 선에서 건드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를 가치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무제한적인 톨레랑스는 강자의,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관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정당치 못한 것, 불법, 부도덕, 전쟁, 폭력 등이 불관용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기 이익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불관용으로 가게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선입견, 상실의 두려움, 공포 등등이.

우리에게 관용이 요청되는 곳은 너무나 많다. 이데올로기 극복과 민족의 이질성 극복 즉각각의 체제에 익숙해진 서로의 것들을 관용하기 위해, 타자의 권리존중을 위한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해, 인종차별 의식의 극복을 위해, 배타적 자국 중심주의의 극복 위해.⁵⁰⁾ 아이를 믿고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자녀교육과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도 서로에 대한 부정적 행위의 자발적 중지가 요청되는 부부관계 등 가정에서도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

그러나 우리는 관용에 대해 너무 관용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관용철학이나 갈등해소방법론 등이 서구중심적이고 강자의 논리이며 한국상황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비판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철학과 방법의 한국사회 적용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몫이지 이것을 소개하는 그들의 몫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의 타문화에 대한 비수용적인 태도를 볼 때 우리가 타문화에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지난 199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관용의 해’였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이라는 유엔의 창설정신 즉 자기정체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자 노력이었다.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를 이어 2001년은 ‘문명간 대화의 해’로 선포되어 있다.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21세기 문명간의 충돌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⁵¹⁾ 관용의 정신이 없이는 갈등을 해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이상주의적 발상이다. 갈등은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언제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차선책으로 관용 등의 철학을 통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갈등해결 능력 기르기

50) 김용환, 위의 글, 98-102쪽

51) 김용환, 위의 글, 93-94쪽

차이를 없앨 수는 없다.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차이가 갈등과 분쟁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이와 다름을 다루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가치와 문화의 차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삶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성찰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차이를 수용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배양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과의 갈등, 가족, 친구, 동료, 조직, 국가 간의 갈등과 분열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 갈등해결 기술은 평화를 만들기 위한 기술로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기술, 객관적인 안목을 형성하게 하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과 함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 갈등해소 즉 '폭력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은 1999년 3차 헤이그국제평화회의의 핵심적인 의제였다.

갈등해결 기술을 위한 훈련 내용에는 갈등의 의미, 갈등해결의 수단과 과정, 갈등·분쟁에 대처하는 유형, 갈등해결 과정의 의미, 협동적 문제 해결의 과정, 갈등해결 방법으로서 협상의 원칙, 중재와 공공분재의 해결, 국제분쟁과 평화만들기 등이 있다.⁵²⁾ 갈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섬세한 접근과 기본적인 태도와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등에 따른 이해관계와 처지에 따라 더 구체적인 접근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권위적인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여 왔기 때문에 협상, 중재 등의 기술과 경험이 열악하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으로서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이 아직은 극소수의 전문가를 훈련하는 단계에 있지만 일상의 평화형성과 평화운동의 기술로 한국상황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의 크고 작은 분쟁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는 시민평화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배려와 돌봄의 윤리 수용

평화운동은 타자의 고통을 연민의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사려깊은 덕목이 요청되는 운동이다. 루딕은 여성의 생활 상의 실천이나 노동방식이 생명을 돌보고 배려하는 데에 가깝기 때문에 평화운동에 대한 감수성이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성적 사고와 여성이 지닌 '돌봄의 윤리'는 군사주의 등 기존의 지배적 사고방식과 실천을 비판할 수 있는 우월한 관점이며 일상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말한다.⁵³⁾

52) 강영진, 「갈등분쟁 해결 트레이닝 매뉴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 자주 평화통일민족회의, 미국친우봉사회가 주최한 갈등해소훈련워크샵자료집, 2000

53) 정현백,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1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일상성과 생명에 대한 친화력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여성들은 전쟁과 폭력 및 반평화적인 현상을 거부하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평화지향적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돌봄과 배려의 여성윤리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윤리로 발전되어 다양한 인간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만드는 평화로운 삶

일상의 영역에는 전통, 규범, 습관, 생활양식, 언어 등이 포함된다. 일상엔 ‘문화’라는 이름 하에 총체적인 삶의 양식을 담고 있고 그 일상 안에는 뿌리깊은 권력과 억압이라는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다.⁵⁴⁾ ‘일상’에서 평화를 다룬다는 것은 개인의 경험 세계를 섬세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구조적인 반평화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를 분석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구조적인 반평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그간 평화운동은 눈앞의 이익을 당장 개인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없는 특성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평화운동은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일상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평화적인 불편함에 너무 익숙해져 둔감한 우리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모든 것을 평화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는 노력이 평화운동의 과정이자 본질이며 시작이며 끝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일상화된 반평화를 역사적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의 눈으로 일관성 있게 성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에서 평화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보편적 권리, 인권으로 자리잡기에는 평화에 대한 우리들의 권리의식과 의무감이 동시에 너무나 부족하다. 평화를 얻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책임이 뒤따라야 가능할 것이다. 평화운동가들이 군사주의자들의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에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삶 속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191-192쪽

54) 김현미, '일상의 반평화와 여성의 삶',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31쪽

일상에서 평화를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기

- * 평화의 눈으로 세상보기
- *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기
- * 다양한 가치와 사람 만나기
- * 차이를 인정하는 습관 기르기
- * 남이 옳을 수 있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 * 남의 생각을 경청하기,
- * 나와 다른 세상으로 여행하기-다니자 어디로든, 평화기행이면 더 좋고.
- *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찾기
- * 명상수행으로 자기 활동 속에 평화 담기
- * 평화로운 몸 가꾸기
- * 평화주의자의 삶 돌아보기

어떤 평화친구의 '평화를 만든다는 것'

평화는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노력이다. 여기서 공존은 강자가 살기 위해 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허울이 아니라 그야말로 함께 산다는 것, 모두가 주체가 된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평화정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는 평화란 어떤 정치적 격변을 통해 정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화란 어떤 행위의 정형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집단의 노력'을 동반한 '지향과 과정'이다. 진정한 평화는 구체적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폭력에 못 견뎌 하는 심성이 성숙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적 폭력, 내면의 파시즘에 저항할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 그 폭력에 몸서리치도록 민감해질 수 있는 것, 그 노력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폭력과 차별에 익숙한 사회성, 그것을 가능케하는 인식의 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 그 폭력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무엇 무엇을 하자는 선언'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⁵⁵⁾

55) 정유진, '평화를 만든다는 것', 제주인권학술회의2000, 400쪽

[평화를 위한 대화]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부터 평화로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각각 자신의 '평화롭지 못했던 기억'과 '평화로웠던 기억'을 서로 나누어보며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소중하다. 모두의 진솔한 경험을 차례로 다 듣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평화'가 아닌, '마음으로 와 닿는 진실한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에 대해 얘기하기>

- 평화학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
- '개인이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우리가 바라는 개인, 가정, 국가, 세계의 모습
- '우리가 바라는 평화' -> 나무 그림 만들기
- 참가자들이 붙인 희망사항들을 서로 나누고, 그 속에 담긴 의미 나누기
- 춤 명상 : 자신이 받은 억압과, 자신이 바라는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세상의 이미지 등을 음악에 맞춰 몸으로 표현하기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평화를 위한 대화 내용}

<개인>

내가 원하는 평화

좋고 싫음을 “부드럽게” 확실히 표현하기

몸과 마음의 평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짜증으로부터의 해방

준비된 통일일꾼

자유속에 태어나고 자유속에 살다

자연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 명상, 영적으로 느끼는 평화로움

나 스스로가 평화를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되어있기를...

미소짓는 얼굴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나 자신을 잘 제어할 때 평화로운 것 같아요.

개인이 느끼는 평화로... 가족을 사랑. 평등적인 삶 추구

남이섬의 숲길을 같이 걸을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정>

신뢰와 배려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미소지으면서 밝게 살 수 있다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기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어떠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강요받지 않는 것)

모든 관계의 평등 그 바탕에서의 정의, 평화

책임감만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다같이 있는 곳이 되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국가>

평화, 통일

인간, 사람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국가

약자보호, 빈부격차 해소

절대 빈곤 퇴치

전쟁에 대한 불안이 없는 국가

NO 국가, 인류는 가족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것

내가 진정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나라였으면...

여성정책 실현하는 대통령

<우주>

어느 한 힘센 나라가 자기 맘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기를...

아주 작은 생명의 존재도 인식하며 살기

대량 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가...

자연의 어머니, 인간의 행위로 어머니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지구에서의 평화)

쓰레기 NO - 모든 것이 평화롭게 순환되어야...

을 겨울에도 길거리를 방황하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도둑고양이들... 추위와 굶주림을 잘 견디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인종차별 철폐, 침략반대

지구야, 아프지 말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평화로운 놀이터

너와 나를 가르는 철조망이 없는 너

온누리(우주) 미소, 모두 함께 노래 춤(자연치유)

10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여성평화운동

이김현숙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2002.11.28)

1. 평화란 무엇인가?

만일 여러분에게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처음 반응은 머뭇거림일 것이다. 평화에 대한 기본 상이 얼른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1998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평화만들기 바자회’를 연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작은 물건 기증과 함께 ‘평화 메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때 여러분이 보여준 공통된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써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물건만 보내고 메세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평화’란 말이 우리에게 절실한 말이면서도 여전히 낯설고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⁵⁶⁾.

그러면 과연 평화연구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평화개념에 대한 정의는 평화연구자와 문화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평화연구자들은 평화의 중심문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무력에 의한 지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Betty Reardon, p.2) 따라서 일차적인 평화개념은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평화연구자들은 이것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이름 붙인다. 개인이나, 집단들, 그리고 정부들 사이에 직접적인 폭력(물리적, 언어적, 심리적)이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전쟁이나 무력갈등,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반 대중의 평화 이해는 바로 이 소극적 평화개념에 머물러 있다. 소극적 평화개념에서는 안보도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으로 협소해진다.

이에 반해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를 평화로 보는 적극적 개념도 있다. 이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 권력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공평한 법적 보호와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상태를 평화로 정의하는 것이다.(Galtung)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문서도 평화를 ‘전쟁, 무력갈등, 군사적 점령, 외세개입과 같은 폭력을 방지하고 강제력의 역할과 위협을 감소시키

56) 7,80년대까지만 해도 ‘평화’란 말은 좌익적 용어로 간주되곤 했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정의, 평등, 완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FLS) 1985, para. 13). 그러므로 평화연구자 베티 리어든(Betty Reardon)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폭력을 봉쇄하며 지구를 보전하는 인간답고 공평한 지구적 사회 조건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가로막는 빈곤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불의와 불평등이 종종 국제긴장과 불신과 무력적 위협과 무력갈등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etty Reardon, p. 5). 대일 화이트(C. Dale White) 감독은 평화를 위한 행동은 종종 액막이 굿(exorcism)과 같은 것이라 말하고 평화를 '굶주림을 만들어 내는 체제(hunger-making system : poverty)', '전쟁을 만들어내는 체제(war-making system : militarism)', '사막을 만들어 내는 체제(desert-making system : ecological crisis)', 지배체제(domination system : patriarchy)를 막아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C. Dale White, p.27-28, 128). 따라서 적극적 평화 개념에서는 안보의 개념도 인간안보라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2. 왜 '여성과 평화'인가?

평화운동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은 아주 일찍부터 평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망을 키워왔으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다.⁵⁷⁾ 도대체 무엇이 여성들로 하여금 평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일까?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는 우선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파괴적인 자원낭비에 대한 여성들의 비극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은 남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준다. 남자는 전쟁터에서, 여성은 후방에서 전쟁의 희생자가 된다. 최근의 전쟁에서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여성들과 어린이들 중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력갈등 시, 여성들은 사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 때문에 무력갈등시 무차별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강간,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매춘, 성적 노예제(위안부), 온갖 형태의 성적 고문과 성적 모욕으로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격을 받는다. 여성들은 전쟁 중에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가족들(자녀, 노인, 약자, 부상자)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전쟁으로 먹을 것 ,

57) BC 411년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희곡, '리시스트라타' 이름으로(In Lysistrata)'에 나오는 여자 영웅의 이름은 군대를 해산시키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리시스타는 전 그리스 여성들을 선동해서 아테네의 보물들과 아크로 폴리스를 포위하고 남자들이 전쟁을 끝내고 동의할 때까지 섹스 스트라이크(sex strike)를 일으킬 것을 선언한다.

입을 것이 모두 파괴되거나 모든 물자가 전쟁터로 가버리고 나면 여성들은 굶주리는 가족들을 먹이고 안전(security)을 도모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이 전사하고 나면, 여성의 지위와 안전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달려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달리 생계수단이 없는 과부 또는 여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과 가족부양의 고통을 일생 지고 살아야 한다.

전쟁은 또한 생산과 인간의 복지에 사용해야 할 엄청난 자원을 파괴적으로 소모한다. 평화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세계 빈곤의 더 큰 짐을 지고 기본생계와 안전을 위협받으며 삶을 꾸려 가는데 전쟁준비와 전쟁에 쓰는 경비의 일부분만 사용해도 이들은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아직도 무력갈등, 긴장, 적대감, 그리고 위협이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들로 하여금 더 파괴적이고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국방비로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수십년 동안 미국 과학자와 기술자의 40% 이상이 파괴적인 무기와 그 지원 기술 조식을 위해 일해왔다(대일, 133). 이와 같이 막대한 세계자원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기 보다 생명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소모되고 있다.

여성과 평화의 또다른 연결성은 양자 모두 정당화 될 수 없는 지배체제들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성들도 평화정책도 모두 개인과 집단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강제력의 사용이나 특권적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Karen J. Warren and Duane L. Cady, P.6). 20세기 중반 이후 여성들은 ‘다름(difference)’을 억압과 배제의 근거로 만드는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세력, 대항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성을 이유로 한 인간 억압의 종식을 요구하고 남성을 여성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가부장제의 종식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 여성들은 성(gender)의 사회적 구성이 인종, 계급, 기호, 연령, 종교,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어떤 여성운동도 인종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이성애적 성차별주의, 연령차별주의, 종족중심주의,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등의 복합적인 억압을 종식시키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표명하고 나섰다. 가부장제는 타자에 대한 지배를 기초로 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주의(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전쟁주의, 자연차별주의 등과 이런 차별주의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관행들에 대한 강제력)들을 인가하고 유지하고 영속시키는 기제이며 이런 차별주의들이 곧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갈등과 전쟁의 원인들임을 지적하고 나섰다(Karen J. Warren and Duane L. Cady, p.7).

무기로 결정되는 전쟁은 극단적인 지배형태다. 무력이나 생명살상과 같은 폭력을 통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제압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가부장제 비판이

나 평화정책은 궁극적으로 불의한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비전을 가진다. 이들은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의 관점(feminist perspective)에서 가부장제 질서를 위계적 통제와 지배 질서로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환경파괴, 전쟁, 그리고 핵무기의 증대를 가부장제적 사고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평등하고 자연친화적이고 평화적인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3. 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평화연구자 베티 리어든은 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여성들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 즉 생득권(birthright)이 보장되는 공평한 세계질서를 구현하고자 한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가난한자들의 기본적 필요(먹고, 입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를 충족시키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약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난한 자와 어린이와 여성과 세계의 약자들이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요컨대 전 인간 가족에게 진정한 안보 또는 안전(security)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성들은 사회 한 분야의 박탈이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 정책을 세울 때는 그것이 약자들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약자들의 기본적인 필요(basic human need)를 충족시키는 사회, 약한 것(vulnerability)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가 여성들이 꿈꾸는 평화세상의 비전이다.

둘째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비전이다(equality). 수세기 동안 억압과 배제로 특징되는 불평등한 삶을 살아온 여성들은 평등한 남녀관계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어 왔다.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인권이 평등하게 인식되고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이들은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권은 모든 영역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더 잘 실현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사회질서를 경영하고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책임을 남성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간의 평등한 참여는 지구적 안보(global security)를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영역과 정책결정에 여성의 관점과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세계문제와 안보문제 해결에 보다 더 총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치반영은 전쟁을 극복하고 구조적 폭력을 줄이고 참된 평화를 만드는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폭력이 극복된 세상, 무장이 해제된 세상(demilitarized and disarmed world)에 대한 비전이다. 여성들은 일반적인 전쟁의 폭력과 억압, 그리고 여성을 괴롭히는 특별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무장 해제되고 비군사화된 세계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 폭력을 초월하는 중요한 길은 경제, 정치 구조의 비군사화와 함께 사회 관습과 사고방식의 비군사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여성학자들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통합성을 가진 존재로 보도록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성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상대방 또는 적의 인권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신념을 거부하며 전쟁제도에 반드시 필요한 '적(enemy)'의 개념을 극복하게 만든다. 따라서 폭력 초월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의 비군사화이다. 폭력의 허용은 폭력을 승인하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넷째는 생태학적 공동체(ecological community)에 대한 비전 즉 포괄적이고 진정한 지구적 안보에 대한 비전이다. 여성들은 생태학적 균형과 생물권의 건강이 유지되는 세상을 꿈꾼다. 여성학자들은 생태학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성들이 키워온 돌봄의 가치, 포용, 공정성, 비폭력, 상호성의 가치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은 또한 생태학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에 쓸 자원을 시민적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경제적 전환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사회발전을 위한 경제적 전환과 평화만들기의 과정으로서의 군축이라는 두 과제는 세계 인간공동체를 위한 주요 토대라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평화체제를 목표로 한다면 폭력과 강제력의 감축을 추구하는 군축은 그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여성들은 '전환시나리오(transition scenario)'를 의도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전환시나리오란 여성들의 평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느 시점까지 평화체제를 이룰 것이란 목표 아래 군축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짜는 노력이다. 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꿈의 계획이다. 여성들은 이미 1899년 헤이그 세계평화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2100년에는 세계인권헌장과 지구협약에 기초한 지구적 평화체제 제도화 계획을 짜놓고 있다(지구에 사는 인간공동체에 관한 세계대회를 열어). 이들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적어도 2050년에는 비폭력조약(Nonviolence Accord)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비폭력적인 사회질서가 평화체제기능으로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며 22세기초까지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창안해 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있다. 이미 인류는 20세기에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을 불법화하는 진보를 성취한 것을 보면 이 꿈은 단지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4. 한반도에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상 살펴본 세계 평화운동의 조류 속에서 오늘 한반도에 사는 여성들은 어떤 평화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에 사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가부장제사회와 군사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한 우리는 세계 여성들의 평화 전망과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한반도의 사회, 경제, 정치적 조건에 의해 조건화되는 한 한국여성들은 거기서 유래되는 특수한 평화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 특수과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유교문화권, 한반도의 분단상황,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에서 파생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둘러싼 과제들일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개해온 한국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다양한 여성평화과제(차별철폐과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한국여성운동의 성과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확장시켜왔다는 점에서 적극적 개념의 평화운동이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이나 무력갈등을 둘러싼 소극적 개념의 여성평화운동(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제외하고는 여성운동의 주류에서 비껴서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여성들은 앞으로 여성 평화운동을 진척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 분단폐해를 극복하고 통일을 여는 과제

(1) 분단상황은 한국민족 전체가 걸머진 명예다. 분단은 가족과 동포를 처부쉬야 할 '적(enemy)'으로 규정하게 만들어 남북 양쪽에 적대의식(냉전의식)과 심리구조를 형성시켜 왔다. 이런 질곡아래 1000만 이산가족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 서로를 적대하는 냉전구조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힘을 크게 소진시키고 있다. 우선 생산과 실업구제, 국민복지에 사용해야 할 엄청난 국가 예산을 파괴적인 군비로 소모한다. 의무적인 군복무는 남북한 젊은이들의 생산적인 활동과 창의력의 증진과 민주적인 사고를 제한한다. 남북갈등은 사회전반에 인권, 정의 평화, 민주주의, 관용, 투명성, 인간 안보, 생태보전, 평등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후퇴시킴으로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게 만든다. 국제사회의 신용도 하락과 전쟁위협은 해외 투자자들의 발길을 막거나 투자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경제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다. 남북갈등으로 인한 이 같은 소모전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중국에는 민족 생존을 위협받게 만든다.

(3) 또한 분단상황은 군사주의 문화를 형성, 지속시킴으로써 가부장제를 강화하고 사회발전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군사주의 문화는 '타자를 지배하는 힘'의 이데올로기며 남성의 힘에 중심을 둔 제도다. 군사주의는 가부장제 논리를 구

현함으로써 여성들의 가부장제 제거 노력을 방해한다. 또한 군사주의 문화는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과 무력사용을 옹호하며, 폭력을 분쟁해결의 합법적 수단으로 옹호한다.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가정폭력, 성폭력은 이런 군사주의 문화에 뿌리를 대고 있다.

(4) 분단폐해는 여러 형태의 인권의 침해를 낳았다. 분단으로 인한 사상적 대립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초래하여, 이 땅에 수많은 이념적 피해자를 양산, 그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 넣었으며 여성들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자 운동도 좌익운동으로 간주, 탄압을 받았다.

(5) 군사주의는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자연에 대한 강간도 일삼는다. 주한 미군을 비롯해 거대한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은 자연을 오염시키고 자연의 생명권과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련 지역이 지뢰밭이 되고 있으며(현재 한반도에는 약 100만개의 대인지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군인은 물론 나물 채취에 나선 민간인들도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매년 찾아드는 수해는 군 시설 부근에 매설된 지뢰를 이동시키고 있어 다중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6) 군사주의는 성의 상품화도 촉진시킨다. 미군기지를 둘러싼 기지촌에는 미군을 위한 여성들이 성적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군은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의 실체이며 불공정한 한미군사협약으로 미군은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이런 환경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심리적 폭력, 강간, 구타, 살해 등 잔혹한 범죄를 당해도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⁵⁸⁾ 기지촌여성들이 겪는 직업적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힌 이들의 인권은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성적, 인종적, 계급적, 국가적, 군사주의적인 불평 등을 복합적으로 당하는 중층적 희생자들이다.

(7) 분단은 외국군대(미군)를 주둔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비와 각종, 환경오염, 그리고 무고한 양민학살 등 및 각종 사회범죄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8) 분단은 불공평한 한미행정협정 등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훼손시키는 폐해도 낳고 있다. 정부가 지난 40 여년동안 노근리 학살 등 10 여곳에 대한 미군의 양민학살을 덮어온 것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그 한 원인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분단의 폐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사회의 통합과 통일을 여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를 통해 남북여성 교류의 물꼬를 열었던 한국 여성들(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의 노력이 그대표적 예다.

58) 1992년 10월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윤금이 사건, 1993년 미군에 의한 김국혜 폭행사건, 1994년 윤현아 폭행사건, 미군납편에 의해 두 자녀와 함께 살해된 김분임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그것들이다.

2) 동북아의 평화를 조성하는 과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1999년 5월 24일,⁵⁹⁾ 일본은 자신들의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세 가지 법을 통과시켰다.⁶⁰⁾ 이 법들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다시 체결한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한 조치들인데,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이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후 일본국회는 다음 수순으로 평화헌법 개정에도 착수하고 있다. 요컨대 자위대의 해외 파병, 전투참가에 대한 헌법의 제동장치를 없애려는 시도다. 국회는 이밖에도 일장기와 기미가요도 최근 일본의 국기, 국가로 법제화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까지 4만톤급 경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는 계획을 마련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자위대가 항모전투단을 가지면 태평양을 주무대로 미해군처럼 본격적인 해상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한다. 미일 전역미사일방위체제구상 공동연구계획도 세우고 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들이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으로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 핵발전소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들어올 플루토늄 양은 일본이 2010년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 정도 분량이면 핵폭탄 44-6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이 보유중인 플루토늄 총량은 54톤으로 전세계 보유량의 4.5%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대만해협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2국가론 발언이후 중국과 대만사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양안간 전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본토 내에서 신형 모델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전역미사일방위체제(TIM)구상, 한반도 문제, 그리고 타이완 문제가 현재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중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사회가 긴장완화 쪽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이 지역은 다시 군비경쟁과 갈등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가 깨질 때 그것이 여성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짓밟는지는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의 역사가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⁶¹⁾. 일본은 아직도 정

59)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 이래 세계 여성들이 군축과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키고 있는 날이다.

60) 이날 통과된 법들은 <주변사태법>, <자위대법의 일부 개정안>, <물품 및 역무상호제공협정개정안(ACSA)> 등 일미방위협력지침(new guideline) 관련법들이다. 이 법들은 한마디로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는(오자와 이치로 자유당수) 길을 연 것이다.

61) 현재(1998년 12월) 한국에는 155명의 생존자들이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기다리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있으며 할머니들은 자꾸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있다. 1993년 이후 31명의 할머니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 전후처리보상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재무장의 수순을 밟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은 곧 동아시아의 무기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미일군사동맹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 기도는 북한을 압박할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악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의 평화 유지는 한반도 여성들이 지고 가야 할 중요한 평화과제다. 미일가이드라인(new guideline)을 여성들의 피스라인(women's peaceline)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평화여성회와 일본여성들의 계획이 바로 동북아평화를 위한 구체적 운동의 하나다.

3) 군사안보를 인간안보로 전환시키는 과제

안보(安保, security)란 안전보장의 준말이다. 사전적 의미는 ‘편안히 보전함’이다. 안보는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일생 별탈없이 안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전쟁과 무력갈등이 많은 시대와 세상에서는 적의 위협이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며 따라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체가 군대다. 우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는 군대의 안보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런데 탈냉전시기를 맞으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른바 경제전쟁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적 폭력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상황처럼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전시처럼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대규모 실업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북한의 참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쓰는 그 많은 돈으로 백성이나 먹이지 쪼쪼.....’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환경악화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전쟁이 없는데도 환경적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규모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거나 불구자가 되고 있다. 안보를 지키는 군대가 있지만 국민의 안전한 삶(안보)이 보장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는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며 전쟁준비에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평화운동가들과 여성들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국민의 안보가 군대만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산을 파괴적인 전쟁준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해야 하는가? 이는 군대만을 위한 안보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을 인간중심의 안보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평화운동계의 최근 동향은 이제 우리상황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 주민은 굶주림으로 남한 주민은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가 경제전쟁, 문화전쟁으로 국가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남북은 대결을 지속하며 군비경쟁에 막대한 국가자원을 낭비하며 미래 국민의 안전을 외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도 어떤 것이 진정으로 미래 우리 자손들의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안보개념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군사비를 줄이고 복지비를 증가시키라며 남북의 군축을 제안하는 여성들과 평화연구자들의 노력은 바로 군사안보를 인간안보로 바꾸려는 구체적인 평화노력이다.

4) 비폭력과 평화문화를 조성하는 과제

우리사회에 만연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왕따문화 등 여성들은 직간접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가부장제와 분단상황에 기생하는 군사주의 문화는 우리사회 폭력문화를 조장해 왔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security)을 위협하는 이 폭력 문화를 비폭력과 평화문화로 바꾸는 과제 또한 중요한 평화과제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2000년을 ‘세계 평화문화의 해’로 정했다. 이를 위해 평화여성회를 비롯해 많은 평화단체들이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바꾸자는 1억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서명용지는 2000년 9월 14일에 열리는 ‘밀레니엄 유엔 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 서명운동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당국자에게 주는 호소문이나 청원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자 평화문화를 위해 무엇인가 하나를 실천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운동이다. 이 서약에는 ①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②적극적으로 비폭력을 실천한다. ③내 시간과 물질적 자산을 이웃과 나눈다. ④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한다 ⑤지구를 보전한다. ⑥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이런 평화의식확대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사회운동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비폭력적 갈등해결 훈련 등을 포함한 평화교육을 각 교육단계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헤이그 세계 평화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의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학교가 평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을 채택했다. 이를 위한 주요 캠페인으로 ①초중고 학교와 교사교육에 평화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②대학에서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을 기본과목에 포함시키고 법대에서 국제법을 기본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등을 설정했다.

미디어를 평화문화 확산과 평화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과제다. 미디어가 갈등상황이나 전쟁에 대한 객관적 보도와 비선동적 보도 방식을 선택하도록, 미디어가 전쟁과 폭력을 부추기기보다는 평화문화를 형성하는데 봉사하도록 시민사회는 미디어를 자극하고 훈련해야 한다.

5) 평화영역(국방, 통일, 외교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

특히 여성들의 평화노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의 하나는 국방, 외교, 통일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사실이다. 통상 국방, 외교, 통일분야는 여성과 무관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그들의 정책결정이 여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평화영역에의 여성배제는 여성의 관점과 평화노력이 반영되지 않으며 정책결정에서 인구의 절반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평화정책에 여성들의 평화적 관점과 능력을 반영시키는 과제는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삶(안보)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다. 최근 국방부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구현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와 기여를 확대하는 일은 한반도의 무력갈등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주요한 평화과제다.

6) 여성평화세력을 형성하는 과제

국방, 외교, 통일분야가 여성과 무관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고 평화에 대한 뚜렷한 상을 갖지 못한 우리사회의 척박한 풍토에서 평화운동에 뜻을 둔 여성들은 매우 소수다. 따라서 평화, 통일분야에 여성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과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많은 평화연구자들과 여성학자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관계적 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을 특별히 훈련받아온 여성들의 특성을 이제는 평화 확장의 자원으로 활용할 때라고 강조한다. 학교폭력거부운동이나 군폭력 추방운동, 평화교육운동 등과 같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운동방식(느슨한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여성들을 평화세력으로 조직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5. 맺는 말

모든 국가들은 오랫동안 국민의 안전(안보, security), 인권(human rights), 발전(development), 그리고 평화(peace)가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20세기를 지나면서 국가들은 이런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실패해 왔다. 인류는 더 파괴적이고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은 발전시켜 왔으나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평화능력을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해 왔다는 것이 세계시민사회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계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제적인 평화정책결정을 정부들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제관계나 국내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5월(1999)에 열린 헤이그평화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질서 확립을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 중의 하나로 '모든 국가

는 정부와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공동협력을 보장하는 신외교(new diplomacy)를 수용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안보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영역일 수 없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세계대인지뢰금지운동이 입증하는 대로 실제로 민간운동은 안보문제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들의 정책을 바꾸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입을 실천하고 있다. 21세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실패와 유엔역할의 한계가 명백해지고 민간단체들의 성공적 활동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21세기는 민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리라 전망이 지배하고 있다. 세계대인지뢰금지운동을 주도해 온 이는 5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러나 그는 컴퓨터 한 대로 안보에 관한 세계 정책을 바꾸어 내는 세계 평화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대인지뢰금지국제협약을 이끌어낸 공로로 1997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제 안보와 평화문제는 더 이상 남성들이나 정부의 고유영역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들과 어린이 그리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우리들이 개입해야 할 우리 모두의 영역이다.

전쟁은 엄청난 준비와 훈련을 통해 이뤄집니다 !!!!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듯 평화를 준비하십시오 !!!!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쟁을 훈련하듯 평화를 훈련하고 만드십시오 !!!!

<세계 여성평화운동의 역사>

세계 여성평화운동의 역사는 1900년에 "'힘의 정의'에 반대하고 '정의의 힘'을 추구하자."고 말했던 M.L.Selenka와 1911년에 "인간 생명체가 여성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던 Olive Schreiner, 그리고 'Lay down your arms'라는 책을 써서 노벨이 평화상을 제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 Berthe von Suttner 등 여성평화운동의 선구자들을 얘기할 수 있다. 여권신장만의 편협성을 띤 것이 아닌 인류 보편적 정의를 위한 여성운동이 우리 여성평화운동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있는데 평화의 소극적 정의는 군사주의를 비롯한 폭력이 없는 상태이나 적극적 평화의 정의는 대일 화이트가 말했듯, '굶주림을 만들어 내는 체제', '전쟁을 만들어 내는 체제', '사막을 만들어 내는 체제', '지배 체제'를 막아내는 것으로 이에 따른 평화운동이란 빈곤, 군사주의, 환경위기,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또한 전쟁폐지운동, Women's peace party(1915)창당, WILPF(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

여성 연맹, 1919)창립이 등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독자적 평화운동과 그 성과인 전쟁반대, 군복무반대, 아들군대안보내기운동, 전쟁봉사거부권 획득 등이 있다.

다음은 반전이론을 발달시키며 양심적병역거부운동의 모태가 된 케이커 종교와 'Three Guineas'라는 책에서 가부장제-파시즘-전쟁의 상관성(힘을 원천으로 지배체제를 구축)을 이야기한 버지니아 울프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운동. 이는 1960년대 미국의 월남전쟁반대운동과, 1980년대 Greenham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저항한 여성운동 등이 있는데 그린햄의 여성들은 10일간의 평화대행진을 벌이고, 그 후에도 공군기지 앞에서 상주하며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크루즈 미사일 배치를 막고자 했다.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났으나,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을 생성시키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린햄의 운동은 여성운동의 뉴모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그 의의를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집을 떠나 운동할 명분을 찾았다는 것, 둘째 여성들만의 분노를 토해낼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 셋째 평화의 포괄적 개념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 넷째 '독립적인 여성'을 경험한 계기였다는 것, 다섯째 '자매애' 경험의 계기였다는 것, 여섯째 산업사회 이전의 'Simple life'로 되돌아갔다는 것, 일곱째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 발전이라 할만한 리드미컬한 물결이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성자치구를 형성하여 운영했다는 것 등이다.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은 군사주의와 관련해서 이루어낸 업적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정신대문제를 유엔인권위에 상정시켜 일본의 패소를 받아낸 일을 모범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군축운동을 전개하며 왜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인식시킨 일,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배상운동의 반전반핵운동, 마지막으로 오늘의 평화여성회가 있게 한 남,북,일 여성 교류에 따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계승과 남북여성교류 활동 등이 있다.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 이슈는 북미갈등, 남북갈등, 북한내부의 모순 상황을 들 수 있으며 한미공조, 민족공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정전협정은 북-미간에 체결되어 있고 전시군사작전권이 미국 측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남북당사자 주도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남북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김영삼 정부 때 통미통남 정책을 폈던 북한과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정상회담, 북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미국이 북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교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동북아지배와 군수산업유지를 위한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주의를 해소해야 하며 하루 빨리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어 SOFA에 의한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